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저자

장창석 · 임다정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하는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호응을 받고 있지만, 구성과 운영, 활성화에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어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73.6%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추진된 최근 몇 년간 양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어내었으나,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서는 충청남도의 일반현황에서 나타난 추세들이 반영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0.32%에 불과해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주민자치회 별로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업발굴 단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역량이나 특성에 대한 발전적 측면에서 한계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가장 필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재정적 부분의 실태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예산중 위원수당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운영중인 곳은 15개소였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개선 방안 도출 인식 분석 결과에서는 주민들은 현재 주민자치회의 제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민자치회에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행정의 주민 중심도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모델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능에 대한 응답은 ‘주민자치사무’의 수행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협의사무’, ‘위탁사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과위원회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분과위원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확보’,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확보’,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 ‘주민자치회원(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 개선,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재정적 운영지원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 정책 제안

이에 본 연구에서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 개선,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재정적 운영지원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 개선에서는 변경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과 개정과정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2023년 제7차 표준조례를 발표하였다. 충청도내 15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7차 표준조례에서 수정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가 정부의 표준조례를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안들을 반영하고 행정과의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현재 제시된 표준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자치단체에서 단순히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따른다면 지역의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은 기존 동네자치 중심의 모델

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관기관, 주민, 주민자치회 위원간의 논의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도시형, 농촌형, 혼합형 등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난 5년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주민자치회에 예산과 운영방식 관리 등의 지원을 통해 충청남도내 주민자치회의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성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발판으로 한 시군형 특화모델의 발전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소수로 이들 지역의 전환을 위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행정환경의 변화로 과거 5년간처럼 예산이나 관리등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민자치회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식을 통한 주민자치회 전환 유도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주민자치회 구성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개선 모델은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기본모델, 운영을 위한 세부모델로 제시하였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기구로 참여자만이 아닌 지역주민, 지역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참여시킬 수 있는 장으로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유사 주민지원 사업의 실태파악을 통한 사업의 조정을 제안하였다. 시군 주민자치회에서 수행중인 사무들은 대부분 주민의 호응도가 높거나 지역내의 현안의제 중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겸직, 타 유관단체와의 관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미처 파악되지 못한 중복성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수행사무는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성 사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 분야나 규모를 조정하고 실제 주민의 요구도, 관심도가 높은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운영지원 개선을 위해 차별적 운영과 통합적 관리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은 선정된 주민자치회에 일률적인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의 집행률은 낮아지고 위원 수당등의 지출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사업비에 대한 공모방식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회의 사업예산 중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으며 일회성 공모에 그치고 있어 지속성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 지원 방식들은 규모도 작고 주민자치회의 고유 예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공모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예산 지원기간을 다년화 하면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주민자치회 통합지원체계 마련

충남도내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요구사항중 하나는 주민자치회 간사의 운영과 이를 위한 비용지원이다. 주민자치회들은 정부의 표준조례에 근거

하여 간사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15개 주민자치회가 간사를 운영 중이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수준이 향상되면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커졌다. 하지만 표준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회 수행사무에 대한 정산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과 전담인력의 확보는 더욱 필요하다. 현재의 주민자치회 지원은 재정적 지원과 이를 통한 인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 및 관리체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현재의 간접지원 체계에서 직접지원체제로 전환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정산 업무는 쉽지 않은 업무일 것이며, 현재도 전담인력이 없는 다수의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도움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영역에 대한 외부 조력자 협력, 주민자치회 내부 고용이 쉽지 않다면 통합체계에서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시군별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많고, 주민자치회 전담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인력, 사회복지요원 등 가용한 인원과 예산을 파악하여 시군과 함께 예산 지원과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의미와 역할을 감안한다면 관 주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우려될 수 있으나, 주민자치회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통합적관리가 이루어진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다면 주민자치회 역량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1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정책 변화	13
1. 주민자치회 관련 이론	15
2.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 변화 검토	20
3.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37
4. 시사점	60
제3장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태 분석	63
1. 충청남도 일반현황 및 주거특성 분석	65
2. 충청남도 주민자치 제도 분석	81
3.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88
4.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인식 분석	122
제4장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및 운영 방안	155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실태 분석 결과	157
2.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및 운영 방안	16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1. 요약 및 결론	173
2. 정책제언	176
참고문헌	177
부록	179

표 목차

〈표 2-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	22
〈표 2-2〉 중앙정부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24
〈표 2-3〉 포천시 주민자치회 모형 구분	58
〈표 2-4〉 포천시 분과위원회 기능별 접근에 따른 유형화	58
〈표 3-1〉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	65
〈표 3-2〉 충청남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67
〈표 3-3〉 충청남도 인구 및 세대수 변화(과거 5년간)	68
〈표 3-4〉 충청남도 외국인 인구 현황	70
〈표 3-5〉 현재 주택 유형	71
〈표 3-6〉 현재 주택 점유 형태	72
〈표 3-7〉 현재 주택 거주 기간	73
〈표 3-8〉 이사경험 및 이사횟수	74
〈표 3-9〉 가구원수	75
〈표 3-10〉 가구주 성별	76
〈표 3-11〉 가구주 연령	77
〈표 3-12〉 가구주 교육수준	78
〈표 3-13〉 가구주 직업	79
〈표 3-14〉 타 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현황	81
〈표 3-15〉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82
〈표 3-16〉 충청남도 시·군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현황	84
〈표 3-17〉 주민자치회 유형별 비교(행안부형-충남형)	91
〈표 3-18〉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사업 주요 내용	92
〈표 3-19〉 2021년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절차	93

〈표 3-20〉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94
〈표 3-21〉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유형(모형) 현황	95
〈표 3-22〉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참여 위원수 및 비율	96
〈표 3-23〉 2022 충청남도 시군별 주민자치위원 성별 구성 현황	97
〈표 3-24〉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별 구성 비율	98
〈표 3-25〉 충청남도 시·군별 주민자치회 위원 직업별 구성 비율	99
〈표 3-26〉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위원 타 주민조직 겸임 현황	101
〈표 3-27〉 2022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102
〈표 3-28〉 2022 주민자치회 공모 사업 추진 실적	106
〈표 3-29〉 2022 시·군 주민자치회별 수행 사무	111
〈표 3-30〉 2022 충청남도 주민자치회별 예산액	116
〈표 3-31〉 설문조사 개요(안)	122
〈표 3-32〉 응답자 정보	124
〈표 3-33〉 현 주민자치회 만족도 및 중심도 빈도 분석	126
〈표 3-34〉 주민자치회 성격 인식 빈도 분석	127
〈표 3-35〉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성격 인식 차이	128
〈표 3-36〉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 관계성 빈도 분석	129
〈표 3-37〉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 관계성 인식 차이	130
〈표 3-38〉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성 빈도 분석	131
〈표 3-39〉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 인식 차이	132
〈표 3-40〉 주민자치회의 당면 문제점 빈도 분석	133
〈표 3-41〉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당면 문제점 인식 차이	135
〈표 3-42〉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 발전 방향 빈도 분석	136
〈표 3-43〉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발전방향 인식 차이	137
〈표 3-44〉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 응답 빈도	138
〈표 3-45〉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 인식 차이	140
〈표 3-46〉 주민자치회 필요 분과위원회 인식 빈도	141
〈표 3-47〉 지역에 따른 주민자치회 필요 분과위원회 인식 차이	142

〈표 3-48〉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개선방안	143
〈표 3-49〉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인식 차이	145
〈표 3-50〉 주민자치회 재정확보 방안	146
〈표 3-51〉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재정확보 방안 인식 차이	148
〈표 3-52〉 주민자치회 위원의 중요 역량 및 덕목 인식	149
〈표 3-53〉 향후 주민자치회 만족도 예상 인식	150
〈표 3-54〉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만족도 인식 차이	152
〈표 4-1〉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주요 내용	163
〈표 4-2〉 충남형 주민자치회 세부모형 비교표	164

그림 목차

[그림 2-1]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23
[그림 2-2] 서울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38
[그림 2-3]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요 기능	39
[그림 2-4] 세종시 읍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41
[그림 2-5] 세종시 면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42
[그림 2-6] 세종시 동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43
[그림 2-7] 경기도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모형	45
[그림 2-8] 경기도 도시형 주민자치회 모형	46
[그림 2-9] 경기도 도농복합형 주민자치회 모형	47
[그림 2-10] 경기도 APT형 주민자치회 모형	48
[그림 2-11] 경기도 주택형 주민자치회 모형	49
[그림 2-12] 경기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 모형	50
[그림 2-13] 경기도 혼합형(APT와 주택 등) 주민자치회 모형	51
[그림 2-14] 광주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54
[그림 2-15] 포천시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57
[그림 3-1] 충청남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67
[그림 3-2] 충청남도 인구 및 세대수 변화	69
[그림 3-3] 충남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형	90
[그림 3-4] 현 주민자치회 만족도 및 중심도	126
[그림 3-5] 주민자치회 성격 인식	127
[그림 3-6]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 관계성	129
[그림 3-7]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성	131
[그림 3-8] 주민자치회의 당면 문제점	134

[그림 3-9]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 발전 방향	136
[그림 3-10]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 응답	138
[그림 3-11] 주민자치회 필요 분과위원회 인식	141
[그림 3-12]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개선방안	144
[그림 3-13] 주민자치회 재정확보 방안	146
[그림 3-14] 주민자치회 위원의 중요 역량 및 덕목 인식	149
[그림 3-15] 향후 주민자치회 만족도 예상 인식	151
[그림 4-1]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기본 모형	163
[그림 4-2]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도시형 모형	165
[그림 4-3]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혼합형 모형	166
[그림 4-4]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농촌형 모형	167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실시과정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서인석·윤병섭, 2018). 핵심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기 지역의 현안과제를 자주적인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있다(이병렬·이종수, 2015).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안전부는 시범지역을 선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만들었고, 전국 읍·면·동중 시범운영 대상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 중심의 이러한 주민자치회 적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자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지방정부나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나 주민자치의 실현은 미흡하다. 곽현근(2015)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여전히 주민자치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충분한 담론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시범실시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적용이 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모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설정하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15개 균형발전 과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의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15개 국정과제의 하위 과제로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76개 실천과제중 지방분권 강화 과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이 실천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에서 필요한 주민협의 기관화, 행정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사무 및 재원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등 관변단체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순수한 민간의 역량으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것은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행정과의 협력 및 공공재원 활용 등의 관 주도 마중물 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동(축제, 주민주도 사업 등)에 있어서 순수한 주민역량으로 활동을 지속시키며 자치역량을 전인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그동안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참여 욕구 증대 등 시대적 변화, 도정 참여에 대한 도민 열망에 맞춰 주민참여 실질화 방안 필요하다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하지만 지원 과정의 노력에 대한 성과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의 기회는 확대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 부족이나 역량부족, 기타 문제들로 인해 지원의 취지와

는 다르게 행정에 대한 수동성, 의존성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주민자치회의 실행, 실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역시 자체 사업을 통한 수입의 창출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한 시범실시에서 전면실시가 예상된다. 이에 향후 정부방침에 부응하여 충청남도 환경여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화, 농촌화, 복합화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15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이 지역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참여하고 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구성지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 확대운영에 대비하여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운영사례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행안부형, 충남형 등으로 추진되어 온 충청남도내 주민자치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분석은 없는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정책이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 실태 파악은 충청남도의 지원 정책의 성과와 타당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지원정책의 방향성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단일화되어 운영중인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이 실시지역에

서 어떠한 인식과 문제점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토, 타 지역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 모형의 개선 필요성과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정책, 제도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의 역할과 이관 사무 분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와 유관단체, 공동체 간의 협력에 기초한 분과 구성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운영에 대한 인식분석, 의견수렴을 통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중·장기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참여자별 역할과 행동 전략,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충청남도의 전략적 지원 방안과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정책활용 및 기대효과

충청남도는 광역지방정부로써 도내 15개 시·군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중에 있다. 주민자치의 실질적 확대와 참여인식 확산을 마중물 사업이 주로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추진 이후 충남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대비한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 모델 개선 및 지원 방안,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 모색 등 충청남도의 역할 명확화와 참여 민주주의 촉진 및 자치분권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운영과 지원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의 보완과 제도적 변화, 운영 방향 마련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한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지원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대상 사업들은 2022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비교대상으로 과거 5년간(2018년~2022년)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 범위는 2023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조사 및 정책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충청남도의 정책지원, 통계자료의 분석은 자료 수집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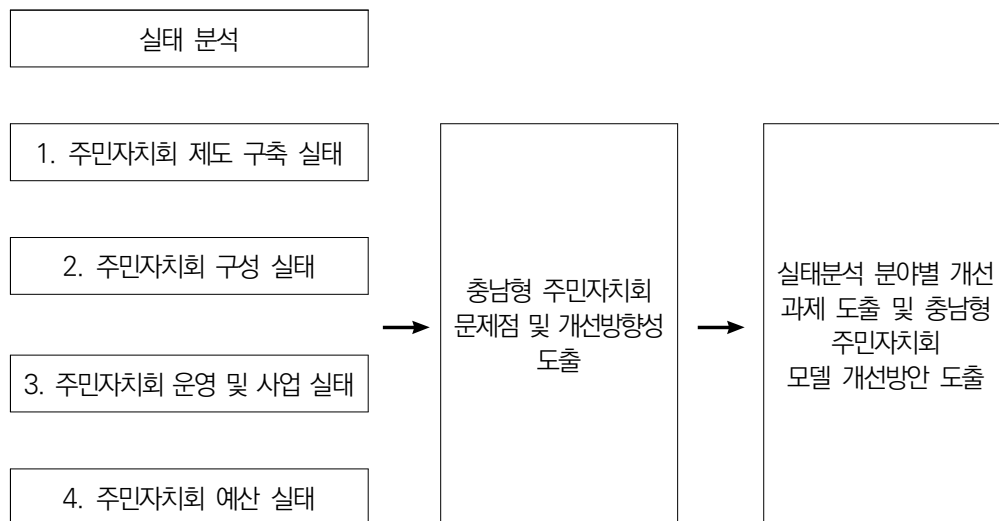
(3)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충청남도내 15개 시군의 특성은 다를 수 있어 가급적 모든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하였다.

(4)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과 운영 실태분석을 통하여, 충남도의 역할 재정립과 정책지원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의 및 기능과 역할, 제도화 과정 및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모형과 운영과 관련된 사례조사를 통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실태 및 인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초 통계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제도적 기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주민인식도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충청도, 시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대상과 개념 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현 정부의 주민자치(위원)회 개선 정책의 특성과 추진방향, 충청남도 민선 8기 주민자치 지원 정책 검토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과 추진 과제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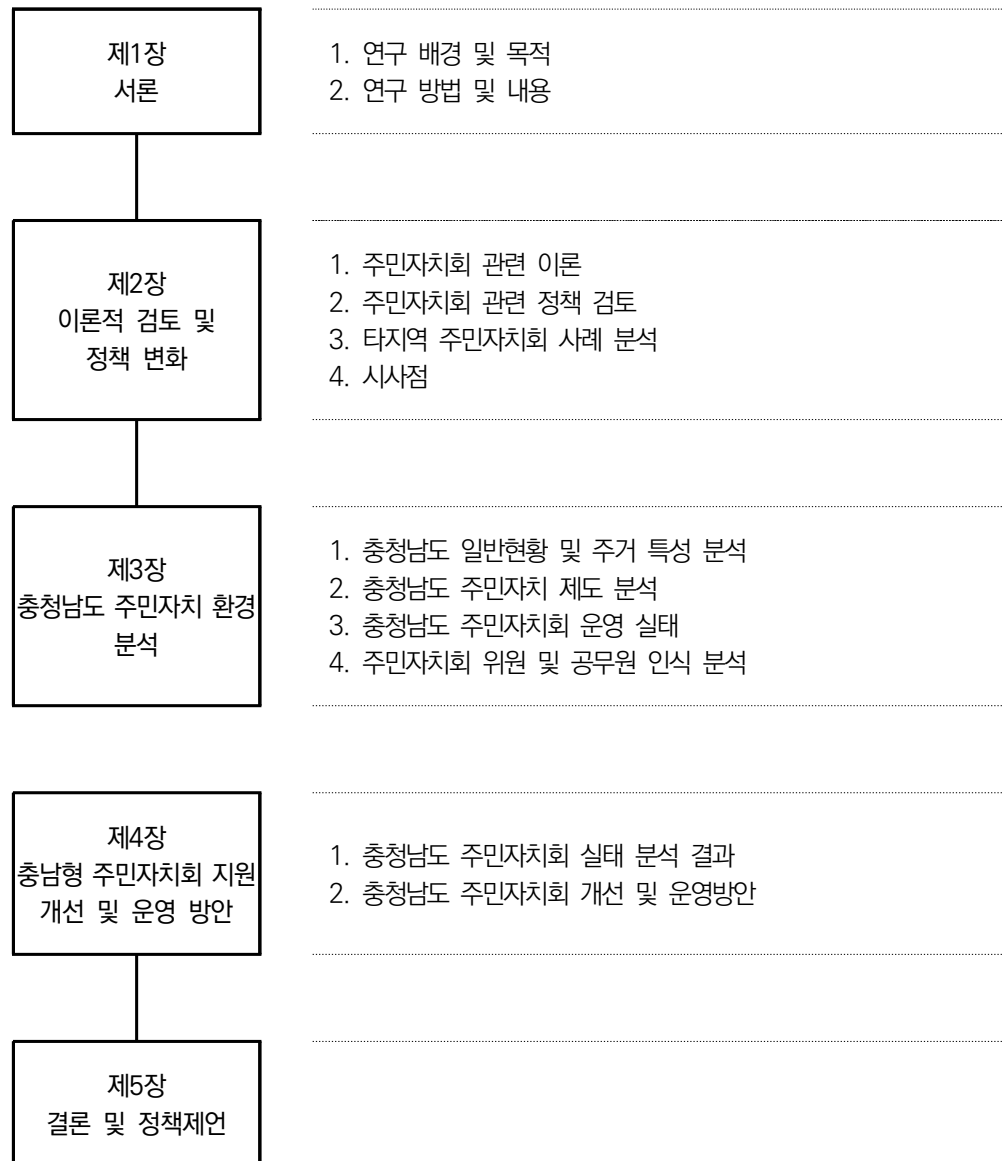
(2) 사례조사

국·내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모델 구성 및 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설문조사 및 워크숍(인터뷰)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사업수행 단계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 분석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여, 충청도가 추진해야 할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개선과 전략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연구체계



3. 선행연구 검토

주민자치회의 개선과 운영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주민자치회 구성 초기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익섭(2012)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모델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안현찬·구아영(2016)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상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실행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용환 외(2019)는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활용가능한 모델을 도출하였으나, 광역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로써 실제 실행 방안까지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김흥주(2022)는 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하여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제안하고, 모형별 적용가능한 사무들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모형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충남의 여건과 실태를 반영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향성 도출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의 현실에 부합하는 전략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변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연계가능한 주민자치 전략과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심익섭(2012) · 연구목적: 주민자치회 모델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회 논의의 활성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비교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3유형(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 비교평가 ·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실시 관련 검토 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 · 연구자(년도): 최근열(2015) · 연구목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비교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모델 비교(기능, 구성과 운영 등) ·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상과 추진전략 · 연구자(년도): 안현찬·구아영(2016) (서울연구원) · 연구목적: 서울시 동단위 주민자치 사업들의 중복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연계 효과제고를 위한 주민자치회 모델 구상, 실행전략과 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심층면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동단위 주민자치 사업 제도 분석 · 주민자치 참여자 의견 분석 · 타지역 사례분석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실행 전략과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이용환 외(2019)(경기연구원) · 연구목적: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 모색과 주민자치회 전문 인력 양성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심층면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 특성과 주민자치회 사례분석 ·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김흥주(2022) (대전세종연구원) · 연구목적: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에 따라 신도시, 구도심,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한 주민자치의 효능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분석 · 통계분석,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분석 · 주민자치회 인식 분석 ·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 제안

제 2 장

이론적 검토 및 정책 변화

1. 주민자치회 관련 이론
2.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 변화 검토
3.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4. 시사점

1. 주민자치회 관련 이론

1) 주민자치의 정의

주민자치는 주민과 자치로서 구성된 단어이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로서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는 특정지역으로서의 지방이 또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림을 의미한다(김병준, 2011).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자치라는 용어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에 대한 관심속에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또한 자치는 최근 동네자치, 마을자치, 풀뿌리자치, 생활자치 등의 용어로 불리면서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 주민사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주민참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활동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는 자치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잘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며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자치는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지역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민주성을 띠어야 한다는 이념이 강조된 것이다(박영득 외, 2019).

주민자치의 목적은 지역 내의 사무가 처리되는 방식이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역의 사무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정치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여 지방 정치권력의 행사가 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자치는 단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 이상이다(박영득 외, 2019).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반 행동에 나설 때 이루어진다(김필두 외, 2014).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이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곽현근, 2015). 지방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지방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단위에서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주민자치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윤영근 외, 2018).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내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해결이 아닌 동네나 공동체 등 집합되거나 조직된 형태의 집단적 행태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행태들은 민주주의의 담론 차원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정치개혁만으로는 민주성결함을 치유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대안적 민주주의의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넓은 의미에서의 주민참여와 과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동네나 공동체 같은 작은 단위에서의 주민참여 모습과 연계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주민자치는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단순한 개인수준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집합적 또는 집단적 행위의 의미를 내포한다(곽현근, 2015). 주민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지역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주민주권에 따른 것이다(이병렬외,

2015). 주민들이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최근 우리사회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제도로 주민자치가 강조되었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자치기구로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신미애, 2018). 정부가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주민과 지역행정과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행정조직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갖는 모순과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근린생활기능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써의 주민자치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며,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네, 지역의 공동체이며 자치적으로 조직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주민자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박정윤, 2021). 원칙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순수한 주민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김필두, 2014). 특별법 제28조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

관인 읍면동을 지원하는 행정보조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일선 행정기구로서의 2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자치조직으로써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방의회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능면에서는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문제해결에 노력하고 가지고 있는 지위는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내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책결정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자,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지역문제해결을 함께 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실천적 활동 측면에서 지역의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제안, 심의, 의결 등의 활동을 하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증진과 대안의 탐색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인 관심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참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읍면동의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소통을 통한 공유, 공론화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의 증진과 참여를 위한 과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추진 중

인 다양한 사업들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소통과 협력이 단절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주민들과의 접촉을 빈번하게 하고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참여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지역 내 주민의 대표기구로써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환경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수단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등 내부 환경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등 외부환경이다.

2.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 변화 검토

1) 정부별 주민자치회 관련 주요 정책 변화

(1) 김대중 정부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도입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민의 정부는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구호 아래 ‘읍·면·동 기능개편’을 추진한다(김홍환, 2018).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한 100대 국정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1단계는 1999년 일반시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지역 278개 동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고, 2단계는 2001년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3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2002년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였다(최상현, 2016).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항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도 주민자치센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남재걸, 2015). 즉, 행정자치부는 2000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별표 1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

치·운영 업무를 시·군·구 사무라고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같은 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기존의 읍·면·동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남재걸, 2015).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명목상 운영책임자는 읍·면·동장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이며,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지원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주요 목적으로하고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명박 정부의 주민자치회 도입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0년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이다(최상현, 2016). 이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기능은 상실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역할만 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최상현, 2016). 다시 말해,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었다. 1999년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주민자치 기능 강화 측면보다는 문화·복지기능 강화 측면이 컸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에게 자치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김필두, 2014). 특히, 주민자치위원의 지역 대표성, 자치 역량, 적극적 활동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었다(김필두, 2017).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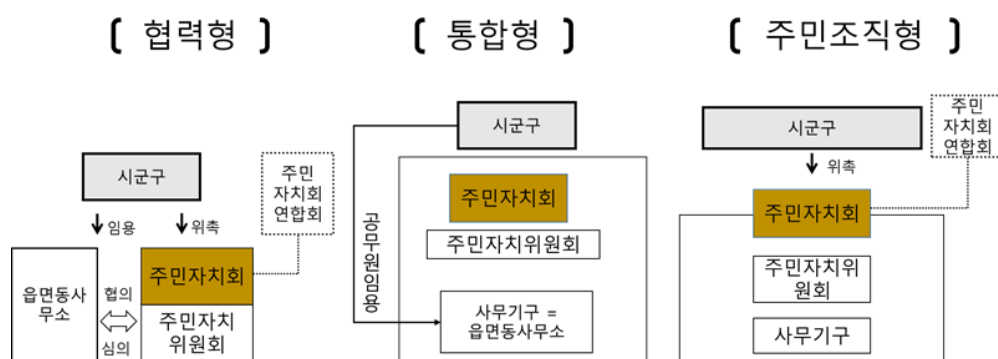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모집하여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예결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기능을 부여하였다(행자부, 2013). 사전협의 업무는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혐오시설 설치 주변 주민간 의견 수렴 등이고, 위탁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원·공중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 등이다. 주민자치 고유 업무는 마을 소식지 간, 자율방범 및 안전 귀가활동 등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였다.

〈표 2-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상	-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행안부 승인)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결정 -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 주민자치 기능, 지방정부 위임·위탁사무 처리 - 주민생활 관련 사항 협의 및 심의
위원구성	-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접수	- 일정 주민자치 관련 교육시간을 이수한 지역대표, 주민대표, 일반주민 등 비율 고려, 공개모집 후 공개 추첨(대표성 확보)
위촉권자	- 읍면동장	- 시장·군수
재정	- 읍면동 지원금, 프로그램 수강료 한정	- 자체재원인 사업(위탁)수익,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
지방정부 관계	-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3) 박근혜 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확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자치모델로서 읍·면·동 사무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며 지역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다(행정안전부, 2013).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7월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운영 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더욱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에서 별도의 세칙으로 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조례에는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자격, 위촉, 임기, 해촉, 감시, 지자체와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원칙·절차, 임원, 세부기능(임무), 회의운영, 회계절차, 분과, 사업 계획, 총회, 재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하혜영, 2020).



[그림 2-1]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행정안전부는 3가지 모델 중 협력형 모델을 채택하여 2013년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각 지역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주민자치회는 그동안의 안정적 절차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별 주민자치회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기 구성에 정부에서 제안한 주민자치회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안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적인 특성과 주민참여도, 기타 여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제안된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고려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표 2-2〉 중앙정부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구 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법적지위		민간기관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하부 행정기관 공공단체 (법적단체)	민간기관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독립된 주민자치기관
기능		행정 협의 기능 주민자치 기능	의결기능 읍면동 행정기능	주민자치 기능 전담 행정기능은 자치단체 수행
구성	회원	주민전체 (가구단위)	주민전체 (가구단위)	회원제(자발적 참여) 회원으로 주민총회 구성
	위원	민간인	공무원 (정무/별정직)	민간인
	사무 기구	주민 (공무원 파견요청 가능)	공무원	주민 (공무원 파견요청 가능)
민관 협력	읍면동 사무소	존치 (행정기능 유지)	전환 (주민자치회 사무기구)	폐지 (지자체가 직접수행)
	지자체와 의 관계	읍면동과 연계, 협력 (협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요구 등)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관	시군구와 연계, 협력 (주민 의견제출 등)

(4)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추진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황의식 외, 2019). 이를 위해 ①주민주권 구현 ②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③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로 마을 문제 직접 해결, 그동안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전국 47개 읍·면·동)된 이후, 주민자치회에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현행 주민자치위원회(1999년 도입)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에 한정돼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주민생활 밀접 사무 협의, 위탁사무 처리,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읍·면·동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

고, 마을 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8개 항은 삭제되고 말았다.

(5)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회 변화

윤석열 정부에서는 6개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6번째 국정목표로서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등의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간 행정에서 필요한 주민협의 기관화 또는 권한·재원 등 관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순수한 민간의 역량으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순수 민간(주민)활동의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적은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회의 활동에 있어서 행정과의 협력 및 공공재원 활용 등의 관 주도 마중물 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가급적 공적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순수한 주민역량으로 활동을 지속시키며 자치역량을 견인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주민의 실행·실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역시 자체 사업을 통한 수입의 창출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주민자치회의 논의구조를 살펴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간 또는 주민-행정간 협의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입 초기인 주민자치회 역시 그 운영이나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이나 실무능력이 취약하므로, 이를 제고 시키기 위한 기존 분과위원회 또는 실행법인을 강화하려는 논의들은 지속되어 왔다.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2023.7.4. 시행)’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2021.1.1.) 시행’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법에서는 제2절(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과 위임사무, 수행 업무, 위원의 위촉과 신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으로 법령에 근거한 주민자치회의 전면실시가 아닌 시범실시를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 변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표준조례는 법령의 합치성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제공되며,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정에서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된다(최인수 외, 2020).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 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표준조례안을 변경하여 입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은 2013년 최초로 제정되었고, 2014년 1차 개정, 2015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 2018년 4차개정, 2019년 5차 개정, 2020년 6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 변화는 2023년 5월에 있었다. 2023년 7차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 1차~3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변화

최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2013년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목적(제1조), 정의(제2조), 운영 원칙(제3조), 설치 등(제4조), 기능

(제5조)), 제2장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민자치회의의 정수(제6조), 위원의 자격(제7조), 권한(제8조), 위원의 선정(제9조), 위원선정위원회(제10조), 주민자치회의의 장(제11조), 간사(제12조), 감사(제13조), 분과위원회(제14조), 운영(제15조)), 제3장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위원의 의무(제16조), 정치적 중립(제17조), 위원의 임기(제1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우(제19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제20조)),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22조)), 제5장 보칙(감독(제23조), 운영세칙(제2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차 개정, 2015년 2차 개정에서는 최초 표준조례에서 큰 변화 없이 세부적인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위원 자격 여부의 범위 확대, 위원선정위원회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일부 신설) 등 세부적인 내용 개정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단체보험 가입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2) 4차~6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변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4차 개정(2018년도)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하태영 외, 2021). 5차 개정(2019년도)에서는 주민총회의 참석 대상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동일하게 확대하였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는데, 큰 개정 사항은 없었다. 6차 개정(2020년도)에서는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비례성의 강화, 기능 및 권한의 (통합 등) 명확화, 주민자치회 참여의 활성화 및 연계 강화, 그리고 지역의 운영 자율성 존중, 투명성 확보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 7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변화

최근 발표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변화는 크게 8가지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중간지원조직 근거 삭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제9조)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시 공개추첨만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공개추첨 방식을 거치면서 참여가 제약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당연직 참여 필요하다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이 반영되었다.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공개 추첨 또는 선출하도록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이·통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되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당연직의 종류는 이·통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	개선안
<p>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② (생략)</p> <p>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p> <p>④~⑦ (생략)</p> <p>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⑨~⑩ (생략)</p> <p>〈신설〉</p>	<p>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지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음)</p> <p>〈삭제〉</p> <p>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p> <p>④~⑦ (생략)</p> <p>〈삭제〉</p> <p>⑨~⑩ (생략)</p> <p>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선정위원회는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p> <p>(※ 지역에 따라 이·통장 연합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p>

나)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제 9조)

기존의 조례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 교육과정(6시간)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나, 거리·교통 등 지역 여건과 학생·직장인 등 직업상 사정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여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 내용에서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최소 시간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항으로 이동되었다.

현행	개선안
제9조(위원의 선정)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또는 군수·구청장)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② <삭제>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⑨ <신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⑨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에 따라 교육 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

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제6조)

현재 표준조례에서는 30명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면서, 읍면동 별 다양한 현실과 지역 여건을 미반영하였다는 문제점에서 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 위원정수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현행	개선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지역에 따라 10명 이내, 20명 이내, 30명 이내 등으로 규정)

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제7조)

「지방분권법」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위원의 자격을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춘 자로 명확화하였다.

현행	개선안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p>(※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p> <p>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p> <p>〈삭제〉</p> <p>(※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마)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제12조)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시 필요한 행정사무 처리 등을 위해 도입된 간사 또는 사무국 운영에서 부작용(사무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회나 지역 사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간사로 채용 및 수당 지급)이 발생하여 주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유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단순 사무 처리보다 주민 중심으로 자치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지원 근거 삭제하였다.

현 행	개 선 안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 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제21조)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법인·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사업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보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주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단체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삭제 하였다.

현행	개선안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⑦ (생략) ⑧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⑦ (현행과 같음) 〈삭제〉

사)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제14조의2, 제14조의3)

현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서, 주민자치회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을 자율화하는 내용을 개정하였다.

현행	개선안
제14조의2(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제14조의3(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⑦ (생략)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아)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제22조의 2, 제23조, 제25조)

현재 주민자치회는 수탁사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주민자치회에서 불투명한 사업비 집행 사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회계감사 결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개율이 낮고, 운영세칙도 공개 대상 정보에 불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 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정산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다.

현행	개선안
<p>〈신설〉</p> <p>제23조(감독) ①·② (생략)</p> <p>〈신설〉</p> <p>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화장이 정한다</p>	<p>제22조의2(정보공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2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p>제23조(감독) ①·② (생략)</p> <p>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p> <p>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화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3.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1) 서울형 주민자치회

(1)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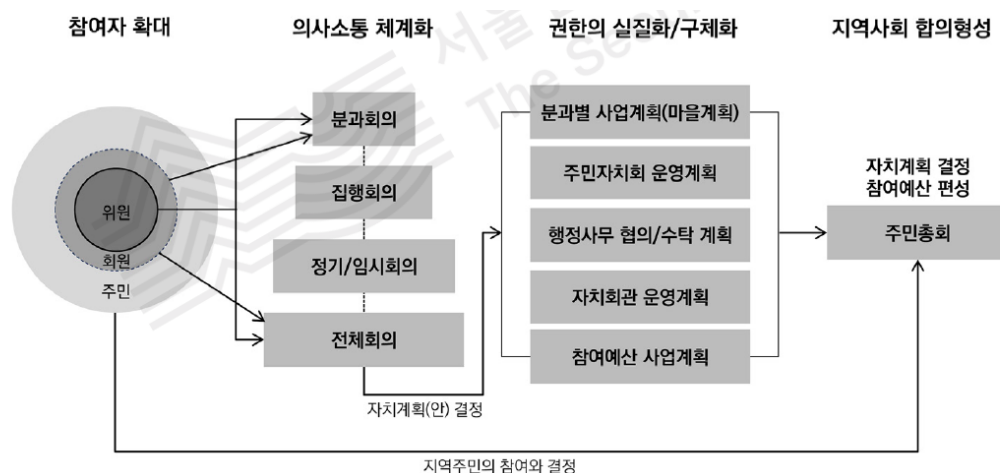
2017년부터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동단위 주민자치 사업들을 아우르는 제도적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의 표준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동단위 주민자치 사업들의 현황과 과제를 반영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형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형은 실제 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정책관계자들의 의견,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위원, 활동회원, 회원의 중층구조로 넓혀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위원화 회원 사이에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로 활동회원을 두고, 위원들이 모집/주인/관리함으로써 참여 기회와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민자치회의 활동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위원 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대표성과 대등한 민관협력 구도를 확보하였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위원 유형에서 동장 추천은 줄이고 주민 직접 추천을 늘리며, 위원선정위원회도동이 아닌 자치구 단위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를 단순 의견청취에서 의견반영으로, 동행정사무의 위탁을 주민자치회 주도로 검토, 제안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권한에 맞춰 의사결정체계를 세분화하여 민주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구성원의 층위와 규모가 늘어난 만큼 유사한 마을계획단사례를 참고하여 내부 운영 및 의사결정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체계는 위원, 활동회원, 회원(주민) 등 구성원의 참여 여부에 따라 분과회의, 집행회의, 정기/임시회의, 전체회의, 주민총회로 구성하였다.



[그림 2-2] 서울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3) 기대효과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주민자치조직을 개편하여 50명 위원만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참여 체계를 주민 스스로 만들고 이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가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 향상, 주민만족도 및 자치력 상승 등으로 민주적인 소통 문화 형성 같은 주민자치력 및 권한 향상과 주민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동 단위 민관 거버넌스 강화)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지원 체계 구축 등 ‘주민의 변화’와 마을과 자치행정 간막이 해소, 행정의 지원역할 변화(동원/주도 → 협력/지원) 등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요 기능

2) 세종형 주민자치회¹⁾

(1) 도입 배경

세종시는 단층제적 성격을 가진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도시이다. 주민자치회의 확대 운영과 향후 읍면동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그리고 농촌지역인 면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김홍주, 2022). 이는 읍면동별 특성에 따라 둘러싼 환경과 제도,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서 세종시에 적합한 지역적 특성(읍면동)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모형을 구체화하고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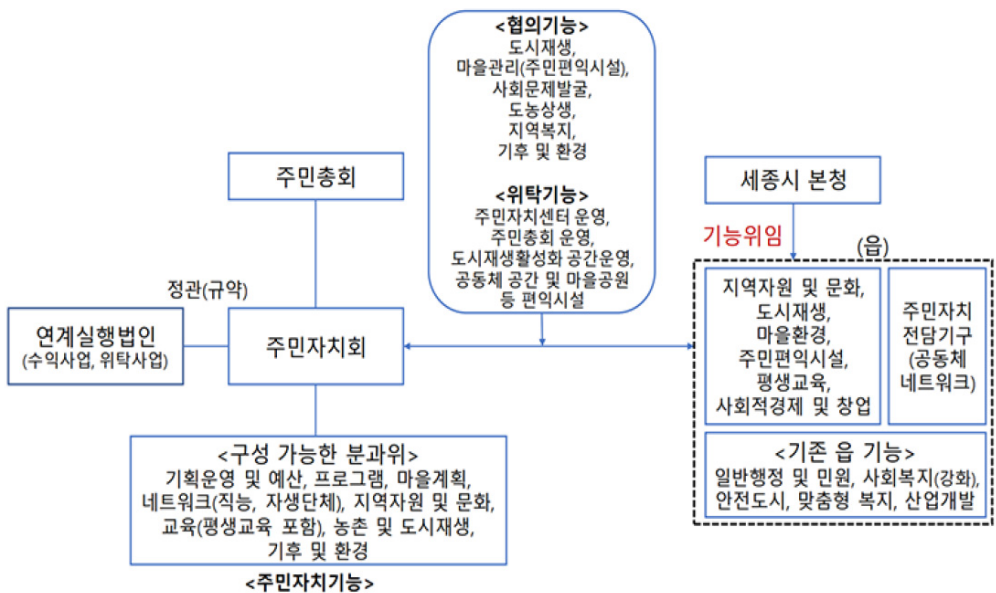
가) 읍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조치원읍과 같은 구도심에 위임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방식, 그리고 협의 및 위탁가능 사무에 대하여 조치원읍 공무원,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읍지역 주민자치회 모형을 제시하였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에 관하여 적정임기는 ‘현행과 동일하며, 읍과 동의 연임규정만 2회로 변경’을 크게 제안할 수 있다. 주민총회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축제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에서 주도하는 운영방식을

1) 김홍주(2022). 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요약정리.

고려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박식은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그 대안으로 읍장 1인+읍장 추천 3인+기관장 추천 3인, 혹은 읍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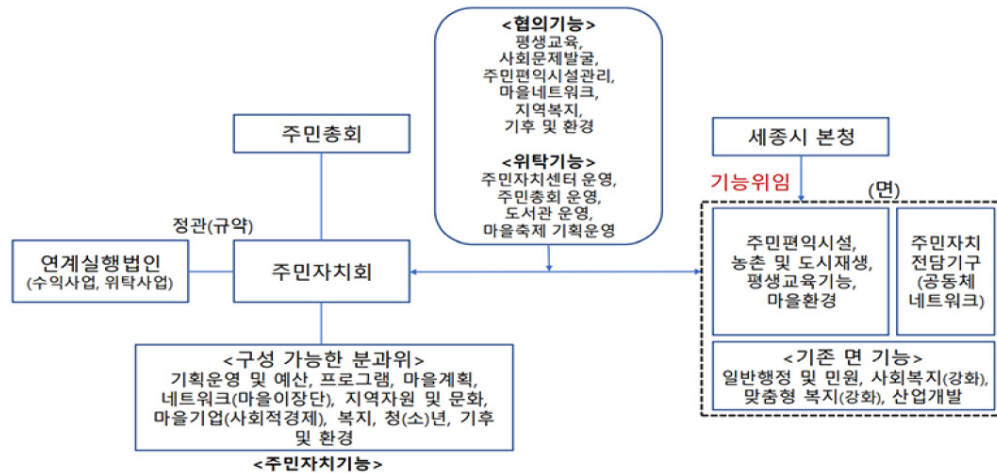
[그림 2-4] 세종시 읍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나) 면지역(농촌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농촌지역인 면에 기능이 위임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회 구성박식, 그리고 협의 및 위탁가능 사무에 대해 조치원을 공무원,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을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에 관하여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 주민자치회 선정박식은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주민총회는 축제방식으로 읍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주민자치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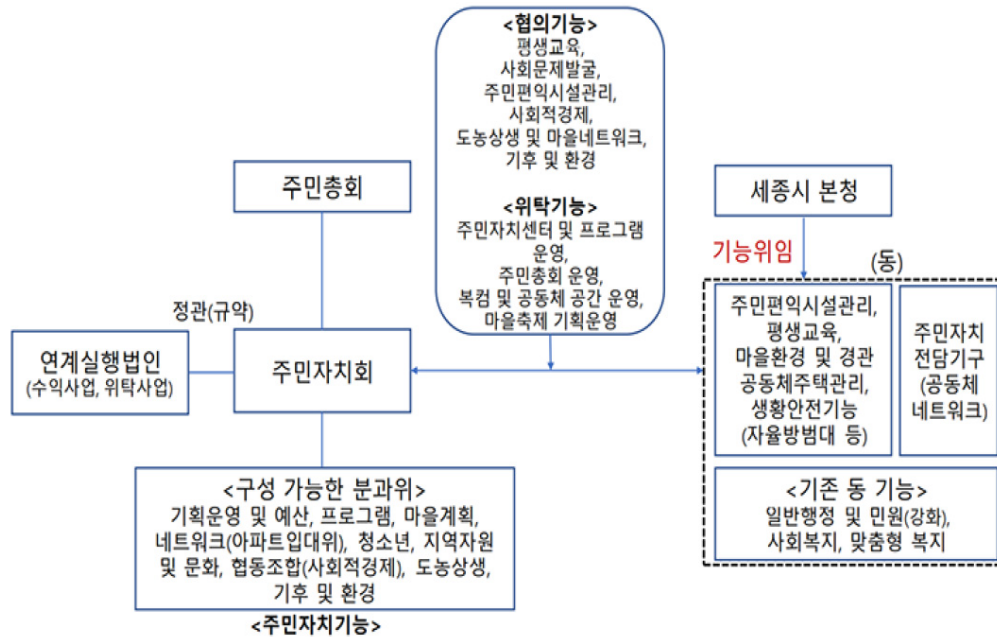
심으로 주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방식은 ‘현행’ 유지로 면장 1인+면장추천 6인으로 제안하였다.



[그림 2-5] 세종시 면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다) 동지역(신도심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동지역과 같은 신도심 지역에 기능이 위임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방식, 그리고 협의 및 위탁기능 사무에 대해 조치원을 공무원,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을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총회 방식에 관하여 적정임기는 ‘현행방식 유지’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공개모집에 의한 공개추첨방식+주민공동체조직 추천+명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는 혼합적 방식도 제안하였다. 주민총회는 축제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제형식보다는 다양한 의제가 모여서 주민주도성을 가진 내실 있는 공론장 운영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방식은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하며, 그 대안으로 동장 1인+공동체조직 추천 6인으로 제안되었다.



[그림 2-6] 세종시 동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3) 기대효과

세종시가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자치 2.0은 읍면동의 중심성 강화와 그에 따른 준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플랫폼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 모형을 정립할 수 있다. 건강, 교육,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주민과 밀접한 행정기능을 읍면동에서 일부 기능하도록 구상해 주민자치회와 협의 및 위탁사무를 추진 가능하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주민조직을 네트워크화해 주민주도성을 가지고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을 구상 실행하는 주민자치사무도 가능하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경기도형 주민자치회²⁾

(1) 도입 배경

경기도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여,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주민 참여제도를 강화하여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운영체제를 확립하고자 도입하였다. 경기도형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성공모형과 연계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 등 지역적인 입지적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며, 거주형태도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근거한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경기도형 주민자치는 지역의 여건과 개성을 존중하여 획일적인 주민자치조직 유형에서 탈피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형(농어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APT형, 주택형, 다가구·연립주택형, APT와 주택 등 혼합형)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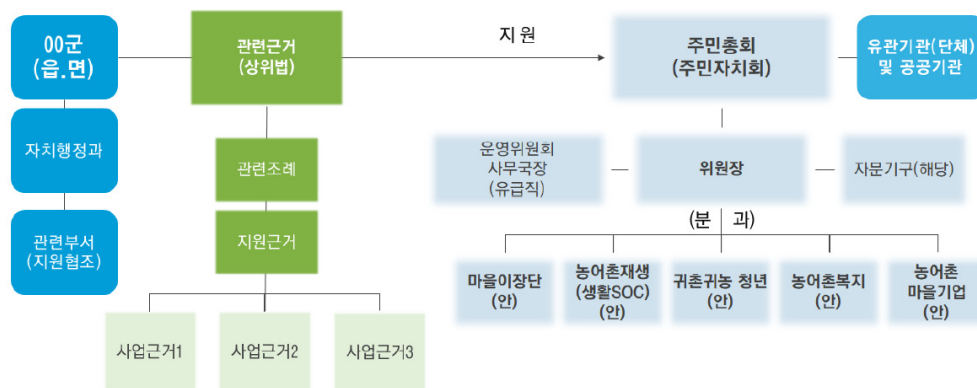
또한, 경기도형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형식적 자문역할에서 더 발전하여 대표성, 자치역량을 가진 실질적 자치기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실질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생태계를 반영하였다. 한편 경기도형 주민자치회는 기초계층과 광역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초계층에 해당하는 것이 자치회이며, 광역계층에 해당하는 것이 주민협의회로 연합체적인 성격을 가진다.

2) 이용환 외(2019).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요약 정리.

(2)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

가)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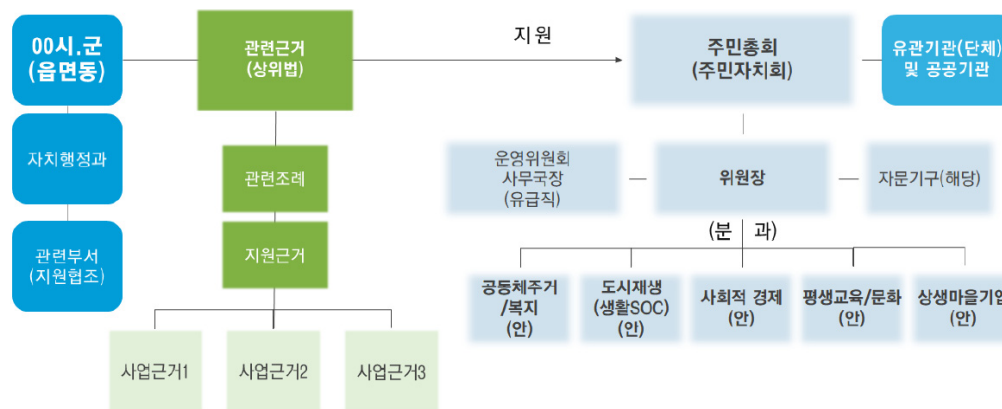
경기도의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모형 중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 된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농어촌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율성 확대 보장과 더불어 주민 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 확보, 인력 지원 등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사무국의 유급 전담 사무원 채용이 필요하며, 지역의 특성(도시와 농어촌)을 반영하여야 하며 읍·면·동장 - 주민자치회의 협의제도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농촌지역은 지역적으로 경기북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연천군, 가평군 지역 등 군 지역이 기본적으로 해당되지만, 이들 지역에도 군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가능하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 되,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2-7] 경기도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모델

나) 도시형 주민자치회 모델

경기도에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모형 중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 된 주민자치회이다. 경기도 도시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율성 확대 보장과 함께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 인력 지원 등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신뢰나 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신뢰와 역량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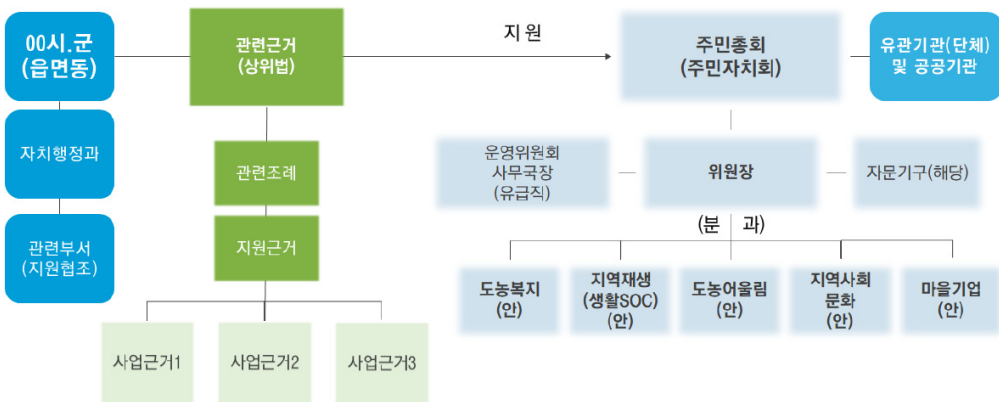


[그림 2-8] 경기도 도시형 주민자치회 모형

다) 도농복합형 주민자치회 모델

경기도에서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모형 중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 된 주민자치회이다. 도농복합지역은 지역적으로 도시화 진행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권역 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 중심의 시·군지역과 경기 북부권역, 경기남부 지역의 성장 관리권역이 해당된다. 이 권역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편입 및 성장과

정에서 이 형태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도 도농복합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율성 확대 보장과 함께 주민자치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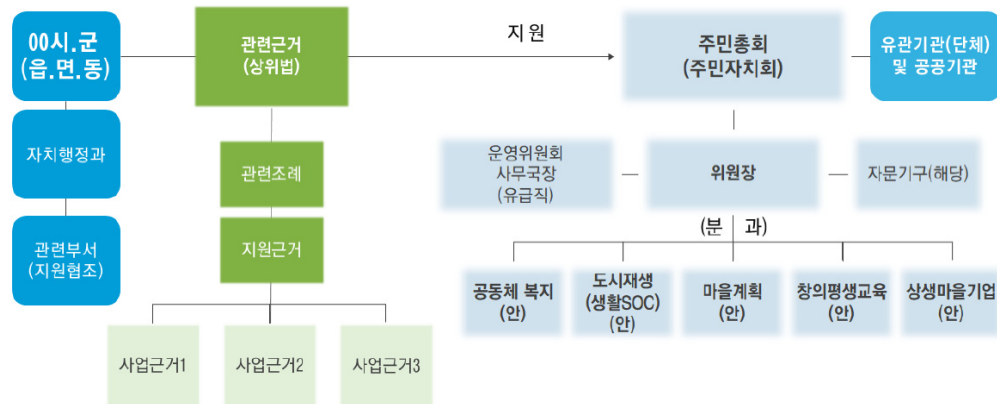


[그림 2-9] 경기도 도농복합형 주민자치회 모형

라) APT형 주민자치회 모델

경기도 도시지역의 APT 단지를 중심으로 조직화 가능하며 주민들의 주거형태를 고려한 모형 중 APT 단지를 중심으로 조직화 된 주민자치회이다. APT형 주민자치회 지역주민조직은 지역성, 상호작용성, 연결성(혹은 공통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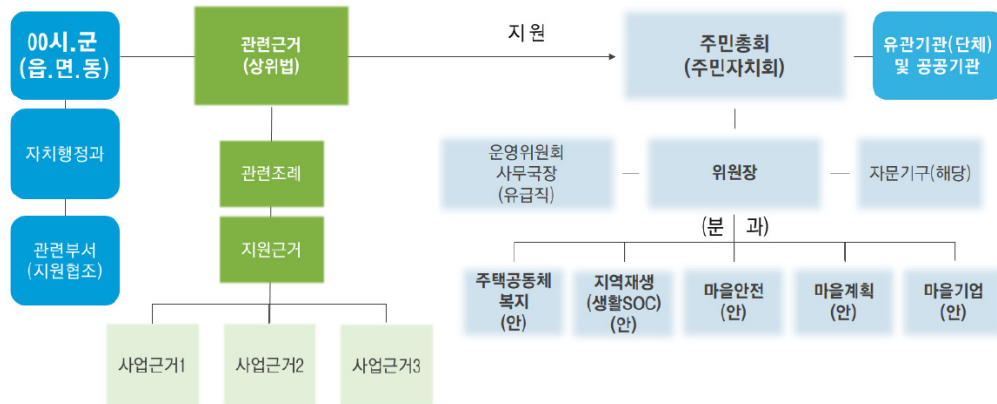
하지만 APT형 주민자치회는 도시중심이며, 도시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므로 위원선정이나 사업선정에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이나, 도시행정수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APT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율성 확대 보장과 함께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 인력 지원 등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2-10] 경기도 APT형 주민자치회 모형

마) 주택형 주민자치회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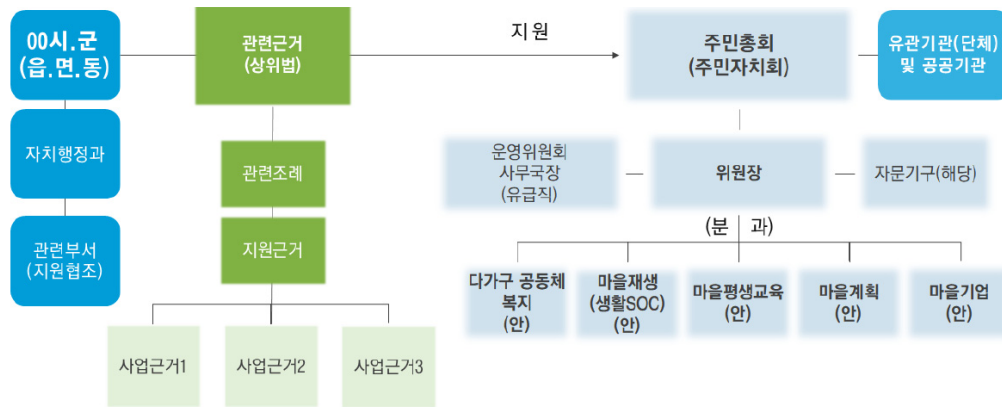
경기도의 도시지역 중 비아파트 도시지역이나 농촌 중심 지역에서 조직화 가능하며, 주민들의 주거형태를 고려한 모형 중 단독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조직화 된 주민자치회이다. 주택형 주민자치회는 주택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화된다. 지역발전의 요구 또는 도시행정수요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보다는 대면접촉을 통한 기법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발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주택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율성 확대 보장과 함께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 인력 지원 등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2-11] 경기도 주택형 주민자치회 모형

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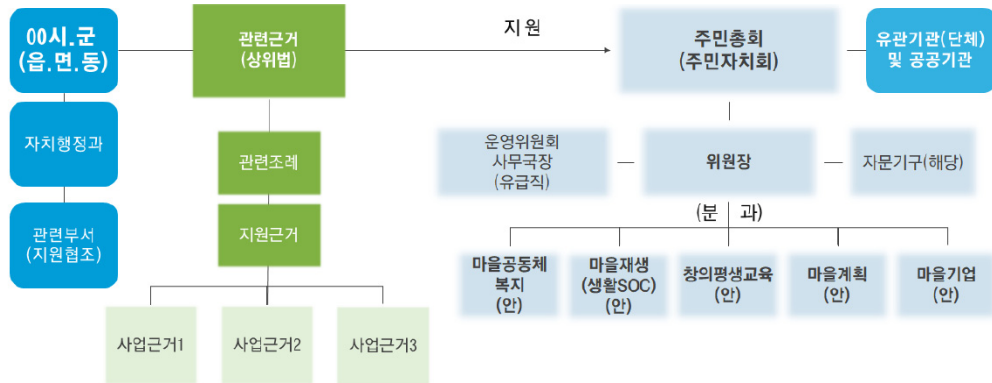
경기도 도시지역 중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이 밀집한 지역에서 조직화 가능하며, 주민들의 주거형태를 고려한 형태 중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을 중심으로 조직화 된 주민자치회이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는 도시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지역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도시행정수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율성 확대 보장과 함께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 인력 지원 등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2-12] 경기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 모형

사) 혼합형(APT와 주택 등) 주민자치회 모델

주로 도시지역에서 조직화 가능하지만, 읍지역이나 도농복합시에서도 주택 형태별로 조직화가 가능하다. 이는 주민들의 주거형태를 고려한 모델 중 혼합형(APT와 주택)을 중심으로 조직화 된 주민자치회이다. 혼합형(APT와 주택) 주민자치회는 주로 도시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지만, 일부지역의 읍지역에서 구성이 가능하므로 도시행정수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혼합형(APT와 주택)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율성 확대 보장과 함께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 인력 지원 등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2-13] 경기도 혼합형(APT와 주택 등) 주민자치회 모형

(3) 기대효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모델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 단위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시설들이나 활동의 추진 및 각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대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역사·문화·전통 등 지역 여건과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발굴·추진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역주민의 참여로 창의 제안 활성화 및 아이디어의 정책 사업화를 통해 정책 순응 확보 및 수용도 제고로 인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회 사업의 실행력이 강화된다. 주요 현안 문제 관련 논의의 장에 참여가 가능해지며, 지역문제 대응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지역 문제나 관심사를 지역주민의 자율과 책임하게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험하며,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이 가능해진다. 지역특산물·관광자원·지역축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창출이 되며, 경기도 31개 시·군별 지역 브랜드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육성이 가능하다.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등의 관리·운영과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각종 지역 자원을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주민자치업무를 비롯해 위탁업

무 등을 주민들이 처리하면서, 행정기능에 대한 민·관의 새로운 역할분담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4) 광주형 주민자치회³⁾

(1) 도입 배경

광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을 5개의 동에서 실시하였으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경험하고 운영 현황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행정 협력형 모델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자리 잡아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광주형 주민자치회 모형

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은 광주시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조사 및 관련 법제도 검토, 국내 다른 지자체 사례 검토, 주민자치회 관련 지역주민, 활동가, 공무원 등의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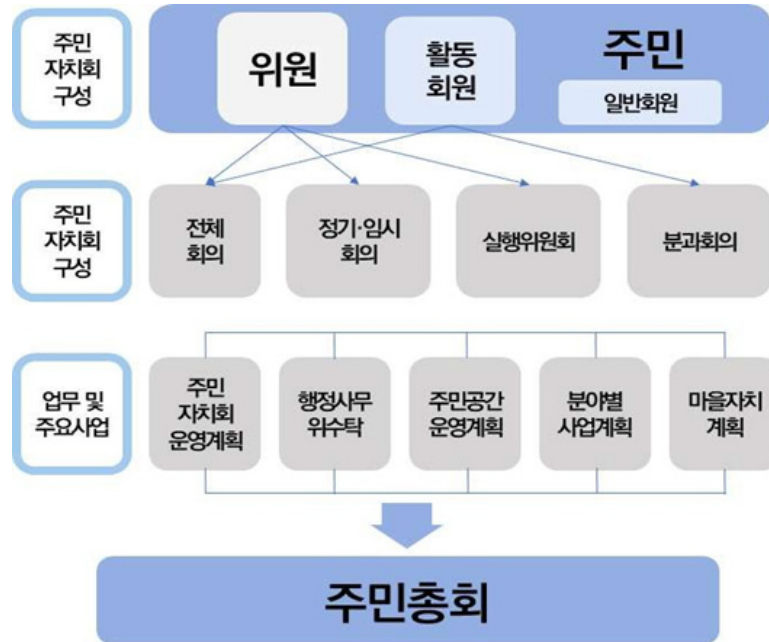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회원제를 두고, 마을의 주민(일반회원), 활동회원,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안에 주민(일반회원)과 활동회원으로 구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회를 열어두었다. 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일반회원으로 자동으로 등록되고, 실제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회원을 모집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

3) 김수람 외(2019).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요약 정리

반을 구축하였다.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선정 절차를 행정의 추천을 줄이고, 주민 스스로 위원선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선정 위원회 구성 시 동 단위가 아닌 자치구 단위로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방안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활동회원 중심으로 각종 사안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이를 실행하는 실행위원회를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하고, 현행 대부분 매월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회의를 분기마다 열리는 전체회의로 확대하여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를 편성함으로써, 위원들과 활동회원들의 의사결정의 자리로 삼았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모든 구성과 운영, 업무 및 주요 사업을 최종결정하는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마을주민 스스로 최고의 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 부여와 더불어 마을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자신들의 결정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민자치의 구현하는 토대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및 역할 증대를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정과의 동등한 민관협력의 구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위한 동의 세부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하여 외부적으로는 동에 관련된 공간계획(도시계획, 도시재생, 재개발계획, 마을공동체계획 등)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의견 청취의 권한을 광주시와 자치구 계획의 논의의 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 및 행정사무의 협의·수탁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고, 마을단위의 공동체 공간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세부계획 등에 직접적인 결정권 부여를 통해 권한과 책임 부여하였다(김수람 외, 2019).



[그림 2-14] 광주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3) 기대효과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단순히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대표성을 가진 소수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탈피해 다수의 주민이 다층적 구조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회에 대한 직접민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광주형 주민자치회가 축적된 사회자본과 다양한 마을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자율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 및 주민 자치 및 협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주민자치회 운영이 고려되어 실질적인 지역의 문제와 이슈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체제 구축과 독특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구상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9]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의 예시

구분(예시)	주요 내용
자원순환형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여성친화형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델로써 지역주민이 참여해 성평등 정책을 마을에서 구현(여성친화마을의 연계)
안전마을형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 각종 안전망은 제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역할을 수행
도시재생형	쇠퇴지역 재생에 중요한 시점이며,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지역 공동체가 도심 및 마을재생에 중심점이 될 수 있음
마을기업형	주민자치회가 사회적 기업의 주체가 되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
평생교육형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의 구성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주민자치회가 선도적으로 수행

5) 포천형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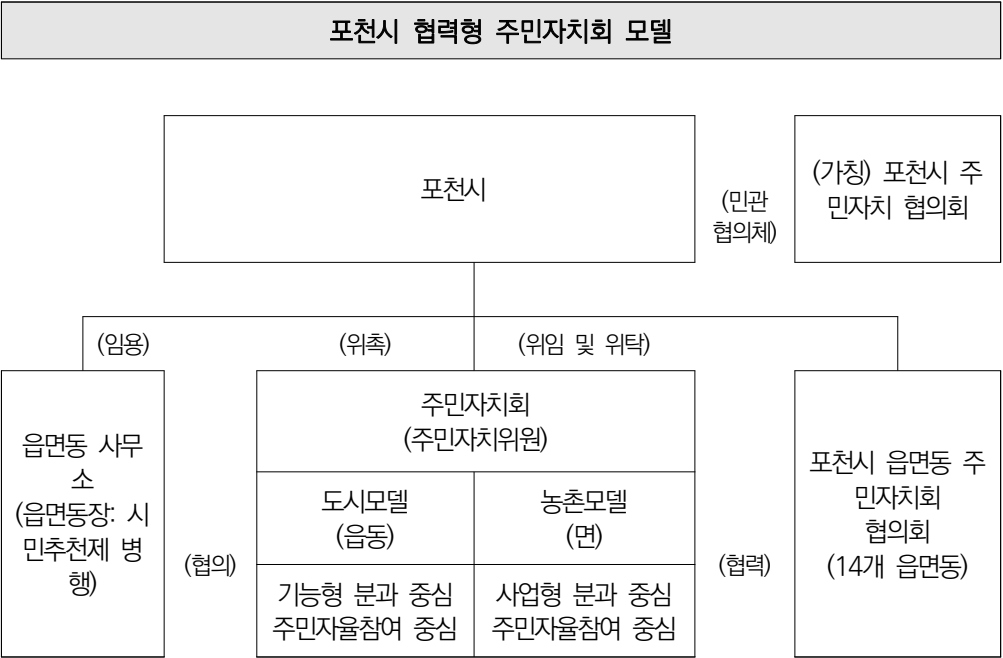
(1) 도입 배경

포천시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지속적 확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포천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읍면동이라는 행정계층의 공통된 여건과 개성을 기반으로 도시(읍동)지역과 농촌(면)지역의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과 ‘표준조례’의 기본적 구조와 운영을 존중하면서도 포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과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포천형 주민자치회 모형

포천시는 주민자치회의 모든 사업을 분과위원회와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을 표준구조모형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포천시는 포천시민의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사업발굴의 용이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권 등을 부여하였다.

포천형 주민자치회는 포천시 14개 읍면동을 도시지역인 읍동 중심과 농촌지역인 면 중심으로 이분화하였는데, 도시지역은 주민자치 위원 수에 기준을 두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하는데 인력 부족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지역 특성과 인구수에 부합되게 위원 수를 조정 및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인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별 인구 차별성을 반영하여 면적은 넓지만 인구수가 적고 젊은층이 부족한 농촌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확보하면서 지역 내 각 주민조직과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15] 포천시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포천형 주민자치회 모형에서 분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사업수요를 취합 및 선정하는 조직체로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이 주민총회로 이관되어 결정되는 과정을 관리한다. 과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들로만 구성된 분과위원회 중심체제였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관련 표준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일반 주민들의 분과위원회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포천시만의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참여를 보장하고, 분과위원회의 수를 주민자치회 위원 수에 비례하여 구성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분과위원회 의결은 주민자치위원과 참석 주민의 수에 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는 일반 주민의 적극 참여에 대한 홍보 및 회의 참여 권장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표 2-3〉 포천시 주민자치회 모형 구분

기본방향	분과위원회	분과위 수	위원 수	사업발굴
도시(읍동)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기능+사업 중심 편성	인구비례 중심	표준조례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분과위, 주민총회
농촌(면)지역 주민자치회 모형	사업중심 편성	인구비례 중심 (필요시 사업 검토)	면지역 특성과 인구수에 부합되게 조정 및 설정	분과위, 주민총회

또한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도시(읍동)지역 주민자치회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문화, 환경, 안전, 복지, 교육 등의 기능과 사업 중요성 측면을 혼용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반면 농촌(면)지역 주민자치회는 인구소멸, 여성분과, 노인분과 등의 지역 특성과 사업의 중요성 측면을 혼용하는 방법을 강조하여 명칭을 부여하도록 권장하였다.

〈표 2-4〉 포천시 분과위원회 기능별 접근에 따른 유형화

명칭	예시
기능별 접근	미래, 체육,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복지, 교육 등
지역 특성 반영 접근	학교거버넌스, 청소년, 인구소멸, 여성분과, 노인분과 등
지역 간 협력 접근	나눔〈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자치〈공동체〉, 권역별 거버넌스분과 등
사업의 중요성 접근	수탁사업, 자치회관, 참여예산, 기획홍보, 도시재생 등

(3) 기대효과

포천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쉽지 않아 분과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인 내용상의 차이가 없었다. 개선된 주민자치회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포천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에서의 분과

위원회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모델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보다 지역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 및 부문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위탁사무를 확대하면서 주민들이 자치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내실화 과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 시사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변화 탐색, 타지역 주민자치회 운영 모형 사례 검토에서는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모델인 협력형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틀을 갖추고는 있으나, 역할에 어울리는 위상과 권한의 부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시범사업 중인 협력형 표준조례에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읍·면·동의 행정업무 일부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김필두, 2014). 그러나, 현실적으로 읍·면·동장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자치회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모형을 선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제안 모델과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모형의 개선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주민자치회를 운영중에 있다. 서울시는 동단위 주민자치 사업들의 현황과 과제를 반영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세종시는 단층제적 성격을 가진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된 주민자치회 모형을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자치회의 모형을 세분화 하고 있다.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등 세가지 모형과 주거 특성을 반영하여 APT형, 주택형, 다가구형, 혼합형 등의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제안된 모형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변형해

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협력형 모델을 기본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였으나, 주민관심과 참여의 저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마을의 주민(일반회원), 활동회원,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방안에 대한 기회를 확대를 전제로 운영중이다. 포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과 ‘표준조례’의 기본적 구조와 운영을 존중하면서도 포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운영될 수 있도록 읍동 중심과 면 중심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과 시행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들의 노력은 각자의 지역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태 분석

1. 충청남도 일반현황 및 주거 특성 분석
2. 충청남도 주민자치 제도 분석
3.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4.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인식 분석

1. 충청남도 일반현황 및 주거특성 분석

1) 충청남도 행정구역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은 15개 시·군(8시, 7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남도 읍면동 수는 총 208개이고, 주민자치회 수는 153개로 주민자치회 전환 비율은 73.6%이다.

〈표 3-1〉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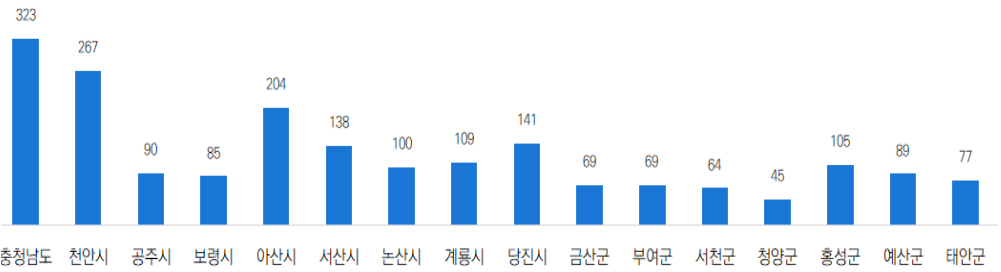
구분	시·군·구			자치구가 아닌구	읍·면·동					주민 자치회	전환비율
	시	군	읍		면	동					
						행정	법정				
충청남도	15	8	7	2	208	25	136	47	124	153	73.6
천안시	1	1	-	2	31	4	8	19	31	17	54.8
공주시	1	1	-	-	16	1	9	6	27	16	100.0
보령시	1	1	-	-	16	1	10	5	10	2	12.5
아산시	1	1	-	-	17	2	9	6	19	17	100.0
서산시	1	1	-	-	15	1	9	5	14	15	100.0
논산시	1	1	-	-	15	2	11	2	11	15	100.0
계룡시	1	1	-	-	4	-	3	1	1	2	50.0
당진시	1	1	-	-	14	2	9	3	11	14	100.0
금산군	1	-	1	-	10	1	9	-	-	1	10.0
부여군	1	-	1	-	16	1	15	-	-	16	100.0
서천군	1	-	1	-	13	2	11	-	-	11	84.6
청양군	1	-	1	-	10	1	9	-	-	10	100.0
홍성군	1	-	1	-	11	3	8	-	-	11	100.0
예산군	1	-	1	-	12	2	10	-	-	4	33.3
태안군	1	-	1	-	8	2	6	-	-	2	25.0

충청남도 공무원은 6,573명(일반 2,225명, 소방, 4,226명, 복지 82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23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은 208명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204명, 당진시 1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업무 중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17명,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각 16명, 서산시, 논산시 각 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수에서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여군이 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천군 1.7%, 청양군 1.5%, 공주시, 보령시, 금산군, 예산군 각각 1.4%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내 시·군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공무원수가 타지역에 많은 시 단위의 자치단체가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의 수는 많으나, 공무원 수 대비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의 비율은 군 단위 자치단체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 충청남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주민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수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비율(%)
충청남도	2,123,037	6,573	323	208	
천안시	657,559	2,465	267	31	1.3%
공주시	102,571	1,136	90	16	1.4%
보령시	97,157	1,144	85	16	1.4%
아산시	334,539	1,642	204	17	1.0%
서산시	176,413	1,277	138	15	1.2%
논산시	112,617	1,122	100	15	1.3%
계룡시	44,475	409	109	4	1.0%
당진시	168,253	1,194	141	14	1.2%
금산군	50,092	725	69	10	1.4%
부여군	62,343	899	69	16	1.8%
서천군	49,964	775	64	13	1.7%
청양군	30,266	674	45	10	1.5%
홍성군	98,068	934	105	11	1.2%
예산군	77,385	871	89	12	1.4%
태안군	61,335	792	77	8	1.0%



[그림 3-1] 충청남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 충청남도 인구 및 세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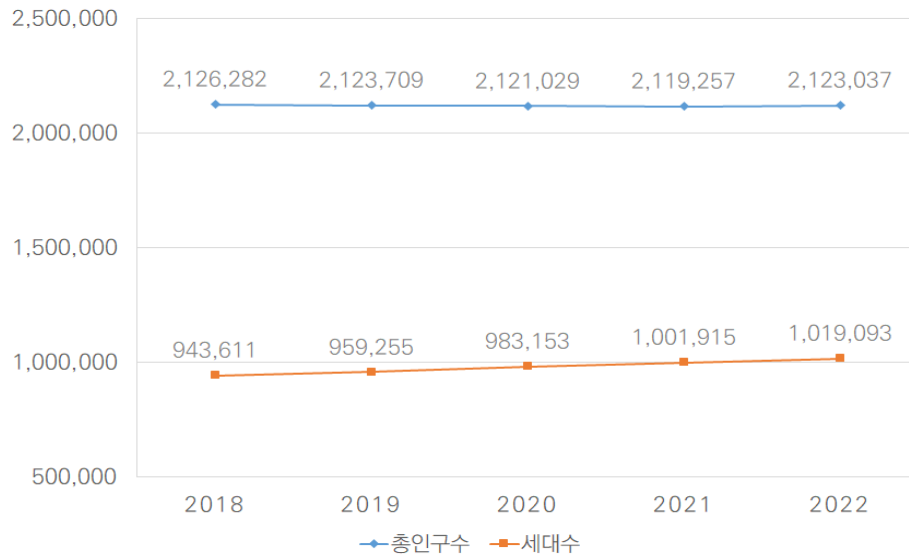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인구 및 세대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2년말을 기준으로 인구는 감소, 세대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는 2018년 2,126,282명에서 2022년 2,123,037명으로 5년간 0.15%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2018년 943,611세대에서 2022년 1,019,093세대로 8%로 증가하였다. 시·군별 추세⁴⁾를 살펴보면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는 인구수와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은 인구수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부여군은 인구수와 세대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자치단체에서 인구수와 세대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인구수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3〉 충청남도 인구 및 세대수 변화(과거 5년간)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2,126,282	943,611	2.25	1,082,009	1,044,273	1.04
2019	2,123,709	959,255	2.21	1,081,938	1,041,771	1.04
2020	2,121,029	983,153	2.16	1,082,634	1,038,395	1.04
2021	2,119,257	1,001,915	2.12	1,083,366	1,035,891	1.05
2022	2,123,037	1,019,093	2.08	1,086,632	1,036,405	1.0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4) 부록 1. 시·군별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참조.



[그림 3-2] 충청남도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충청남도의 총 인구수는 2,119,257명중 외국인 인구수는 124,492명으로 총 인구의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34,908명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았고, 아산시 32,809명, 당진시 10,4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룡시는 491명으로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외국인 인구수를 나타내었다. 시·군별 외국인 인구의 비율은 아산시가 전체 인구의 10.11%로 가장 높았으며, 논산시 6.34%, 당진시 6.24%, 예산군 5.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인구의 비율 역시 계룡시가 1.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2021년말 기준

〈표 3-4〉 충청남도 외국인 인구 현황

구분	총인구수	외국인 인구 수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총인구수/ 외 국인인구수
		계	남자	여자		
충청남도	2,119,257	124,492	67,153	57,339	16,079	5.87%
천안시	658,486	34,908	18,422	16,486	3,708	5.30%
공주시	103,145	4,177	1,900	2,277	996	4.05%
보령시	98,408	5,079	3,357	1,722	706	5.16%
아산시	324,580	32,809	18,299	14,510	2,557	10.11%
서산시	176,645	8,060	4,071	3,989	1,256	4.56%
논산시	114,483	7,255	3,314	3,941	1,248	6.34%
계룡시	43,331	491	206	285	163	1.13%
당진시	167,092	10,420	6,016	4,404	1,473	6.24%
금산군	50,477	3,799	1,685	2,114	702	7.53%
부여군	63,774	2,584	1,186	1,398	693	4.05%
서천군	50,745	2,280	1,482	798	347	4.49%
청양군	30,440	1,398	642	756	366	4.59%
홍성군	99,324	4,535	2,598	1,937	771	4.57%
예산군	76,801	4,123	2,387	1,736	673	5.37%
태안군	61,526	2,574	1,588	986	420	4.1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12. 기준

3) 충청남도 주거특성

(1) 주택 및 주거환경

충청남도의 주거 형태(주택 유형)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비중이 4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42.7%, 주택이외의 거처 4.2%, 다세대 주택 3.4%, 연립주택 1.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았으며, 아파트 비중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3-5〉 현재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전국	30.4	51.5	2.1	9.3	1.5	5.2
서울	26.1	43	2.6	18.8	2	7.5
부산	24	56.8	1.9	10	1.4	5.9
대구	32.8	57.4	0.8	5	1.4	2.6
인천	15.7	54.9	2.1	18.1	1.1	8.1
광주	26.6	66.9	1.4	1.1	1.2	2.8
대전	34.6	55.2	1.5	4.9	1.3	2.5
울산	28.6	60.6	1.4	4.5	1.9	3.1
세종	20.5	75	0.6	0.7	0.6	2.5
경기	21	58.3	2.2	11.2	1.1	6.1
강원	44.5	46.7	2.4	1.4	2	3
충북	42.1	49	1.9	2.3	1.7	3
충남	42.7	46.3	1.9	3.4	1.5	4.2
전북	44.4	48.4	1.8	1.3	1.5	2.6
전남	51.6	39.8	1.7	1.1	1.9	4
경북	47.8	42	2.1	3.3	1.8	2.8
경남	38.5	52.7	1.6	2.2	1.5	3.4
제주	45.3	25.6	8.7	10.6	2.7	7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2022.

충청남도의 주택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63.8%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임차 30.5%, 무상 5.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자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무상의 비중도 다소 높은 편이다.

〈표 3-6〉 현재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임차	무상
전국	57.3	39.0	3.7
서울	43.5	54.0	2.5
부산	59.7	37.1	3.2
대구	58.4	38.2	3.4
인천	60.9	35.9	3.2
광주	61.1	35.6	3.2
대전	51.7	45.1	3.1
울산	63.9	32.4	3.7
세종	51.9	45.0	3.2
경기	55.3	41.5	3.2
강원	61.8	31.3	6.9
충북	62.3	33.0	4.8
충남	63.8	30.5	5.7
전북	67.7	27.8	4.5
전남	71.1	22.9	5.9
경북	69.0	25.9	5.1
경남	66.4	29.3	4.2
제주	56.6	36.0	7.3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2022.

충청남도의 현재 주택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5년 이상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10년 18.1%, 3년~5년 15.1%, 2년~3년과 10년~15년이 동일하게 11.9%, 1년~2년 10.8%, 1년 미만 9.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15년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년 미만 거주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3-7〉 현재 주택 거주 기간

(단위: %)

구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 이상
전국	13.2	13.3	10.8	15.6	19.4	10.7	17.2
서울	15.6	14.6	11.2	17.1	20.2	8.9	12.2
부산	13.4	12.7	9.7	12.9	20.4	10.7	20.2
대구	11.4	13.4	11.1	14.5	19.4	12.1	18.1
인천	14.4	11.7	12.0	16.3	19.5	11.8	14.3
광주	13.5	12.9	11.4	13.6	17.0	14.5	17.0
대전	14.7	15.5	12.3	15.0	16.8	11.6	14.0
울산	13.2	11.9	8.9	12.5	24.0	11.9	17.5
세종	17.8	15.9	17.8	23.5	17.0	2.2	5.8
경기	12.9	15.8	12.6	18.2	19.6	9.1	11.8
강원	11.7	14.1	9.8	11.2	19.1	12.0	22.0
충북	13.7	12.6	10.0	13.6	17.3	11.9	20.8
충남	9.5	10.8	11.9	15.1	18.1	11.9	22.6
전북	11.6	10.6	7.0	15.1	18.5	11.4	25.9
전남	9.6	8.4	8.6	13.0	18.5	12.8	29.1
경북	11.0	9.6	7.6	12.0	17.6	13.0	29.3
경남	13.2	10.3	7.7	13.7	20.3	12.6	22.2
제주	10.7	11.3	8.4	13.9	21.7	9.3	24.7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2022.

충청남도의 이사경험 및 이사횟수를 살펴보면 이사한적 없음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회 이상 16.3%, 2회 15.2%, 1회 14.3%, 3회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이사한적 없음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사횟수의 평균은 3.6회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이사경험 및 이사횟수

(단위: %)

구분	이사한 적 있음							이사한적 없음	평균 (회)
	소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모름/ 무응답		
전국	75.3	16.4	15.2	16.2	8.7	18.8	0.1	24.7	3.6
서울	78.6	16.9	15.3	17.0	9.1	20.2	0.0	21.4	3.5
부산	76.5	14.2	13.7	17.4	10.6	20.7	-	23.5	3.7
대구	76.0	12.5	13.1	19.4	8.9	22.1	-	24.0	3.9
인천	73.5	16.1	14.1	15.8	8.4	19.2	0.0	26.5	3.8
광주	73.7	19.9	16.8	14.2	8.1	14.6	-	26.3	3.2
대전	74.7	12.5	12.1	14.8	9.7	25.6	-	25.3	4.1
울산	74.5	15.5	15.7	16.0	10.3	17.0	-	25.5	3.5
세종	79.4	11.9	14.6	17.7	8.2	27.0	-	20.6	4.4
경기	78.0	14.4	17.8	17.3	9.5	18.9	0.1	22.0	3.6
강원	70.6	20.0	12.6	11.1	6.7	19.5	0.7	29.4	3.7
충북	78.0	20.6	15.0	14.3	7.6	20.5	-	22.0	3.8
충남	67.0	14.3	15.2	13.2	7.9	16.3	0.0	33.0	3.6
전북	69.3	22.5	14.1	12.1	6.1	14.5	-	30.7	3.2
전남	63.4	22.5	9.6	12.8	4.5	14.0	-	36.6	3.3
경북	73.4	19.1	15.8	16.0	6.8	15.6	-	26.6	3.3
경남	73.7	15.2	14.2	18.0	9.3	16.9	-	26.3	3.6
제주	78.4	26.9	15.6	11.8	5.1	17.9	1.1	21.6	3.3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2022.

(2) 가구특성

충청남도의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34.2%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2인 29.7%, 3인 17.9%, 4인 14.5%, 5인 3.0%, 6인 이상 0.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1인, 2인의 가구원 수가 약간 높은 편이며, 평균 가구원수 또한 전국은 2.3명이나 충남은 2.2명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표 3-9〉 가구원수

(단위: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평균(명)
전국	31.8	28.0	20.1	16.5	3.1	0.6	2.3
서울	34.9	26.0	19.9	16.5	2.3	0.4	2.3
부산	32.4	29.3	20.1	15.0	2.7	0.5	2.3
대구	30.9	28.0	20.8	16.4	3.3	0.6	2.4
인천	28.3	27.6	22.0	17.4	4.0	0.7	2.4
광주	32.4	27.1	19.4	16.9	3.8	0.5	2.3
대전	36.3	26.1	18.5	14.9	3.7	0.5	2.3
울산	27.7	27.8	22.5	18.9	3.0	0.2	2.4
세종	31.3	23.9	20.3	19.6	4.4	0.5	2.4
경기	27.6	26.5	22.0	20.6	2.8	0.6	2.5
강원	35.0	31.3	17.8	12.3	2.6	1.0	2.2
충북	34.8	29.3	18.0	13.7	3.6	0.6	2.2
충남	34.2	29.7	17.9	14.5	3.0	0.7	2.2
전북	33.8	30.9	17.8	13.2	3.9	0.4	2.2
전남	33.7	33.0	17.3	11.1	4.1	0.8	2.2
경북	34.3	32.1	17.9	11.9	3.0	0.7	2.2
경남	30.9	29.6	20.0	15.5	3.5	0.4	2.3
제주	31.1	28.2	19.0	14.5	5.8	1.4	2.4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2022.

충청남도의 가구주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77.7%, 여성 22.3%로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0〉 가구주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전국	76.6	23.4
서울	75.0	25.0
부산	73.0	27.0
대구	77.5	22.5
인천	75.0	25.0
광주	75.8	24.2
대전	75.0	25.0
울산	81.0	19.0
세종	81.4	18.6
경기	79.2	20.8
강원	75.3	24.7
충북	79.0	21.0
충남	77.7	22.3
전북	76.5	23.5
전남	74.5	25.5
경북	75.7	24.3
경남	77.1	22.9
제주	72.7	27.3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2022.

충청남도의 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50세~59세의 비중이 2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세~49세 18.8%, 60세~69세 16.6%, 30세~39세 15.6%, 70세~79세 10.6%, 20세~29세 9.3%, 80세 이상 6.9%, 20세 미만 0.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가구주 연령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가구주 연령

(단위: %)

구분	20세 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79세	80세 이상
전국	0.3	9.2	15.6	20.7	22.6	17.6	9.1	4.9
서울	0.3	12.7	17.7	19.4	20.4	16.8	8.7	3.9
부산	0.3	8.7	13.2	18.7	21.9	21.4	11.0	4.9
대구	0.8	7.3	14.5	20.3	25.3	17.8	9.7	4.4
인천	0.4	8.1	15.7	22.8	24.1	17.3	7.7	4.0
광주	0.3	11.3	15.0	22.6	22.3	16.0	8.2	4.2
대전	0.8	14.5	15.8	20.1	21.6	15.9	7.3	3.9
울산	-	6.5	17.0	22.1	26.5	17.7	7.2	2.9
세종	0.5	14.5	23.4	25.5	17.6	10.8	4.2	3.4
경기	0.2	8.1	17.4	23.9	23.7	16.1	7.4	3.3
강원	0.5	9.0	11.4	17.9	23.3	19.9	10.3	7.7
충북	0.3	10.5	14.4	18.9	22.6	17.6	9.0	6.7
충남	0.6	9.3	15.6	18.8	21.6	16.6	10.6	6.9
전북	0.6	8.3	12.1	18.5	21.2	18.9	12.2	8.1
전남	0.4	6.7	11.0	16.9	22.3	19.1	13.7	10.0
경북	0.5	7.6	12.4	17.5	22.5	19.7	11.2	8.5
경남	0.3	6.0	14.0	20.9	23.5	19.3	9.9	5.9
제주	-	8.2	15.2	23.0	22.7	17.0	8.6	5.3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2022.

충청남도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 졸업 35.8%,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7%, 중학교 졸업 12.7%, 대학원 졸업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학교 졸업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표 3-12〉 가구주 교육수준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전국	8.8	8.2	37.2	43.1	2.7
서울	4.3	6.6	34.9	50.3	3.9
부산	8.9	12.0	33.7	42.7	2.7
대구	8.0	9.0	38.2	43.9	0.8
인천	7.7	8.0	43.4	38.6	2.3
광주	7.5	7.1	39.1	44.1	2.1
대전	8.1	6.6	34.5	44.8	6.0
울산	6.4	8.5	39.4	44.2	1.5
세종	7.2	2.6	21.0	59.2	9.9
경기	4.6	6.6	38.0	47.9	3.0
강원	15.1	9.7	42.2	31.0	1.9
충북	15.1	7.8	37.0	37.7	2.3
충남	13.7	12.7	36.2	35.8	1.7
전북	15.8	10.1	37.7	34.8	1.5
전남	23.2	8.9	38.9	27.9	1.2
경북	17.9	11.2	36.8	32.6	1.4
경남	12.2	9.1	38.4	38.8	1.4
제주	9.4	7.4	30.6	49.2	3.4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2022.

충청남도의 가구주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업무 19.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 16.5%, 기능적 업무(가공 등) 15.8%, 농림어업 13.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농림어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업무의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가구주 직업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 업무	서비스업	판매업	농림 어업	기능적 업무 (가공 등)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	군인· 군무원
전국	4.7	8.5	26.7	18.8	8.3	4.9	13.0	7.4	7.2	0.5
서울	6.1	10.9	34.9	21.8	10.4	0.2	5.4	4.5	5.7	0.2
부산	5.1	8.8	26.8	18.7	6.8	0.7	22.4	3.9	6.6	0.3
대구	2.2	6.7	28.1	21.6	9.4	1.1	18.0	5.7	7.3	-
인천	5.1	7.9	25.1	19.3	7.8	0.7	11.6	10.4	12.2	0.0
광주	3.7	9.1	26.2	21.9	8.9	1.5	13.6	7.8	7.4	-
대전	3.0	11.9	25.7	25.9	5.3	0.8	11.1	8.8	7.1	0.4
울산	2.6	3.7	19.3	10.8	8.0	2.0	38.6	10.0	5.0	0.0
세종	3.3	7.4	49.6	18.3	2.7	1.8	5.0	6.5	5.1	0.3
경기	6.4	9.9	29.6	17.4	9.5	2.0	10.1	7.9	6.6	0.7
강원	5.5	7.3	19.9	19.2	5.9	9.3	6.3	8.6	14.9	3.3
충북	4.1	6.7	20.0	16.3	5.6	11.9	20.8	6.4	7.8	0.4
충남	3.4	7.0	19.6	16.5	6.7	13.6	15.8	11.3	5.7	0.5
전북	1.7	4.6	21.3	18.4	10.1	13.6	11.2	9.3	9.6	0.3
전남	1.8	5.8	13.1	19.2	5.6	22.1	13.3	11.9	7.2	0.1
경북	2.5	6.0	18.9	14.1	6.3	14.3	20.0	8.4	8.8	0.7
경남	2.7	5.5	20.2	15.6	5.9	10.6	25.7	7.7	5.7	0.4
제주	4.3	10.3	16.9	29.6	6.8	12.7	5.0	5.8	8.7	-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2022.

4) 충청남도 일반현황 특성 종합

충청남도의 읍·면·동 행정구역은 208개소로 행정동 47개소, 읍 25개소, 면 13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충남남도가 323명으로,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267명으로 가장 높았고, 청양군이 45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수는 천안시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산군이 1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부여군이 1.8%로 가장 높았다.

충청남도내 인구는 2022년말을 기준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시·군별 추세를 살펴보면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는 인구수와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은 인구수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부여군은 인구수와 세대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내 외국인 인구수는 천안시가 34,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율로는 아산시가 전체 인구의 10.11%로 가장 높았다.

도내 거주특성을 살펴보면 거주 주택의 유형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주 기간은 5년~10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경험은 평균 3.6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가구원수는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인, 2인 가구의 비중이 63.9%로 거주 비중의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은 50세~59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전국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학교 졸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가구주의 직업은 사무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충청남도 주민자치 제도 분석

1) 충청남도 조례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17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조례는 목적, 정의, 지원, 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보조금 등의 지원, 포상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써 충청남도내 시·군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타 광역자치단체들 역시 광역차원에서 기초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타 지역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개정일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5.12.31.
경기도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4.29
충청북도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23.07.07.
전라남도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9.28.
전라북도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9.30.
경상남도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6.03.31.
경상북도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7.06.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08.01.09.

〈표 3-15〉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17-09-20 조례 제 4280호</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추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p>제3조(지원)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4. 도민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5. 다른 시·도 및 해외 교류사업 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4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p>제6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

2) 시·군 조례

본 연구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충청남도 시·군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수조사 후 분석해 보았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었다. 조례 제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3년 6개, 2018년 3개, 2019년 2개, 2020년 4개이다. 2013년이 6개로 가장 많은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다음으로 2020년에 4개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정된 조례의 마지막 개정 연도를 살펴보면 2020년 3개, 2021년 3개이다. 2022년이 8개, 2023년 1개로 나타나, 대체로 2022년 이후 조례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자치회 조례 명에 ‘시범실시’라는 단어를 넣은 시·군은 8개이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한 조례는 1개였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최근 변화가 있었던 2023년의 표준조례안은 다양한 참여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민중심의 투명한 운영 등의 방향으로 개정 방향성이 정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례의 변화는 필요하며, 표준조례의 개정 방향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을 주요 조항별로 비교·분석⁶⁾해 보았다.

6) 부록 2. 충청남도 시·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분석 참조

〈표 3-16〉 충청남도 시·군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개정일자
천안시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 2013.08.12. (전부개정) 2018.09.03. (일부개정) 2019.07.11. (전부개정) 2022.04.11. (일부개정) 2022.11.11.
공주시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4.06. (전부개정) 2022.09.27.
보령시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3.30.
아산시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16. (일부개정) 2015.12.15. (일부개정) 2016.12.15. (일부개정) 2019.05.07. (일부개정) 2019.12.16. (전부개정) 2022.11.07.
서산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08.10. (일부개정) 2019.12.18. (전부개정) 2021.07.01. (일부개정) 2022.08.25.
논산시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3. (일부개정) 2015.12.30. (일부개정) 2016.10.31. (전부개정) 2019.06.10. (일부개정) 2020.06.10. (일부개정) 2020.07.10. (일부개정) 2021.12.20. (일부개정) 2022.05.02. (일부개정) 2023.06.12.
계룡시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4.10.
당진시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3.30. (일부개정) 2021.10.29.
금산군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제정) 2019.04.01.
부여군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2.27. (전부개정) 2018.05.29. (전부개정) 2020.11.17.

구분	조례명	제·개정일자
서천군	서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2.11. (전부개정) 2018.07.06. (일부개정) 2019.10.21. (전부개정) 2020.09.29. (일부개정) 2022.07.08.
청양군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1.15. (전부개정) 2021.12.15.
홍성군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8.16. (일부개정) 2020.06.30. (일부개정) 2022.03.31.
예산군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8.16. (일부개정) 2018.07.02. (전부개정) 2019.07.31. (일부개정) 2022.03.30.
태안군	태안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08.29. (전부개정) 2021.07.01.

3) 충청남도 주민자치 제도 분석 결과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충청남도과 시·군은 모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중에 있다.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으로써 충청남도내 시·군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군의 조례는 명칭, 구성 내용 등이 시·군별 특성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례의 조례 제정 연도는 2013년 6개, 2018년 3개, 2019년 2개, 2020년 4개로 2013년 가장 많은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정된 조례의 마지막 개정 연도는 대체로 2022년 이후 조례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자치회 조례명에 ‘시범실시’라는 단어를 넣은 시·군은 8개이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한 조례는 1개였다.

2023년의 표준조례안과 시·군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을 주요 조항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운영원칙은 모든 시·군이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주민자치회의 정의는 주민의 대표, 주민 등으로 정의하였으나 서천군은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군에서는 분회의 설치까지 조례에 포함하고 있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부분에서는 홍성군이 하한선 없이 30명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20명 이상 30명 이하 3개, 20명 이상 50명 이하 5개 20명 이상 60명 이하 1개, 30명 이상 60명이하 5개 시·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모든 시·군에서 1명의 주민자치회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부회장은 1~2명을 두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시·군(3개)도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장은 대부분 시·군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있으며, 투표 2개, 규정이 없는 곳 3개도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기는 2년인 곳이 9개로

가장 많았으며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시·군은 6개 였다. 다음으로 분과위원회는 모든 조례에서 분과위원회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분과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지역(천안시), 선출(당진시, 부여군, 청양군)을 제외하고는 분과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었다. 분과구성과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4개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규정이 없는 곳은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이었고, 나머지 시·군은 운영세칙, 시행규칙 등을 통해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명기하였다. 주민총회와 관련된 도내 조례에서는 대부분 1회 이상을 명기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시·군이 월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충남도, 시·군의 주민자치회 조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표준조례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본연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개정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1) 추진 배경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주민의 참여는 행정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주민스스로가 지역 내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 대한 욕구는 충청남도에서도 확산되고 있었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하려는 정부정책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충청남도는 주민자치의 확산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주민자치회 확대 및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의 실질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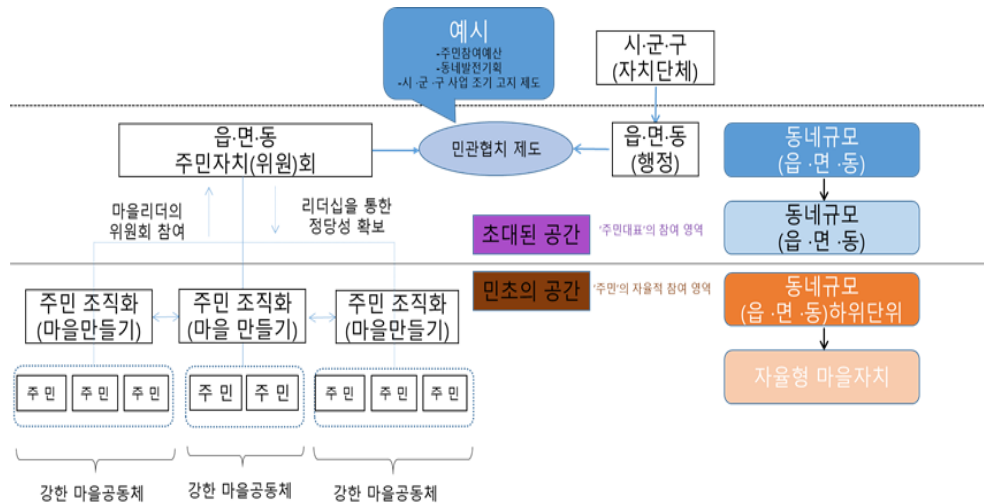
충남형 주민자치회 이전에 충남도에서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을 기추진중이었다. 충청남도에서는 민선6기 중점과제로 ‘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발굴·육성하였다.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는 지역주민·활동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공동체로써 동네별 특성을 고려한 3가지 유형으로 모델이 추진되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2017년말까지 102개소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주민자치위원회 41, 마을 47, 아파트 14)가 구성되었다.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는 동네자치의 추진을 통해 갈등해소, 주민화합, 소통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장기적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이 발생하여,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지원을 추진하였다.

(2)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

충청남도에서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의 운영과 한계 속에서 새로운 주민참여 형태를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유형과 모형⁷⁾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민자치를 주민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형과 지역공동체 대표가 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형 두가지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만들기 리더들의 적극 참여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지역공동체 역할과 기능을 통해 지역에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인식과 함께 주민으로부터의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 제공, 지방정부 행정조직상으로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부서를 설치 또는 강화,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공동체와 권력을 공유,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통합운영 등 제도 도입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7) 현장중심의 충남형 주민자치 유형개발과 시범 적용 연구(2015). 곽현근 외.



[그림 3-3] 충남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형

충청남도는 제시된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기본모형과 유형을 적용하여,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확정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자문기구로 기능했다면,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최고 의사결정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읍·면·동장이 하던 위원 위촉 및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해 위상을 크게 높이게 하였으며, 위원 정원은 기존 20~30명에서 30~50명으로 늘리고 구성 비율은 주민 대표 50%, 직능 대표 30%, 전문가 대표 20% 등으로 개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수준에 머물던 권한은 읍·면·동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등으로 크게 넓혔다. 이에 더해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기획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실무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행안부형과 다르게 주민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표 3-17〉 주민자치회 유형별 비교(행안부형-충남형)

구분	주민자치회(행안부)	주민자치회(충남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형태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인원	▸ 20 ~ 30명 자율결정	▸ 30~50명 이내 자율결정
위원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위촉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읍면동장 3, 이장협의회 3, 사회단체 추천 3) ▸ 지역대표(이동장추천, 10명 이내) + 주민대표(주민 공개모집, 10명 이내) + 직능대표(전문가 등 공개모집, 1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위촉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내부위원 5, 읍면동장, 외부위원 4 中 시장군수 2, 시군의회의장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면접병행 ▸ 주민대표(공모, 추천, 50%) + 직능대표(당연직, 30%) + 전문가대표(공개모집, 20%)
대표성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연1회, 주요사업계획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지역 내 최고의사결정기구
재정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주민세 등 다양
지자체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3)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추진 결과

충청남도는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신규 대상지부터 기존 지원 기간 (9백만원, 3년)을 4년으로 확대하고 역량 단계별 사업비 세분화를 하는 등 지원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8〉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사업 주요 내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기간	- 2년간 8천만원	- 3년간 90백만원	- 4년간 90백만원
지원대상	- 16개소 (신규 9, 후속 7)	- 25개소 (신규 9, 후속 16)	- 27개소 (신규 9, 후속 18)
주요 추진전략	- 주민자치회 초기 육성 단계 운영체계 구축 및 컨설팅 지원	- 주민자치회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사무국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안착지원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은 역량단계별, 지원 영역별로 나누어 추진중에 있으며, 역량 단계별 지원 사업은 예비단계, 도입단계, 정착단계, 확산단계 등 크게 네 단계로 분류된다. 예비단계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보다 하위 단위인 공동체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입단계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회 활동 운영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단계에서는 주민자치회 기반이 마련된 곳 중 제안사업을 추진하며, 확산단계에서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행하는 주민자치의 최상위 단계로 보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사업은 매년 도정정책 방향과 주민자치 현황을 반영하여 명칭은 다르지만 공모사업, 시군지원, 역량강화, 발굴확산 등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표 3-19〉 2021년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절차

단 계	내 용	비고
예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주민자치학교 활용, 설립단계부터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컨설팅 강화 	
↓		
도입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발굴 및 주민총회 운영 등 컨설팅, 사무국장 도입 -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전체 사업지의 컨설팅 등 지원 	*지원기간 3년 → 4년
↓		
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이 마련된 주민자치회 중 공모로 사업비 지원 - 도민참여예산 연계, 주민 참여예산 확대 	
↓		
확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역(2개소) 개방형 읍·면·동장제 본격 운영 - 공주 중학동, 당진 신평면 시범지역 선정('20.~'21.) 개소별 행·재정 지원 	*개소별 (5천만원 ~ 2억원)

2)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충청남도에서는 2018년부터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충청남도 전체 읍·면·동 수는 208개이며, 2023년 6월말 기준 약 73.6%인 153개소가 주민자치회를 운영중이다. 주민자치회의 전환과 운영은 2020년 이전 67개소, 2021년 35개소, 2022년 16개소, 2023년 35개소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군별 주민자치회 개소수는 천안시, 아산시가 각 1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시, 부여군 각 16개소, 서산시, 논산시 각 1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환비율은 태안군, 금산군이 각각 25.0%, 12.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2023년 6월말 기준)

구 분	읍면동수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전환비율
충청남도	208	67	35	16	35	153	73.6%
천안시	31	5		5	7	17	54.8%
공주시	16	2	14			16	100.0%
보령시	16	1	1			2	12.5%
아산시	17	4		1	12	17	100.0%
서산시	15	2	13			15	100.0%
논산시	15	15				15	100.0%
계룡시	4	1	1			2	50.0%
당진시	14	14				14	100.0%
금산군	10	1				1	10.0%
부여군	16	4			12	16	100.0%
서천군	13	6	1	2	2	11	84.6%
청양군	10	2	2	6		10	100.0%
홍성군	11	6	1	2	2	11	100.0%
예산군	12	3	1			4	33.3%
태안군	8	1	1			2	25.0%

충청남도내 153개 주민자치회의 유형은 충남형 34개, 행안부형 91개이며, 충남형과 행안부형이 중복되는 주민자치회는 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전환 53개소가 나타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3-21〉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유형(모형) 현황

(2023년 6월 14일 기준)

구 분	총남형	행안부형	자율전환	중복
충청남도	34	91	53	27
천안시	4	5	12	4
공주시	2	16	0	2
보령시	2	1	0	1
아산시	0	4	13	0
서산시	2	15	0	2
논산시	0	12	3	0
계룡시	2	1	0	1
당진시	1	14	0	1
금산군	1	1	0	1
부여군	3	4	10	3
서천군	6	6	4	5
청양군	3	2	7	2
홍성군	4	6	4	3
예산군	2	3	0	1
태안군	2	1	0	1

(2)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충청남도의 인구중 18세 이상 인구수는 1,795,797명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5,834명으로 18세 이상 인구 대비 주민자치 위원 비율은 0.32%이다. 시·군별 주민자치회 위원수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82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인구대비 비율은 0.15%로 가장 낮았다. 반면 청양군은 주민자치회 위원수가 322명으로 낮은편에 속하지만 인구대비 주민자치회 위원수 비율이 1.16%로 가장 높았다.

〈표 3-22〉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참여 위원수 및 비율

구 분	계	18세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수	18세이상 주민자치위원수 비율
충청남도	2,119,257	1,795,797	5,834	0.32%
천안시	658,486	545,708	823	0.15%
공주시	103,145	91,739	391	0.43%
보령시	98,408	86,426	441	0.51%
아산시	324,580	263,907	417	0.16%
서산시	176,645	148,132	387	0.26%
논산시	114,483	100,327	414	0.41%
계룡시	43,331	34,647	73	0.21%
당진시	167,092	139,483	359	0.26%
금산군	50,477	44,876	238	0.53%
부여군	63,774	57,719	507	0.88%
서천군	50,745	46,049	424	0.92%
청양군	30,440	27,830	322	1.16%
홍성군	99,324	84,388	399	0.47%
예산군	76,801	69,188	398	0.58%
태안군	61,526	55,378	241	0.44%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1.12. 기준, 충청남도 내부자료 22.12.31. 기준

충청남도의 시·군별 주민자치회 위원의 성별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총 5,834명의 위원중 남성은 3,362명(57.6%), 여성은 2,472명(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내 시·군 중 계룡시(남성 43.8%, 여성 56.2%)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모두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2022 충청남도 시군별 주민자치위원 성별 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명)	남자		여자	
		(명)	비율(%)	(명)	비율(%)
충청남도	5,834	3,362	57.6	2,472	42.4
천안시	823	474	57.6	349	42.4
공주시	391	213	54.5	178	45.5
보령시	441	248	56.2	193	43.8
아산시	417	211	50.6	206	49.4
서산시	387	228	58.9	159	41.1
논산시	414	251	60.6	163	39.4
계룡시	73	32	43.8	41	56.2
당진시	359	184	51.3	175	48.7
금산군	238	162	68.1	76	31.9
부여군	507	301	59.4	206	40.6
서천군	424	247	58.3	177	41.7
청양군	322	192	59.6	130	40.4
홍성군	399	238	59.6	161	40.4
예산군	398	253	63.6	145	36.4
태안군	241	128	53.1	113	46.9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12. 31. 기준)

충청남도 시·군별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주민자치위원 중 60대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1.7%, 70대 이상 9.5%, 40대 9.3%, 30대 1.5%, 20대 0.2%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내 시·군별 현황에서도 대부분의 시·군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별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충청남도	0.2	1.5	9.3	31.7	47.7	9.5
천안시	0.1	2.3	12.0	36.6	40.8	8.2
공주시	0.0	2.3	13.3	31.5	45.8	7.2
보령시	0.5	1.8	11.3	30.2	46.9	9.3
아산시	0.2	1.0	10.1	39.4	43.5	5.8
서산시	0.0	1.0	9.0	31.5	47.8	10.6
논산시	1.0	2.2	9.5	29.1	50.4	7.8
계룡시	0.0	1.4	11.0	35.6	45.2	6.8
당진시	0.0	3.9	18.1	35.1	34.3	8.6
금산군	0.0	0.8	6.3	26.5	58.4	8.0
부여군	0.0	0.4	4.2	25.2	55.8	14.4
서천군	0.7	1.2	9.7	27.7	47.5	13.2
청양군	0.3	0.9	2.2	30.1	59.0	7.5
홍성군	0.3	1.5	8.0	31.3	45.6	13.3
예산군	0.0	0.3	10.0	29.6	49.9	10.3
태안군	0.4	2.5	7.9	39.8	41.9	7.5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12. 31. 기준)

충청남도의 시·군별 주민자치회 위원의 직업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주민자치위원 중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종사자가 28.0%, 주부 14.9%, 회사원 9.3%, 기타 4.3%, 무직 3.9%, 공무원 0.6%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군별 특성을 살펴보면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은 충청남도 전체 비율과 유사하게 농·축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천안시, 아산시, 태안군은 자영업의 비율이 각각 48.8%, 40.3%, 38.6%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는 주부(20.5%)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충청남도 시·군별 주민자치회 위원 직업별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자영업	주부	회사원	농축수산	공무원	무직	기타
충청남도	28.0	14.9	9.3	39.0	0.6	3.9	4.3
천안시	48.8	15.6	18.7	9.3	0.1	5.4	2.1
공주시	25.6	18.4	5.6	39.1	0.8	7.2	3.3
보령시	28.6	15.2	11.8	35.5	1.1	2.5	5.2
아산시	40.3	21.3	9.1	15.6	0.0	4.6	9.1
서산시	26.6	15.0	9.6	34.9	0.3	7.0	6.7
논산시	25.9	10.7	5.6	49.9	0.2	1.9	5.8
계룡시	20.5	26.0	20.5	1.4	4.1	11.0	16.4
당진시	23.4	20.3	14.1	27.7	0.0	2.5	11.9
금산군	20.6	4.6	9.7	60.9	0.0	2.9	1.3
부여군	11.8	10.2	2.2	69.8	1.8	3.4	0.8
서천군	21.3	18.9	3.8	47.5	1.4	3.1	4.0
청양군	15.8	9.6	6.5	59.9	0.0	6.5	1.6
홍성군	23.3	12.0	9.3	51.9	0.0	2.3	1.3
예산군	22.8	16.4	4.3	53.2	0.5	1.3	1.5
태안군	38.6	12.4	10.4	31.5	0.8	0.4	5.8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12. 31. 기준)

충청남도의 시·군별 주민자치회 위원의 타 주민조직의 겸임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위원수 5,834명중 2,625명이 주민자치회와 타 주민조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타 주민조직중 이·통장을 겸직하고 있는 위원이 4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421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2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특징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과 타 주민조직 간의 겸직비율이 128.7%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부여군은 9.3%로 가장 낮았다.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고문 형식으로 참여하는 수는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9개 시·군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가 7명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청양군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접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 타 주민조직 겸임 중복 체크

〈표 3-26〉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위원 타 주민조직 검임 현황

구분	주민 자치 위원수	위원 타 주민조직 검임 세부현황 (중복 체크 기능)												지방의원		중복수	중복 비율 (%)
		계	이통장	새마을 운동 조직	임주자 대표 회의	자율 방범대	자유 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도시 재생 주민 협의체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지역 개발 위원회	기타	고문으로 참여하는 지방의원 수	지방 의원이 위원인 경우		
충청남도	5834	2624	571	421	38	129	12	179	229	17	302	159	567	23	1	2625	45.0
천안시	823	276	59	30	5	3	3	27	5	2	115	4	23	1	0	276	33.5
공주시	391	129	0	25	1	2	0	3	23	0	49	0	26	2	0	129	33.0
보령시	441	305	53	44	6	13	3	24	43	3	111	3	2	1	0	305	69.2
아산시	417	145	37	21	2	7	0	11	6	5	3	0	53	2	0	145	34.8
서산시	387	498	55	53	14	14	0	16	31	1	0	36	278	0	0	498	128.7
논산시	414	183	68	43	2	17	1	8	7	0	5	12	20	0	0	183	44.2
계룡시	73	29	5	0	5	2	2	0	5	0	0	0	10	0	0	29	39.7
당진시	359	160	16	21	0	3	0	6	16	5	1	21	71	7	0	160	44.6
금산군	238	76	30	11	0	10	0	12	6	0	0	2	5	1	1	77	32.4
부여군	507	47	13	11	1	4	1	0	0	0	0	1	16	0	0	47	9.3
서천군	424	183	65	34	0	9	1	10	25	1	4	25	9	0	0	183	43.2
청양군	322	117	36	32	1	15	0	13	1	0	0	1	18	1	0	117	36.3
홍성군	399	146	49	29	0	7	0	21	17	0	10	9	4	1	0	146	36.6
예산군	398	248	74	51	0	17	0	27	27	0	3	39	10	7	0	248	62.3
태안군	241	82	11	16	1	6	1	1	17	0	1	6	22	0	0	82	34.0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12. 31. 기준)

3)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다음은 2022년에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한 11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중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치계획의 수립 또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회의는 주민자치회 간 차이는 있으나 평균 13.8회가 개최되어 월 1회이상의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2022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2022년 기준)

시·군·구	읍·면·동	연간 회의 개최 실적 (회)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전용사무 공간
			횟수	총 참여인원		
천안시 (9)	풍세면	46	1	-	O	O
	성남면	10	1	400	O	O
	원성1동	11	1	24	O	O
	신안동	10	1	100명	O	O
	성환읍	24	4	1000	O	O
	성정1동	14	1	150	O	O
	쌍용2동	12	1	2000명	O	O
	쌍용3동	12	1	-	O	O
	백석동	13	1	200	O	O
공주시 (16)	유구읍	8	1	500	O	O
	이인면	13	1	456	O	X
	탄천면	7	1	70	O	X
	계룡면	8	1	200	O	O
	반포면	8	1	50	X	X
	의당면	8	1	500	O	O
	정안면	6	1	300	O	O
	우성면	7	1	200	X	X
	사곡면	8	1	534	O	O
	신평면	9	1	200	X	X

시·군·구	읍·면·동	연간 회의 개최 실적 (회)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전용사무 공간
			횟수	총 참여인원		
	중학동	5	1	412	○	○
	웅진동	7	1	1020	○	○
	금학동	12	1	100	○	○
	옥룡동	10	1	1059	○	×
	신관동	12	1	2001	×	○
	월송동	12	1	200	○	○
보령시 (2)	대천3동	20	-	-	-	-
	대천4동	19	-	-	-	-
아산시 (5)	배방읍	10	1	546	○	○
	탕정면	12	0	0	×	○
	온양3동	12	1	1500	×	○
	온양5동	9	1	1000	○	○
	온양6동	12	1	70	○	○
서산시 (15)	대산읍	15	1	500	○	○
	인지면	14	1	200	○	○
	부석면	22	1	200	○	○
	팔봉면	12	1	100	○	○
	지곡면	12	1	466	○	○
	성연면	12	1	602	○	○
	음암면	10	1	300	○	○
	운산면	18	1	300	○	○
	해미면	14	1	600	○	○
	고북면	12	1	250	○	×
	부춘동	22	1	1093	○	×
	동문1동	22	1	150	○	×
	동문2동	14	1	300	○	○
	수석동	12	1	638	○	○
	석남동	11	1	450	○	○
논산시 (15)	강경읍	16	1	563	○	○
	연무읍	13	1	1,270	○	○
	성동면	22	1	500	○	○
	광석면	13	1	730	○	○
	노성면	18	1	102	○	○
	상월면	17	1	300	○	○
	부적면	14	1	700	○	○

시·군·구	읍·면·동	연간 회의 개최 실적 (회)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전용사무 공간
			횟수	총 참여인원		
	연산면	13	1	540	○	○
	별곡면	12	1	250	○	○
	양촌면	24	1	500	○	○
	가야곡면	14	1	328	○	○
	은진면	13	1	398	○	○
	채운면	22	1	41	○	○
	취암동	24	1	300	○	○
	부창동	12	1	583	○	○
계룡시 (2)	두마면	24	1	200	○	×
	신도안면	12	1	200	○	○
당진시 (14)	합덕읍	8	1	1,214	○	○
	송악읍	14	1	1,857	○	○
	고대면	13	1	609	○	○
	석문면	29	1	696	○	○
	대호지면	8	1	490	○	○
	정미면	11	1	667	○	○
	면천면	11	1	631	○	○
	순성면	13	1	737	○	○
	우강면	15	1	764	○	○
	신평면	35	1	776	○	○
	송산면	9	1	702	○	○
	당진1동	9	1	1,034	○	○
	당진2동	14	1	1,353	○	○
	당진3동	19	1	1,235	○	○
금산군	추부면	11	-	-	×	○
부여군 (4)	와산면	12	1	189	○	○
	내산면	12	1	172	○	○
	홍산면	12	1	257	○	○
	초촌면	12	1	222	○	○
서천군 (9)	장항읍	12	1	120	○	○
	서천읍	20	0	0	○	○
	화양면	36	1	100	○	○
	한산면	12	1	300	○	○
	마산면	12	1	200	○	○
	시초면	10	1	150	×	×

시·군·구	읍·면·동	연간 회의 개최 실적 (회)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전용사무 공간
			횟수	총 참여인원		
	문산면	10	1	150	X	O
	비인면	21	1	294	O	O
	서면	9	2	700	X	O
청양군 (7)	청양읍	14	1	416	O	O
	운곡면	15	1	30	O	O
	정산면	19	0	-	X	O
	청남면	15	0	-	X	O
	장평면	15	0	-	X	O
	남양면	12	0	-	X	O
	비봉면	18	0	-	O	O
홍성군 (7)	홍성읍	11	1	386	O	O
	광천읍	13	1	327	O	O
	홍북읍	8	1	306	O	O
	홍동면	11	1	1,500	O	O
	장곡면	11	1	-	O	O
	결성면	6	1	150	O	O
	구항면	9	1	300	O	O
예산군 (4)	예산읍	11	1	150	O	O
	신양면	16	1	-	O	O
	대흥면	9	1	101	O	X
	덕산면	11	1	185	O	O
태안군 (2)	원북면	13	1	300	O	O
	이원면	14	1	337	O	O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12. 31. 기준)

2022년 도내 주민자치회는 147개 공모사업(2,299,139천원)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시·군·구 공모사업이 81개로 가장 많았으나, 지원 예산액은 시·도 공모사업이 1,396,22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112개 주민자치회 중 63개의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을 수행했으며, 주민자치회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2.3건(36,767천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2022 주민자치회 공모 사업 추진 실적

(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개)

시·군·구	읍·면·동	계		정부 및 공공기관 공모		시도 공모		시군구 공모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2,299,139	147	143,000	5	1,396,229	61	759,910	81
천안시 (10)	풍세면	40,000	2					40,000	2
	성남면	-	-						
	원성1동	30,000	1					30,000	1
	신안동	30,000	-			30,000			
	성환읍	72,000	5			72,000	5		
	성정1동	80,000	4	10,000	1	40,000	2	30,000	1
	성정2동	-	-						
	쌍용2동	-	-						
	쌍용3동	-	-						
	백석동	60,000	2			30,000	1	30,000	1
공주시 (16)	유구읍	6,000	2					6,000	2
	이인면	18,000	3					18,000	3
	탄천면	20,000	2					20,000	2
	계룡면	-	-						
	반포면	10,000	2					10,000	2
	의당면	18,000	3					18,000	3
	정안면	38,000	2			30,000	1	8,000	1
	우성면	13,000	3					13,000	3
	사곡면	1,200	2					1,200	2
	신평면	12,000	3					12,000	3
	중학동	30,000	1					30,000	1
	웅진동	19,000	3					19,000	3

시·군·구	읍·면·동	계		정부 및 공공기관 공모		시도 공모		시군구 공모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2,299,139	147	143,000	5	1,396,229	61	759,910	81
	금학동	48,000	4			26,000	1	22,000	3
	옥룡동	5,000	1					5,000	1
	신관동	31,000	4			6,000	1	25,000	3
	월송동	2,000	1					2,000	1
보령시 (2)	대천3동	31,000	2			26,000	1	5,000	1
	대천4동	30,000	1		-	30,000	1		-
아산시 (5)	배방읍	-	-	-	-	-	-	-	-
	탕정면	-	-						
	온양3동	9,860	1			9,860	1		
	온양5동	-	-						
	온양6동	-	-						
서산시 (15)	대산읍	32,470	2	-	-	30,000	1	2,470	1
	인지면	-	-	-	-	-	-	-	-
	부석면	30,000	1	-	-	30,000	1	-	-
	팔봉면	-	-	-	-	-	-	-	-
	지곡면	-	-	-	-	-	-	-	-
	성연면	-	-	-	-	-	-	-	-
	음암면	-	-	-	-	-	-	-	-
	운산면	2,740	1	-	-	-	-	2,740	1
	해미면	3,000	1	-	-	-	-	3,000	1
	고북면	-	-	-	-	-	-	-	-
	부춘동	-	-	-	-	-	-	-	-
	동문1동	-	-	-	-	-	-	-	-
	동문2동	8,000	1	-	-	8,000	1	-	-
	수석동	-	-	-	-	-	-	-	-
	석남동	-	-	-	-	-	-	-	-
논산시 (15)	강경읍	-	-	-		-			
	연무읍	-	-						
	성동면	-	-						
	광석면	13,000	1			13,000	1		
	노성면	-	-						
	상월면	-	-						
	부적면	-	-						

시·군·구	읍·면·동	계		정부 및 공공기관 공모		시도 공모		시군구 공모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2,299,139	147	143,000	5	1,396,229	61	759,910	81
	연산면	-	-						
	벌곡면	-	-						
	양촌면	-	-						
	가야곡면	-	-						
	은진면	-	-						
	채운면	-	-	-	-	-	-		
	취암동	-	-						
	부창동	-	-	-	-	-	-		
계룡시 (2)	두마면	26,000	1			26,000	1		
	신도안면	30,000	1			30,000	1		
당진시 (14)	합덕읍	110,000	2			110,000	2		
	송악읍	62,000	5	-	-	13,000	1	49,000	4
	고대면	83,579	3			75,579	1	8,000	2
	석문면	6,000	1					6,000	1
	대호지면	6,000	1	-	-			6,000	1
	정미면	14,600	2			8,600	1	6,000	1
	면천면	115,800	7	58,000	2	5,000	1	52,800	4
	순성면	99,000	6			80,000	3	19,000	3
	우강면	167,890	10			167,890	10		
	신평면	136,000	6			120,000	3	16,000	3
	송산면	64,700	6					64,700	6
	당진1동	30,000	1					30,000	1
	당진2동	6,000	1					6,000	1
	당진3동	21,000	2	15,000	1			6,000	1
금산군	추부면	3,000	1			3,000	1		
부여군 (4)	외산면	-	-	-	-	-	-	-	-
	내산면	60,000	2	-	-	60,000	2	-	-
	홍산면	63,500	4	-	-	63,500	4	-	-
	초촌면	-	-	-	-	-	-	-	-
서천군 (9)	장항읍	-	-	-	-	-	-	-	-
	서천읍	4,000	1	-	-	-	-	4,000	1
	화양면	30,000	2	-	-	26,000	1	4,000	1
	한산면	-	-	-	-	-	-		

시·군·구	읍·면·동	계		정부 및 공공기관 공모		시도 공모		시군구 공모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예산	사업 개수
		2,299,139	147	143,000	5	1,396,229	61	759,910	81
	마산면	4,000	1	-	-	-	-	4,000	1
	시초면	4,000	1	-	-	-	-	4,000	1
	문산면	-	-	-	-	-	-	-	-
	비인면	-	-	-	-	-	-	-	-
	서면	-	-	-	-	-	-	-	-
청양군 (7)	청양읍	-	-						
	운곡면	35,000	1			35,000	1		
	정산면	40,000	3			30,000	2	10,000	1
	청남면	-	-						
	장평면	-	-						
	남양면	-	-	-	-	-	-	-	-
	비봉면	37,000	2					37,000	2
홍성군 (7)	홍성읍	30,000	1					30,000	1
	광천읍	-	-						
	홍북읍	-	-						
	홍동면	-	-						
	장곡면	90,000	2	60,000	1	30,000	1		
	결성면	58,800	3			58,800	3		
	구항면	58,000	4			13,000	1	45,000	3
예산군 (4)	예산읍	-	-						
	신양면	26,000	1			26,000	1		
	대흥면	-	-						
	덕산면	-	-	-	-	-	-	-	-
태안군 (2)	원북면	8,000	1			8,000	1		
	이원면	26,000	1			26,000	1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12. 31. 기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업무⁹⁾, 협의업무¹⁰⁾, 수탁업무¹¹⁾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시·군별 주민자치회의 수행한 업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 업무는 보령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모두 수행되었으며, 협의업무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14개 시·군에서 수행되었다. 수탁업무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9개 시·군에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 업무는 주로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 환경 개선, 봉사활동 등 각 주민자치회의 현황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협의 업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책제안회, 소통협력 사업, 환경정화활동 등 주민 생활에 관련이 있는 사무 중 주민자치회에서 수행가능한 사무들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사무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들에 대한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주민자치회별로 사업의 내용이나 횟수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업무가 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모사업과는 다르게 획일적이지 않으면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사무들이 많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9)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10)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11)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표 3-29〉 2022 시·군 주민자치회별 수행 사무

구분	연간 수행 사무	
천안시	협업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식물 케어데이 협업단체 참가 건 -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 - 주민 참여 예산 결정 - 주민자치 센터운영 - 주민자치 문화교실
	수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함께 걸어요』행사 - 감자캐기, 사랑의열무수확 - 공모사업(무지개마을학교) - 공유 우산 - 꽃길 조성 및 꽃동산 정비 - 남산공원, 중앙시장 환경정비 활동 - 농산물 교류 행사 - 도배장판 지원사업 - 독거 어르신 생일 잔치 - 독거노인 야구르트 지원사업 - 마을 정비 활동 (마을청소) - 마을신문 - 마을축제개최 - 마을행사(고구마 심기, 김치나눔 등) - 무지개 마을학교 - 문화교실운영 - 반려인 펫티켓 캠페인 - 보행 보조가 나눔 - 부채이마을 축제 - 불우이웃돕기 성금 - 사랑의 감자심기 행사 - 생활문화 캠페인 - 선진지견학 - 시민품격 높이기 『내가 먼저 할게요』캠페인 실시 - 아나바다 쌍용문화장터 - 안심순찰 - 우리 마을 꽃길 조성 - 음악회 개최 - 이웃돕기 사업 - 이웃사람고구마식재 - 이팝나무길 가꾸기 행사 - 일봉산음악회 - 일자리&수익 창출 농장 운영 - 자율 방범 활동 - 자치계획 수립 - 장애인 인식개선 - 저소득층 청소년 의류교환권 기탁 - 제7회 성환읍 주민 제안 대회 - 제로웨이스트 - 제빵봉사 - 주민 기자단 육성 교육 - 주민의견수렴 - 주민자치 교통봉사단 - 주민자치 문화교실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주민총회 - 중증장애인 가정 소득 봉사 - 지역특화교육 - 찾아가는심폐소생술 - 천변길꽃길조성 - 청소년 주민자치회 운영 - 출산장려 지원사업 - 코로나19 캠페인 - 풍서천 개발 T/F팀 운영 - 풍세장터 - 학교 숲대설치 - 화재 예방 교육 - 효음악회
공주시	협업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신청 건 등 - 안건의결

구분	연간 수행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천 산책로 조성사업 - 이인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협의 - 정기회의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 주민총회 의결 사업 협의(이인면)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자치사업 추진 - 마을교육자치회 배드민턴 교실 운영 - 마을소식지 발간 - 마을 책자 발간 - 마을 축제 - 자치계획 수립 - 주민 화합행사 개최 -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 주민자치 사업공모 및 추진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회 추진계획 수립 - 주민참여사업 - 주민총회 - 철화분청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 사업 추진 - 학습모임 지원 사업 - 환경 정화 활동 - 힐링장터
아산시	협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심의 - 주민참여예산 회의
	수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카페 운영 - 작은도서관 운영 -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 라인댄스, 풍물교실, 요가교실, 줌바댄스, 근력, 축구교실, 헬스장) -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1만세행사 - 그린하우스 - 꽃길 만들기 - 꽃묘목심기행사 - 남방제휴공던지기 - 도고면민 한마음 걷기대회 추진 - 둘레길 걷기대회 - 마을축제(걷기대회) - 마을축제(발표회, 추모제) - 마을학교 운영 - 문화공연 - 반찬나눔 봉사활동 - 성안말토성둘레길 - 신창 타임즈 운영 - 쓰담운동 - 아나바다 - 양심거울 - 영화상영 - 전시회 - 주민총회 개최 - 환경 정화 활동
서산시	협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동 반사경 설치사업 - 주민자치센터 방역 및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 등 논의 - 주민자치센터 운영

구분	연간 수행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개정 - 주민참여 예산 등 협의 - 주민참여예산 및 도민참여예산 결정 - 친환경 폐자재처리 개선
	수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결산 등 협의 - 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요조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계획, 운영, 결과 - 체력단련실 운영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봉사활동 등 자치사업 협의 -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 꽃길조성사업 - 꽃심기 행사 -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 독거어르신 사랑의 의약품 지급 등 - 마실길 걷기대회 - 마을 홍보영상 제작 - 마을소식지 발간 - 무료 특강 개최 - 보조금 사업 협의 - 사랑의 고구마 심기 - 사전 투표 방법 - 사진공모전 - 자매결연 자치회 방문 - 자율방범활동 - 자치계획 수립 - 자치회 사업 협의 - 주민자치사업 협의 등 결정 - 주민자치 역량교육 관련 협의 -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 주민제안 한마당 - 주민총회 개최 - 주민총회 안건 - 청지천 힐링 꽃길 조성
논산시	수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형성 - 교육 활동 - 마을경관조성 - 소식지발간 - 자치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사업 - 주민총회 개최
계룡시	협의업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레길 산책로 조성 - 문화공연 - 발표회 및 전시회 - 선진지 견학 - 아나바다 행사 - 주민참여예산 공모신청 - 주민총회 - 타지역 주민자치협의회 방문
당진시	협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참여 예산제 - 마을복지 계획단 - 시책제안회 - 주민 소통 협력사업 - 주민 참여 예산제 - 주민참여예산 결정
	수탁업무	- 신평여성청소년자치센터

구분	연간 수행 사무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콘서트 - 되게꾸니 발간문화장터 - 마을계획 수립 - 마을복지 계획 - 마을신문발간 - 마을자치 활동 - 마을축제 - 면민소통의 날 - 문화축제 - 발표회 - 소규모 주민자치사업 - 소통협력사업 - 시책제안회 - 자체사업운영(어울림 한마당,산타행사) - 자치회제안사업 - 작은음악회 - 주민자치 프로그램 -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 주민총회 개최 - 주민총회 사업실행 - 지역음악회 - 프로그램 발표회 - 환경캠페인 - 활성화간담회
금산군	협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특화 공모사업 신청 - 주민자치프로그램 재개 협의 -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공모사업 내용 결정 - 프로그램운영 관련 주민총회 및 공모사업관련 협의
	수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제 개최 논의 - 비호산 야간경관등 설치 - 제주 동흥동 주민자치위원회 교류 - 주민자치특화사업 등 - 축제 참여 계획 협의
부여군	협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운영 협의
	수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수립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서천군	협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 추진 관련 - 주민자치 특색 공모 예산사업 결정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예산사업 및 작은도서관 설치 - 환경 정화 활동
	수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래방사업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 - 교육 - 낙상방지문턱 사업 - 보조사업 - 사랑의 꽃바구니 만들기 사업 - 산책로 걷기 행사 - 소식지 발행 - 어울림한마당 - 우리 마을 쓰레기를 부탁해 사업 - 자치계획 수립 - 정화 활동 - 주민참여예산

구분	연간 수행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읍 해맞이 행사 - 선진지 견학 - 주민총회
청양군	협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사항 제안 등
	수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래방 사업 - 생활 공구 대여 - 프로그램운영 -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 자체 사업 - 장난감 은행 - 주민세 환원 동네 자치 -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자치프로그램 -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 주민총회 - 청소년 주민자치회
홍성군	협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광장정비 - 이야기 돌레길조성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협의 - 주민참여예산결정 - 주민총회 - 행복이 꽃피는 우리마을 협의 - 당면업무협의 등
	주민자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진 찍기 - 관광 책자 발간 - 교육간담회 - 마을소식지 발간 - 마중버스 토론회 - 백중놀이 개최 - 아기탄생 마을잔치 지원 - 영농폐기물수거 - 자연 정화 활동 - 자치계획 수립 - 주말 요리 교실 - 주민 소식지 제작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총회 개최 - 폐건전지교환 - 행복나눔공동빨래방 운영

2022년 도내 112개 주민자치회의 평균 예산액은 50,35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업비 평균 24,865천원, 위원수당 평균 14,3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운영중인 곳은 15개소였으며, 평균 15,206천원이 간사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0〉 2022 충청남도 주민자치회별 예산액

(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개)

시·군·구	읍·면·동	계	자원 봉사자 실비	간사 수당	위원 수당	사업비	전문지원 기관운영 (위탁, 용역 등)	기타
천안시 (10)	풍세면	63,100	-	-	21,600	41,500	-	-
	성남면	28,800			28,800			
	원성1동	50,661		5,631	15,030	30,000		
	신안동	74,020			21,960	52,060		
	성환읍	100,000			21,000	79,000		
	성정1동	107,530			28,800	62,400		16,330
	성정2동	33,198			21,960	11,238		
	쌍용2동	153,000	-	-	22,000	131,000		
	쌍용3동	90,640	-	-	21,960	57,400		11,280
	백석동	101,140			21,600			79,540
공주시 (16)	유구읍	10,500			10,500			
	이인면	10,500			10,500			
	탄천면	10,500			10,500			
	계룡면	47,800			7,800	40,000		
	반포면	55,500			10,500	45,000		
	의당면	9,450			9,450			
	정안면	10,500			10,500			
	우성면	10,500			10,500			
	사곡면	31,500			10,500			21,000
	신평면	12,000				12,000		
	중학동	30,000		6,630		21,870		1,500
	웅진동	10,500			10,500			
	금학동	58,500			10,500	48,000		
	옥룡동	16,900			10,500	6,400		

시·군·구	읍·면·동	계	자원 봉사자 실비	간사 수당	위원 수당	사업비	전문지원 기관운영 (위탁, 용역 등)	기타
보령시 (2)	신관동	9,600			9,600			
	월송동	10,500			10,500			
	대천3동	16,110	-	-	16,110	-	-	-
	대천4동	32,000	-	30,000			-	2,000
아산시 (5)	배방읍	10,800	-	-	10,800	-	-	-
	탕정면	10,800			10,800			
	온양3동	16,330	6,000	-	10,330	-	-	-
	온양5동	170,664			9,000	30,000		131,664
	온양6동	42,560			7,560	30,000		5,000
서산시 (15)	대산읍	33,800	-	-	16,800	14,000	-	3,000
	인지면	31,400	-	-	14,400	14,000	-	3,000
	부석면	36,200	-	-	19,200	14,000	-	3,000
	팔봉면	30,440	-	-	13,440	14,000	-	3,000
	지곡면	31,400	-	-	14,400	14,000	-	3,000
	성연면	37,800	-	-	16,800	18,000	-	3,000
	음암면	44,000	-	-	24,000	17,000	-	3,000
	운산면	31,400	-	-	14,400	14,000	-	3,000
	해미면	29,000	-	-	12,000	14,000	-	3,000
	고북면	31,400	-	-	14,400	14,000	-	3,000
	부춘동	33,800	-	-	16,800	14,000	-	3,000
	동문1동	33,800	-	-	16,800	14,000	-	3,000
	동문2동	33,440	-	-	13,440	17,000	-	3,000
	수석동	31,400	-	-	14,400	14,000	-	3,000
	석남동	33,800	-	-	16,800	14,000	-	3,000
논산시 (15)	강경읍	18,080	-	-	10,080		-	8,000
	연무읍	18,080			10,080			8,000
	성동면	18,080			10,080			8,000
	광석면	18,080			10,080			8,000
	노성면	18,080			10,080			8,000
	상월면	18,080			10,080			8,000
	부적면	18,080			10,080			8,000
	연산면	18,080			10,080			8,000
	벌곡면	18,080			10,080			8,000
	양촌면	18,080			10,080			8,000

시·군·구	읍·면·동	계	자원 봉사자 실비	간사 수당	위원 수당	사업비	전문지원 기관운영 (위탁, 용역 등)	기타
	가야곡면	18,080			10,080			8,000
	은진면	18,080			10,080			8,000
	채운면	18,080	-	-	10,080			8,000
	취암동	18,080			10,080			8,000
	부창동	18,080	-	-	10,080		-	8,000
계룡시 (2)	두마면	16,425			9,720	5,280	-	1,425
	신도안면	27,950			9,720	17,280		950
당진시 (14)	합덕읍	89,700		-	31,200		28,500	30,000
	송악읍	31,200	-	-	31,200		-	
	고대면	21,820	120		20,300		1,400	
	석문면	137,060			24,900	112,160		
	대호지면	28,100			23,100	5,000		
	정미면	29,700			29,700			
	면천면	51,131	5,000		29,100	17,031		
	순성면	33,400			25,200			8,200
	우강면	31,200			31,200			
	신평면	31,200			31,200			
	송산면	30,600		2,400	28,200			
	당진1동	-						
	당진2동	-						
	당진3동	-						
금산군	추부면	20,970		12,430	6,540			2,000
	외산면	20,562	-	17,000	3,562	-	-	-
부여군 (4)	내산면	80,562	-	17,000	3,562	60,000	-	-
	홍산면	84,062	-	17,000	3,562	63,500	-	-
	초촌면	7,234	3,672	-	3,562	-	-	-
서천군 (9)	장항읍	278,000	-	-	18,000	200,000	-	60,000
	서천읍	174,000	-	-	13,500	100,000		60,500
	화양면	90,000	-	-	11,520	43,000		35,480
	한산면	256,000	-	-	18,000	200,000		38,000
	마산면	156,000	-	-	11,160	100,000		44,840
	시초면	122,118	-	-	9,000	100,000		13,118
	문산면	109,000	-	-	11,880	80,000		17,120
	비인면	191,000	-	-	10,080	100,000		80,920

시·군·구	읍·면·동	계	자원 봉사자 실비	간사 수당	위원 수당	사업비	전문지원 기관운영 (위탁, 용역 등)	기타
	서면	240,000	-	-	11,520	200,000		28,480
청양군 (7)	청양읍	100,800			42,000	52,000		6,800
	운곡면	42,000			42,000			
	정산면	-						
	청남면	59,400			29,400	30,000		
	장평면	51,000			21,000	30,000		
	남양면	29,400	-	-	29,400	-	-	-
	비봉면	63,600			42,000			21,600
홍성군 (7)	홍성읍	91,400		24,000	14,400	53,000		
	광천읍	47,080		24,000	10,080	13,000		
	홍북읍	47,800		24,000	10,800	13,000		
	홍동면	27,200		12,000	7,200	8,000		
	장곡면	115,000		12,000	-	103,000		
	결성면	92,600		12,000	8,800	71,800		
	구항면	50,200		12,000	7,200	31,000		
예산군 (4)	예산읍	20,000				20,000		
	신양면	-						
	대흥면	20,000				20,000		
	덕산면	19,031	-	-	-	19,031	-	-
태안군 (2)	원북면	91,599	5,040	-	30,000			56,559
	이원면	62,009	5,040		26,200			30,769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 12. 31. 기준)

4)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종합

충청남도는 정부 주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장기적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은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최고 의사 결정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 및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해 위상을 크게 높이하고자 하였으며, 위원 정원은 기존 20~30명에서 30~50명으로 늘리고 구성 비율은 주민 대표 50%, 직능 대표 30%, 전문가 대표 20% 등으로 개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읍·면·동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등으로 역할을 크게 넓혔으며,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기획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실무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의 보강을 지원하였다. 충청남도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역량단계별 지원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전체 읍·면·동 수는 208개이 중 2023년 6월말 기준 약 73.6%인 153개소가 주민자치회를 운영중이다. 충청남도내 153개 주민자치회의 유형은 충남형 34개, 행안부형 91개이며, 충남형과 행안부형이 중복되는 주민자치회는 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위원수는 5,834명으로 18세 이상 인구 대비 주민자치 위원 비율은 0.32%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성별은 남성은 3,362명(57.6%), 여성은 2,472명(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성 비율은 60대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비율은 대부분의 시·군 주민자치회에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직업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농축수산업 종사자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종사자, 주부, 회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타 주민조직의 가입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위원수 5,834명중 2,625명이 주민자치회와 타 주민조직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주민조직중 이·통장을 겸직하고 있는 위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한 11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치계획의 수립 또한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도내 주민자치회는 147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회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2.3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에서 수행된 주민자치 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는 시·군 주민자치회별로 사업의 내용이나 횟수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업무가 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획일적이지 않으면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사무들이 많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2년 도내 112개 주민자치회의 평균 예산액은 50,35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업비, 위원수당 등이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운영중인 곳은 15개소였으며, 평균 15,206천원이 간사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 인식 분석

1) 조사대상 및 주요내용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의 기존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9일에서 2023년 10월 20일까지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21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유효한 설문지 193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일반 및 운영 인식,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개선, 기대 방향,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표 3-31〉 설문조사 개요(안)

구분	주요질문	척도
주민자치회 일반 및 운영 인식	1. 현 주민자치회 만족도	likert 5점 척도
	2. 현 주민자치회 제도의 행정 반영	
	3. 현 주민자치제도의 주민 참여성	
	4. 현 주민자치회의 일반 인식	명목척도
	5. 현 주민자치회와 행정과의 관계	명목척도
	6. 현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과의 관계	명목척도
	7. 현 주민자치회의 당면 문제	명목척도
	8. 향후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과의 관계	명목척도
주민자치회 모형 개선	9. 향후 주민자치회의 기능	명목척도
	10. 주민자치회의 필요 분과	명목척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지원	11. 주민자치회 활성화 개선 방안	명목척도
	12. 주민자치회 재정 확보 방안	명목척도

구분		주요질문			척도	
		13.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명목척도	
주민자치회 개선 기대		14. 개선 주민자치회 만족 의향			likert 5점 척도	
		15. 개선 주민자치회 행정 반영				
		16. 개선 주민자치회 주민 참여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① 남		② 여	명목척도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명목척도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신분	① 공무원	② 주민자치회 위원	③ 지역주민	명목척도	
	거주지역	()시·군 ()읍·면·동			단답형	
	거주기간	① 5년 미만	② 6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명목척도
④ 15년~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26명(65.3%)으로 여성 67명(34.7%)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6명(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39명(20.2%), 40대 29명(15.0%), 30대 27명(14.0%), 20대 12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신분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113명(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48명(24.9%), 지역주민 32명(16.6%)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거주 지역은 당진시 30명(1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천안시 22명 (11.4%), 홍성군 21명(10.9%), 보령시 18명(9.3%), 태안군 15명(7.8%), 논산 시 14명(7.3%) 아산시 14명(7.3%), 공주시 10명(5.2%), 금산군 9명(4.7%), 서 천군 9명(4.7%), 부여군 8명(4.1%), 청양군 7명(3.6%), 예산군 6명(3.1%), 계 룡시 5명(2.6%), 서산시 5명(2.6%)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은 20년 이상이 106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 미만이 38명(19.7%), 6 년~10년 미만이 19명(9.8%), 10년~15년 미만이 17명(8.8%), 15년~20년 미 만이 13명(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2〉 응답자 정보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26	65.3
	여성	67	34.7
연령	10대	0	0
	20대	12	6.2
	30대	27	14.0
	40대	29	15.0
	50대	39	20.2
	60대 이상	86	44.6
신분	공무원	48	24.9
	주민자치회 위원	113	58.5
	지역주민	32	16.6
거주지역	계룡시	5	2.6
	공주시	10	5.2
	금산군	9	4.7
	논산시	14	7.3
	당진시	30	15.5
	보령시	18	9.3
	부여군	8	4.1
	서산시	5	2.6
	서천군	9	4.7
	아산시	14	7.3
	예산군	6	3.1
	천안시	22	11.4
	청양군	7	3.6
	태안군	15	7.8
	홍성군	21	10.9
거주기간	5년 미만	38	19.7
	6년~10년 미만	19	9.8
	10년~15년 미만	17	8.8
	15년~20년 미만	13	6.7
	20년 이상	106	54.9
합계		193	100.0

2) 주민자치회 운영 및 개선 인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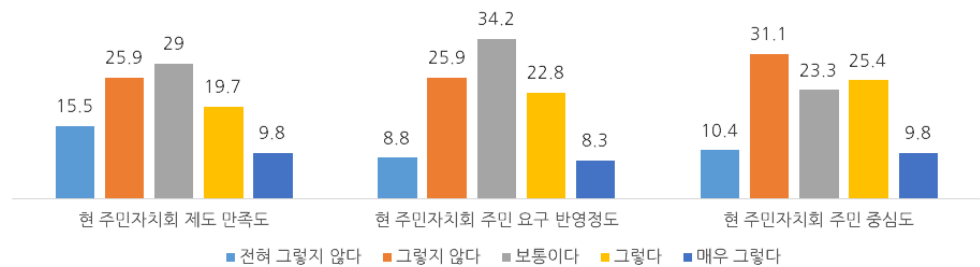
(1) 주민자치회 일반 및 운영 인식 분석

현재 주민자치회의 일반적 인식에 대해 묻는 문항은 주민자치회 제도 만족도, 주민자치회 주민 요구 반영 정도, 주민자치회 주민 중심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먼저 현 주민자치회 제도 만족도에 대하여 ‘그렇다’ 38명(19.7%)과 ‘매우 그렇다’ 19명(9.8%)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29.5%이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56명(29%), ‘그렇지 않다’ 50명(25.9%)과 ‘전혀 그렇지 않다’ 30명(15.5%)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1.4%로 나타났다.

현 주민자치회 주민 요구 반영 정도에 대하여 ‘그렇다’ 44명(22.8%)과 ‘매우 그렇다’ 16명(8.3%)으로 주민의 의견이 주민자치회에 잘 반영된다는 의견이 31.1%인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다가 66명인 34.2%, ‘그렇지 않다’ 50명(25.9%)과 ‘전혀 그렇지 않다’ 17명(8.8%)으로 주민의 의견이 주민자치회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4.7%로 나타났다. 현 주민자치회 행정의 주민 중심도에 대하여 ‘그렇다’ 49명(25.4%), ‘매우 그렇다’ 19명(9.8%)으로 행정의 주민 중심도에 대한 긍정 의견이 35.2%이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45명인 23.3%, ‘그렇지 않다’ 60명(31.1%), ‘전혀 그렇지 않다’ 20명(10.4%)으로 행정의 주민 중심도에 대한 부정 의견이 41.5%로 나타났다.

〈표 3-33〉 현 주민자치회 만족도 및 중심도 빈도 분석

구분		빈도	비율
현 주민자치회 제도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30	15.5
	그렇지 않다	50	25.9
	보통이다	56	29.0
	그렇다	38	19.7
	매우 그렇다	19	9.8
	합계	193	100.0
현 주민자치회 주민 요구 반영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7	8.8
	그렇지 않다	50	25.9
	보통이다	66	34.2
	그렇다	44	22.8
	매우 그렇다	16	8.3
	합계	193	100.0%
현 주민자치회 주민 중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20	10.4
	그렇지 않다	60	31.1
	보통이다	45	23.3
	그렇다	49	25.4
	매우 그렇다	19	9.8
	합계	1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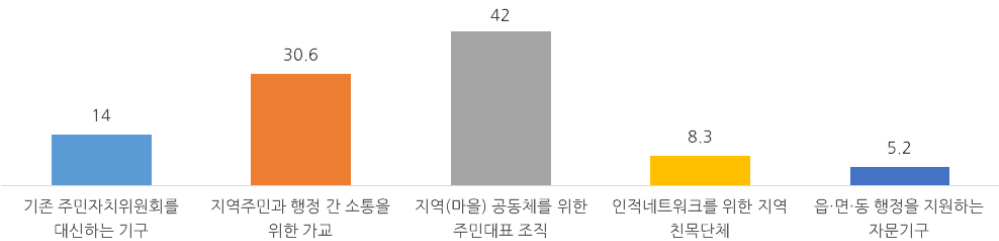


[그림 3-4] 현 주민자치회 만족도 및 중심도

‘주민자치회를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81명(4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가 59명(30.6%),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 27명(14.0%),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친목단체’가 16명(8.3%), ‘읍·면·동 행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10명(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4〉 주민자치회 성격 인식 빈도 분석

구분	빈도	비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	27	14.0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	59	30.6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	81	42.0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친목단체	16	8.3
읍·면·동 행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10	5.2
합계	193	100.0



[그림 3-5] 주민자치회 성격 인식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신분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를 선택한 응답자가 14명(29.2%),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을 선택한 응답자가 12명(25.0%),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와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친목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10명(20.8%), '읍·면·동 행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를 선택한 응답자가 2명(4.2%)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을 선택한 응답자가 60명(53.1%),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를 선택한 응답자가 32명(28.3%),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를 선택한 응답자가 13명(11.5%), '읍·면·동 행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를 선택한 응답자가 8명(7.1%)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를 선택한 응답자가 13명(40.6%),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을 선택한 응답자가 9명(28.1%),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친목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6명(18.8%),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를 선택한 응답자가 4명(12.5%)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신분 간에 응답 분포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자치회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표 3-35〉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성격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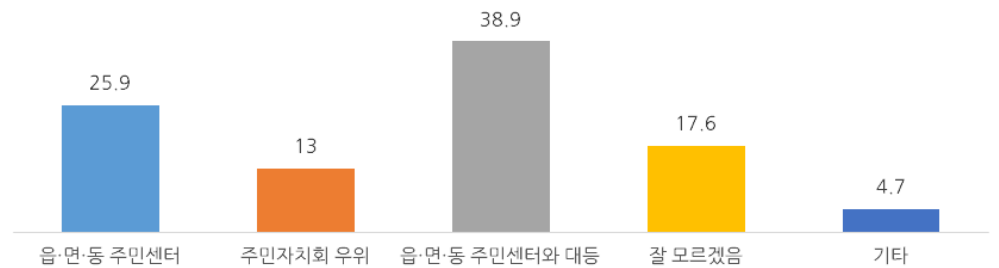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χ^2/p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	10 (20.8%)	13 (11.5%)	4 (12.5%)	36.762** (.000)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	14 (29.2%)	32 (28.3%)	13 (40.6%)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	12 (25.0%)	60 (53.1%)	9 (28.1%)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친목단체	10 (20.8%)	0 (0.0%)	6 (18.8%)	
읍·면·동 행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2 (4.2%)	8 (7.1%)	0 (0.0%)	
합계	48 (100.0%)	113 (100.0%)	32 (100.0%)	

*p<0.05, **p<0.01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등’이 38.9%인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가 우위’ 25.9%인 50명, ‘잘 모르겠음’이 17.6%로 34명, ‘주민자치회 우위’가 13.0%로 25명, 기타가 4.7%로 9명으로 나타났다.

〈표 3-36〉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 관계성 빈도 분석

구분	빈도	비율
읍·면·동 주민센터	50	25.9
주민자치회 우위	25	13.0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등	75	38.9
잘 모르겠음	34	17.6
기타	9	4.7
합계	193	100.0



[그림 3-6]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 관계성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관계성에 대한 응답을 응답자의 신분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등’을 선택한 응답자가 17명(35.4%), ‘주민자치회 우위’를 선택한 응답자가 11명(22.9%), ‘읍·면·동 주민센터’와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8명(16.7%)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등’

을 선택한 응답자가 47명(41.6%), ‘읍·면·동 주민센터’를 선택한 응답자가 37명(32.7%),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14명(12.4%), ‘주민자치회 우위’를 선택한 응답자가 12명(10.6%)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12명(37.5%),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등’을 선택한 응답자가 11명(34.4%), ‘읍·면·동 주민센터’를 선택한 응답자가 5명(15.6%), ‘주민자치회 우위’를 선택한 응답자가 2명(6.3%)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신분 간에 응답 분포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과 주민자치회 위원보다 지역주민이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표 3-37〉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 관계성 인식 차이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χ^2/p
읍·면·동 주민센터	8 (16.7%)	37 (32.7%)	5 (15.6%)	22.215** (.005)
주민자치회 우위	11 (22.9%)	12 (10.6%)	2 (6.3%)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등	17 (35.4%)	47 (41.6%)	11 (34.4%)	
잘 모르겠음	8 (16.7%)	14 (12.4%)	12 (37.5%)	
기타	4 (8.3%)	3 (2.7%)	2 (6.3%)	
합계	48 (100.0%)	113 (100.0%)	32 (100.0%)	

*p<0.05, **p<0.01

‘우리 지역 주민자치회는 유관기관(지역협의회, 청년회 등)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응답이 84명(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로 인식하는 응답이 56명(29.0%),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로 인식하는 응답이 27명(14.0%), '잘 모르겠음' 21명(10.9%), 기타가 5명(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8〉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성 빈도 분석

구분	빈도	비율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	56	29.0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	84	43.5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	27	14.0
잘 모르겠음	21	10.9
기타	5	2.6
합계	193	100.0



[그림 3-7]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성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지역협의회, 청년회 등)과의 관계에 응답을 응답자에 대한 신분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24명(50.0%),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11명(22.9%),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7명(14.6%),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4명(8.3%)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47명(41.6%),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45명(39.8%),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14명(12.4%),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5명(4.4%)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15명(46.9%),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6명(18.8%),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와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5명(15.6%)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신분 간에 응답 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라는 인식을 보였다.

〈표 3-39〉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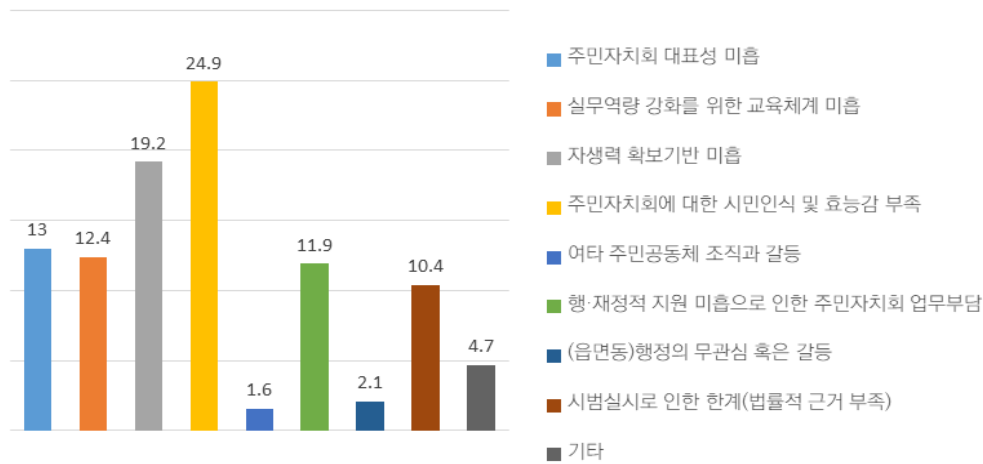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χ^2/p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	4 (8.3%)	47 (41.6%)	5 (15.6%)	29.023** (.000)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	24 (50.0%)	45 (39.8%)	15 (46.9%)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	7 (14.6%)	14 (12.4%)	6 (18.8%)	
잘 모르겠음	11 (22.9%)	5 (4.4%)	5 (15.6%)	
기타	2 (4.2%)	2 (1.8%)	1 (3.1%)	
합계	48 (100.0%)	113 (100.0%)	32 (100.0%)	

*p<0.05, **p<0.01

‘현재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효능감 부족’이 24.9%인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이 19.2%인 37명,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이 13.0%인 25명,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이 12.4%인 24명, ‘행·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이 11.9%인 23명,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법률적 근거 부족)’가 10.4%인 20명, 기타가 4.7%인 9명,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이 2.1%인 4명,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갈등’이 1.6%인 3명으로 나타났다.

〈표 3-40〉 주민자치회의 당면 문제점 빈도 분석

구분	빈도	비율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25	13.0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24	12.4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	37	19.2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효능감 부족	48	24.9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갈등	3	1.6
행·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	23	11.9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	4	2.1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법률적 근거 부족)	20	10.4
기타	9	4.7
합계	193	100.0



[그림 3-8] 주민자치회의 당면 문제점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의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응답을 신분별로 의견차이를 분석하였다. 공무원은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을 선택한 응답자가 17명(35.4%),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효능감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10명(20.8%),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법률적 근거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5명(10.4%),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을 선택한 응답자가 4명(8.3%),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갈등’을 선택한 응답자가 1명(2.1%)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효능감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28명(24.8%), ‘행·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을 선택한 응답자가 21명(18.6%),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을 선택한 응답자가 18명(15.9%),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을 선택한 응답자가 16명(14.2%),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법률적 근거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14명(12.4%),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을 선택한 응답자가 11명(9.7%),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갈등’을 선택한 응답자는 2명(1.8%),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

등'을 선택한 응답자가 1명(0.9%)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효능감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10명(31.3%),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을 선택한 응답자가 8명(25.0%),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을 선택한 응답자가 4명(12.5%),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과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3명(9.4%)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신분 간에 응답 분포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주민보다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확보기반이 미흡하다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1〉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당면 문제점 인식 차이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χ^2/p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4 (8.3%)	18 (15.9%)	3 (9.4%)	44.907** (.000)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5 (10.4%)	11 (9.7%)	8 (25.0%)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	17 (35.4%)	16 (14.2%)	4 (12.5%)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효능감 부족	10 (20.8%)	28 (24.8%)	10 (31.3%)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과 갈등	1 (2.1%)	2 (1.8%)	0 (0.0%)	
행·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 부담	0 (0.0%)	21 (18.6%)	1 (3.1%)	
(읍면동)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	5 (10.4%)	1 (0.9%)	3 (9.4%)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법률적 근거 부족)	5 (10.4%)	14 (12.4%)	1 (3.1%)	
기타	5 (10.4%)	2 (1.8%)	2 (6.3%)	
합계	48 (100.0%)	113 (100.0%)	32 (100.0%)	

*p<0.05, **p<0.01

‘주민자치회가 유관기관(지역협의회, 청년회 등)과 어떠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가 40.9%인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가 39.4%인 76명,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가 15.5%인 30명, ‘잘 모르겠음’ 2.1%인 4명, 기타 2.1%인 4명으로 나타났다.

〈표 3-42〉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 발전 방향 빈도 분석

구분	빈도	비율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	79	40.9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	76	39.4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	30	15.5
잘 모르겠음	4	2.1
기타	4	2.1
합계	193	100.0



[그림 3-9]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관계 발전 방향

다음으로 질문에 대한 의견을 신분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30명 (62.5%),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9명(18.8%),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6명(12.5%)로 나타났다.

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60명(53.1%),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30명(26.5%),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21명(18.6%)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16명(50.0%),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10명(31.3%),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3명(9.4%)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신분 간에 응답 분포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3〉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발전방향 인식 차이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χ^2/p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	9 (18.8%)	60 (53.1%)	10 (31.3%)	29.906** (.000)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	30 (62.5%)	30 (26.5%)	16 (50.0%)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	6 (12.5%)	21 (18.6%)	3 (9.4%)	
잘 모르겠음	1 (2.1%)	1 (0.9%)	2 (6.3%)	
기타	2 (4.2%)	1 (0.9%)	1 (3.1%)	
합계	48 (100.0%)	113 (100.0%)	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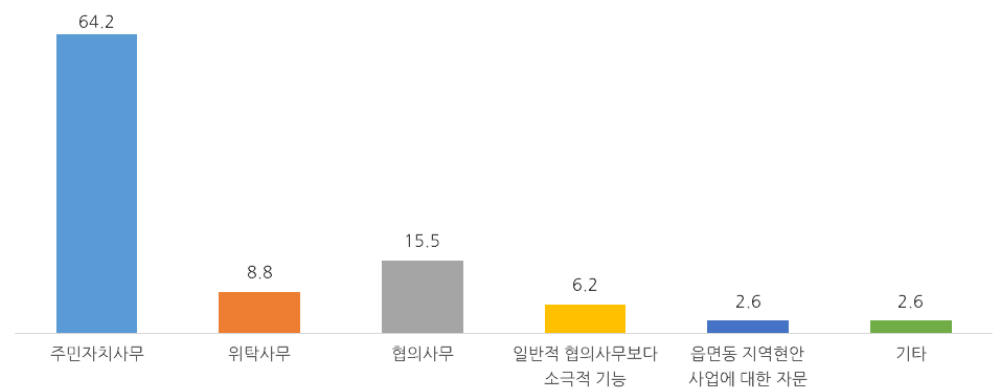
*p<0.05, **p<0.01

(2)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개선 인식 분석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능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사무’가 64.2%인 1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협의사무’가 15.5%인 30명, ‘위탁사무’가 8.8%인 17명, ‘일반적 협의사무보다는 소극적인 기능’이 6.2%인 12명, ‘읍면동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이 2.6%인 5명, ‘기타’가 2.6%인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4〉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 응답 빈도

구분	빈도	비율
주민자치사무	124	64.2
위탁사무	17	8.8
협의사무	30	15.5
일반적 협의사무보다는 소극적인 기능	12	6.2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	5	2.6
기타	5	2.6
합계	193	100.0



[그림 3-10]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 응답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개선 기능에 대한 의견을 신분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위탁사무’를 선택한 응답자가 30명(62.5%), ‘주민자치사무’를 선택한 응답자가 9명(18.8%), ‘협의사무’를 선택한 응답자가 6명(12.5%),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2명(4.2%), ‘일반적 협의사무보다는 소극적인 기능’을 선택한 응답자가 1명(2.1%)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사무’를 선택한 응답자가 60명(53.1%), ‘위탁사무’를 선택한 응답자가 30명(26.5%), ‘협의사무’를 선택한 응답자가 21명(18.6%), ‘일반적 협의사무보다는 소극적인 기능’과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1명(0.9%)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위탁사무’를 선택한 응답자가 16명(50.0%), ‘주민자치사무’를 선택한 응답자가 10명(31.3%), ‘협의사무’를 선택한 응답자가 3명(9.4%), ‘일반적 협의사무보다는 소극적인 기능’을 선택한 응답자가 2명(6.3%),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1명(3.1%)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신분 간에 응답 분포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업무를 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5〉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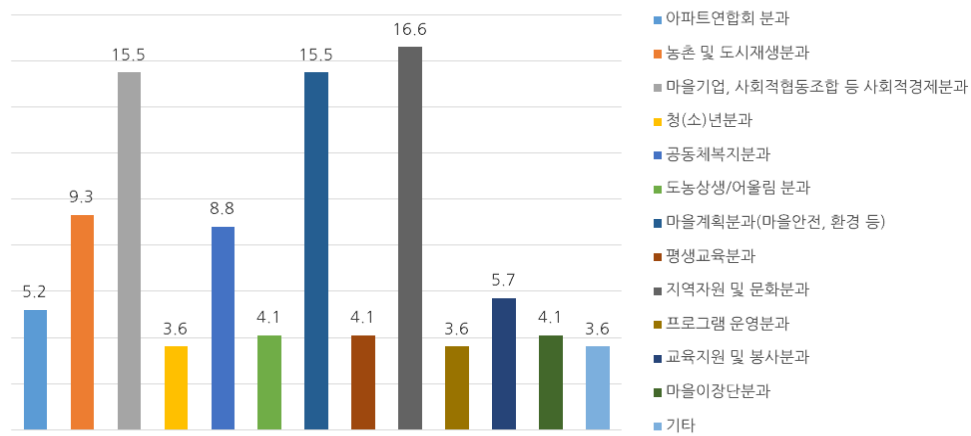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χ^2/p
주민자치사무	9 (18.8%)	60 (53.1%)	10 (31.3%)	29.906** (.000)
위탁사무	30 (62.5%)	30 (26.5%)	16 (50.0%)	
협약사무	6 (12.5%)	21 (18.6%)	3 (9.4%)	
일반적 협약사무보다는 소극적인 기능	1 (2.1%)	1 (0.9%)	2 (6.3%)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	2 (4.2%)	1 (0.9%)	1 (3.1%)	
합계	48 (100.0%)	113 (100.0%)	32 (100.0%)	

*p<0.05, **p<0.01

‘우리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 꼭 필요한 분과위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가 16.6%인 32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가 15.5%인 30명,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가 15.5%인 30명,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가 9.3%인 18명, ‘공동체복지분과’가 8.8%인 17명,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가 5.7%인 11명, ‘아파트연합회분과’가 5.2%인 10명, ‘도농상생/어울림 분과’가 4.1%인 8명, ‘평생교육분과’가 4.1%인 8명, ‘마을이장단분과’가 4.1%인 8명, 청(소)년분과가 3.6%인 7명, ‘프로그램 운영분과’가 3.6%인 7명, ‘기타’가 3.6%인 7명으로 나타났다.

〈표 3-46〉 주민자치회 필요 분과위원회 인식 빈도

구분	빈도	비율
아파트연합회 분과	10	5.2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18	9.3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	30	15.5
청(소)년분과	7	3.6
공동체복지분과	17	8.8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8	4.1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30	15.5
평생교육분과	8	4.1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32	16.6
프로그램 운영분과	7	3.6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11	5.7
마을이장단분과	8	4.1
기타	7	3.6
합계	193	100.0



[그림 3-11] 주민자치회 필요 분과위원회 인식

다음으로 지역의 필요 분과에 대한 응답을 시 지역, 군 지역으로 나누어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군 지역은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가 17.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가 16.0%,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가 14.7%,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가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 지역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가 16.9%,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16.1%,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15.3% 등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7〉 지역에 따른 주민자치회 필요 분과위원회 인식 차이

구분	군 지역	시 지역
아파트연합회 분과	3 (4.0%)	7 (5.9%)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11 (14.7%)	7 (5.9%)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	10 (13.3%)	20 (16.9%)
청(소)년분과	2 (2.7%)	5 (4.2%)
공동체복지분과	9 (12.0%)	8 (6.8%)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2 (2.7%)	6 (5.1%)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12 (16.0%)	18 (15.3%)
평생교육분과	4 (5.3%)	4 (3.4%)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13 (17.3%)	19 (16.1%)
프로그램 운영분과	2 (2.7%)	5 (4.2%)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3 (4.0%)	8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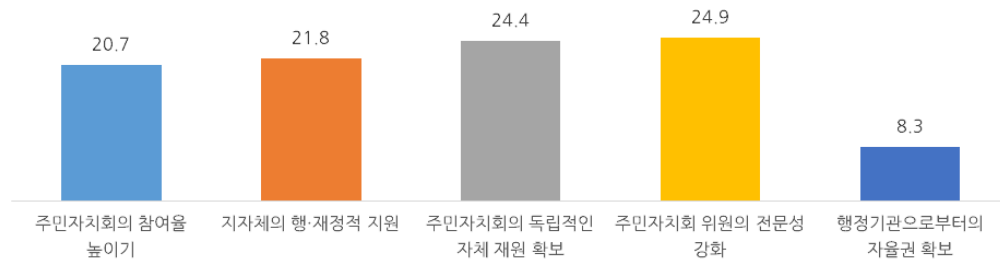
구분	군 지역	시 지역
마을이장단분과	2 (2.7%)	6 (5.1%)
기타	2 (2.7%)	5 (4.2%)
합계	75 (100.0%)	118 (100.0%)

(3) 충남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지원 인식 분석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24.9%인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확보’가 24.4%인 47명,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21.8%인 42명, ‘주민자치회의 참여율 높이기’가 20.7%인 40명,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자율권 확보’가 8.3%인 16명으로 나타났다.

〈표 3-48〉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개선방안

구분	빈도	비율
주민자치회의 참여율 높이기	40	20.7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42	21.8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 확보	47	24.4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48	24.9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자율권 확보	16	8.3
합계	193	100.0



[그림 3-12]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개선방안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신분으로 구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15명(31.3%), ‘주민자치회의 참여율 높이기’를 선택한 응답자가 10명(20.8%),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9명(18.8%),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자율권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8명(16.7%),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6명(12.5%)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33명(29.2%),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29명(25.7%),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26명(23.0%), ‘주민자치회의 참여율 높이기’를 선택한 응답자가 19명(16.8%),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자율권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6명(5.3%)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주민자치회의 참여율 높이기’를 선택한 응답자가 11명(34.4%),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7명(21.9%),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5명(15.6%),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자율권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2명(6.3%)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신분 간에 응답 분포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였다.

〈표 3-49〉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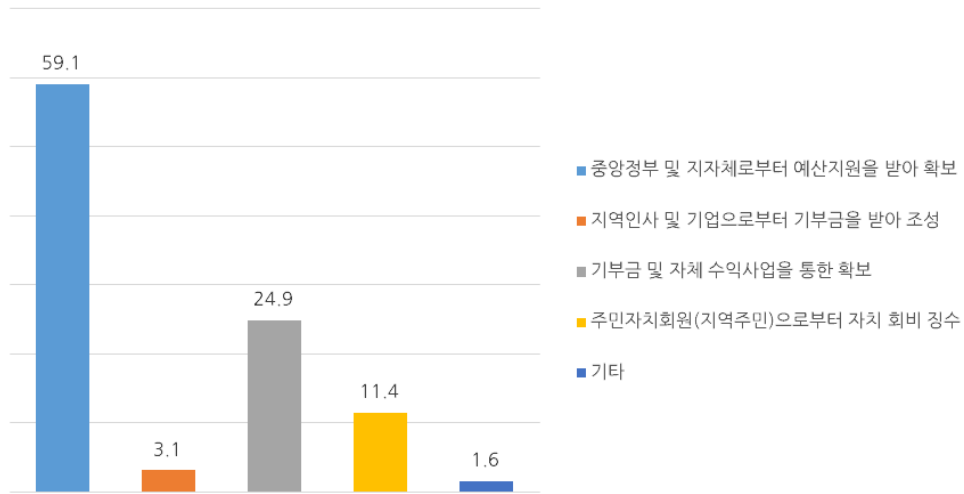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χ^2/p
주민자치회의 참여율 높이기	10 (20.8%)	19 (16.8%)	11 (34.4%)	15.598* (.049)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6 (12.5%)	29 (25.7%)	7 (21.9%)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 확보	9 (18.8%)	33 (29.2%)	5 (15.6%)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15 (31.3%)	26 (23.0%)	7 (21.9%)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자율권 확보	8 (16.7%)	6 (5.3%)	2 (6.3%)	
합계	48 (100.0%)	113 (100.0%)	32 (100.0%)	

*p<0.05, **p<0.01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확보’가 59.1%인 1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가 24.9%인 48명, ‘주민자치회원(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가 11.4%인 22명, ‘지역인사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조성’이 3.1%인 6명, ‘기타’가 1.6%인 3명으로 나타났다.

〈표 3-50〉 주민자치회 재정확보 방안

구분	빈도	비율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확보	114	59.1
지역인사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조성	6	3.1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	48	24.9
주민자치회원(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	22	11.4
기타	3	1.6
합계	193	100.0



[그림 3-13] 주민자치회 재정확보 방안

다음으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신분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22명(45.8%),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15명(31.3%), ‘주민자치회원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7명(14.6%), ‘지역인사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조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4명(8.3%)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80명(70.8%),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19명(16.8%), ‘주민자치회원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9명(8.0%), ‘지역인사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조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2명(1.8%)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19명(59.4%),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7명(21.9%), ‘주민자치회원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6명(18.8%)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신분 간에 응답 분포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주민보다 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해야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주민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확보해야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표 3-51〉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재정확보 방안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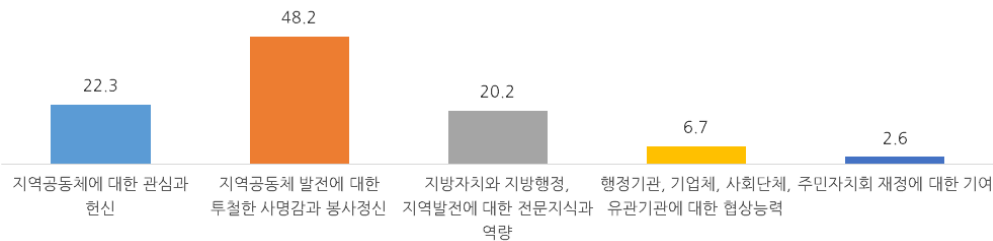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χ^2/p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확보	15 (31.3%)	80 (70.8%)	19 (59.4%)	31.564** (.000)
지역인사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조성	4 (8.3%)	2 (1.8%)	0 (0.0%)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	22 (45.8%)	19 (16.8%)	7 (21.9%)	
주민자치회원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	7 (14.6%)	9 (8.0%)	6 (18.8%)	
기타	0 (0.0%)	3 (2.7%)	0 (0.0%)	
합계	48 (100.0%)	113 (100.0%)	32 (100.0%)	

*p<0.05, **p<0.01

“주민자치회 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48.2%인 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22.3%인 43명,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지역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20.2%인 39명, ‘행정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유관기관에 대한 협상능력’이 6.7%인 13명, 주민자치회 재정에 대한 기여인 2.6%인 5명으로 나타났다.

〈표 3-52〉 주민자치회 위원의 중요 역량 및 덕목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헌신	43	22.3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93	48.2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지역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	39	20.2
행정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유관기관에 대한 협상능력	13	6.7
주민자치회 재정에 대한 기여	5	2.6
합계	1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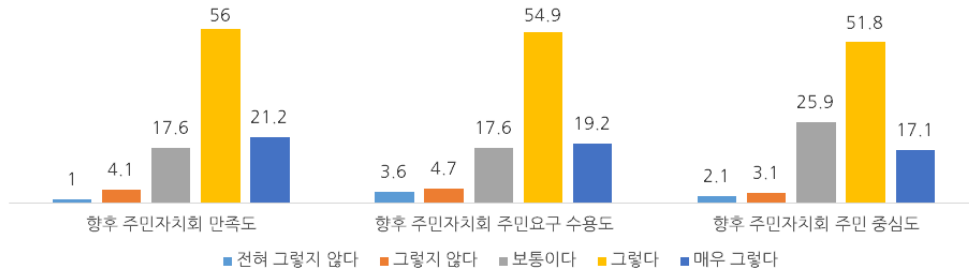
[그림 3-14] 주민자치회 위원의 중요 역량 및 덕목 인식

주민자치회 개선 후 인식에 대해 묻는 문항은 주민자치회 만족도, 주민자치회 주민요구 수용도, 주민자치회 주민 중심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귀하께서 원하는 형태의 주민자치회가 실시된다면, 주민자치회에 대해 만족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108명(56%), ‘매우 그렇다’ 41명(21.2%)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77.2%이고, ‘보통이다’가 34명인 17.6%, ‘그렇지 않다’ 8명(4.1%), ‘전혀 그렇지 않다’ 2명(1%) 등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났다. “귀하께서 원하는 모형의 주민자치회가 실시된다면, 주민요구가 행정에 잘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106명 (54.9%), ‘매우 그렇다’ 37명(19.2%)으로 긍정의견이 74.1%이고,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4명인 17.6%, ‘그렇지 않다’ 9명(4.7%)과

‘전혀 그렇지 않다’ 7명(3.6%) 등 부정 의견은 8.3%로 나타났다. “귀하께서 원하는 모형의 주민자치회가 실시된다면, 주민행정의 중심은 주민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100명(51.8%), ‘매우 그렇다’ 33명(17.1%)로 긍정의견이 68.9%이고,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50명인 25.9%, ‘그렇지 않다’ 6명(3.1%)과 ‘전혀 그렇지 않다’ 4명(2.1%) 등 부정 의견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 향후 주민자치회 만족도 예상 인식

구분		빈도	비율
향후 주민자치회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2	1.0
	그렇지 않다	8	4.1
	보통이다	34	17.6
	그렇다	108	56.0
	매우 그렇다	41	21.2
향후 주민자치회 주민요구 수용도	합계	193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7	3.6
	그렇지 않다	9	4.7
	보통이다	34	17.6
	그렇다	106	54.9
향후 주민자치회 주민 중심도	매우 그렇다	37	19.2
	합계	193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4	2.1
	그렇지 않다	6	3.1
	보통이다	50	25.9
	그렇다	100	51.8
	매우 그렇다	33	17.1
	합계	193	100.0%



[그림 3-15] 향후 주민자치회 만족도 예상 인식

”원하는 형태의 주민자치회가 실시된다면, 주민자치회에 대해 만족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신분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24명(50.0%),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1명(22.9%),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8명(16.7%),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3명(6.3%),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2명(4.2%)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68명(60.2%),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30명(26.5%),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3명(11.5%),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2명(1.8%)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6명(50.0%),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0명(31.3%),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3명(9.4%)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신분 간에 응답 분포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훨씬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54〉 신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만족도 인식 차이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χ^2/p
전혀 그렇지 않다	2 (4.2%)	0 (0.0%)	0 (0.0%)	21.701** (.006)
그렇지 않다	3 (6.3%)	2 (1.8%)	3 (9.4%)	
보통이다	11 (22.9%)	13 (11.5%)	10 (31.3%)	
그렇다	24 (50.0%)	68 (60.2%)	16 (50.0%)	
매우 그렇다	8 (16.7%)	30 (26.5%)	3 (9.4%)	
합계	48 (100.0%)	113 (100.0%)	32 (100.0%)	

*p<0.05, **p<0.01

3) 인식 분석 결과 종합

주민자치회 운영 및 개선 방안 도출과 관련한 인식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주민자치회의 제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에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행정의 주민 중심도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민자치회를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이나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내의 행정과 주민자치회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유관기관과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는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 등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공무원과 지역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라는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재 주민자치회의 당면한 문제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효능감 부족’,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주민보다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확보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모델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능에 대한 응답은 ‘주민자치사무’의 수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협의사무’, ‘위탁사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신분별로 다른 응답이 나타났다. 공무원과 지역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업무를 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과위원회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 지역으로 나누어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군 지역은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 지역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분과위원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확보’,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공무원과 지역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확보’,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 ‘주민자치회원(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주민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나 덕목과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헌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및 운영 방안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실태 분석 결과
2.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및 운영 방안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실태 분석 결과

1)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은 모두 주민자치회의 지원과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과 보조금 지급 등의 규정을 바탕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시군 조례는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시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방식과는 다르게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조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시군간의 차별성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구성 자격요건, 선발방식 등에서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 항목이 일부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군 조례에는 주민자치회의 역할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방의회, 유관기관, 타 주민관련 조직과의 역할 분담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은 향후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사무위탁, 협력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역할분담과 협력관계에 권한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주민자치회 구성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73.6%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추진된 최근 몇 년간 양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어낸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읍면동의 수가 많은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100%의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유형을 살펴보면 충남형보다 행안부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세배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구성되어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종료될 경우 시군 자체적 운영보다는 행안부형으로 다시 운영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작점은 동네자치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동안 동네자치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 상태로 동네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원이 종료된 이후 행안부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지원이 도, 시군으로 이원화되면서 관리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구조는 주민자치회의 충남도 의존 현상을 심화시키고 사업예산의 다변화, 중장기 수립계획 등 주민자치회 운영체계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간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 전환의 양적 확대를 위해 제공된 충청남도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은 제도 정착에 균일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일괄적 지원체제로 효율적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실태에서는 충청남도의 일반현황에서 나타난 추세들이 반영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0.32%에 불과해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높은 반면 주민자치회 구성 비율은 그보다는 낮은 남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가구주의 연령과 주민자치회 참여 연령은 60%의 참여비중이 높았으며, 충남도 내 주민의 직업구성은 농수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주민자치회 참여위원의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주민조직과의 겹침이 45.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주민자치회의 참여는 새로운 참여보다는 기존 주민조직에서 연계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3)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총회의 개최는 주민자치회 간의 차이는 있으나 월 1회이상 개최되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공모사업 역시 주민자치회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2.3건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역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단계별 운영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구조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업발굴 단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역량이나 특성에 대한 발전적 측면에서 한계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에 맞춘 위탁업무의 지원, 자체예산을 활용한 특성화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해 볼 수 있다.

4) 주민자치회 재정 운영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가장 필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재정에 관한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운영과정에서는 인력의 활용, 장소 마련, 회의비 등을 비롯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112개 주민자치회의의 평균 예산액은 50,352천원이나, 위원수당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운영중인 곳은 15개소였으며, 평균 15,206천원이 간사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들은 대부분 충남도, 시군의 지원이나 위탁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의 의존 경향이 크지만 이를 쉽게 개선할 방법은 없다. 시군별 주민자치회의의 사무 추진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회의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주민자치회의의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독자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충남도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만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만큼 시군의 재정적 역량 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정책과 표준조례안의 변경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지원해왔던 간사 등 전문인력의 지원은 더 이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및 운영 방안

1)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 개선 방향

현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2023년 제7차 표준조례를 발표하였다.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7차 표준조례에서 수정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담고 있으면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대표성·비례성의 강화, 지역의 운영 자율성 존중, 투명성 확보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앞선 타지역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치단체가 정부의 표준조례를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정부의 시범실시 사업으로 제도적 근거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안들을 반영하고 행정과의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현재 제시된 표준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자치단체에서 단순히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따른다면 지역의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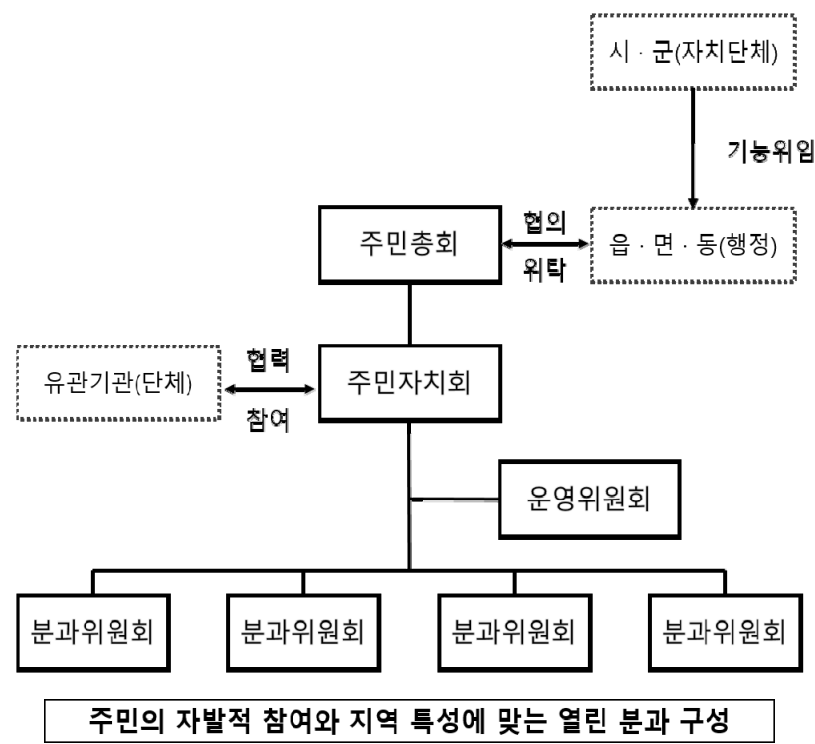
2) 주민자치회 구성 및 지원 개선 방향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주민자치회에 예산과 운영방식 관리 등의 지원을 통해 충청남도내 주민자치회의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성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발판으로 한 시군형 특화모델의 발전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소수로 이들 지역의 전환을 위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행정환경의 변화로 과거 5년간처럼 예산이나 관리등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민자치회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식을 통한 주민자치회 전환 유도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주민자치회 구성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의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처럼 주민자치회의 확산이 아닌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내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 단계에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모형이 소규모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동네자치의 주민자치회였다면 개선된 모델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는 개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크게 네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기존 모형은 마을공동체 중심이었으나, 개선된 모형에서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내부조직은 사무국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로 제안되었으며, 읍·면·동 행정과의 관계는 협치 중심에서 협의·위탁중심으로 변화를 제안하여 주민자치회

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협력기관이 시민단체였던 것에서 지역내의 유관기관(단체)로 변화하는 형태를 제안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활동 다양성과 협력·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표 4-1〉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주요 내용

	기존모형	개선모형(안)
구성원	마을공동체 중심	지역주민 중심
지원형태	사무국	운영위원회
협력형태	협치 중심	협약·위탁 중심
협력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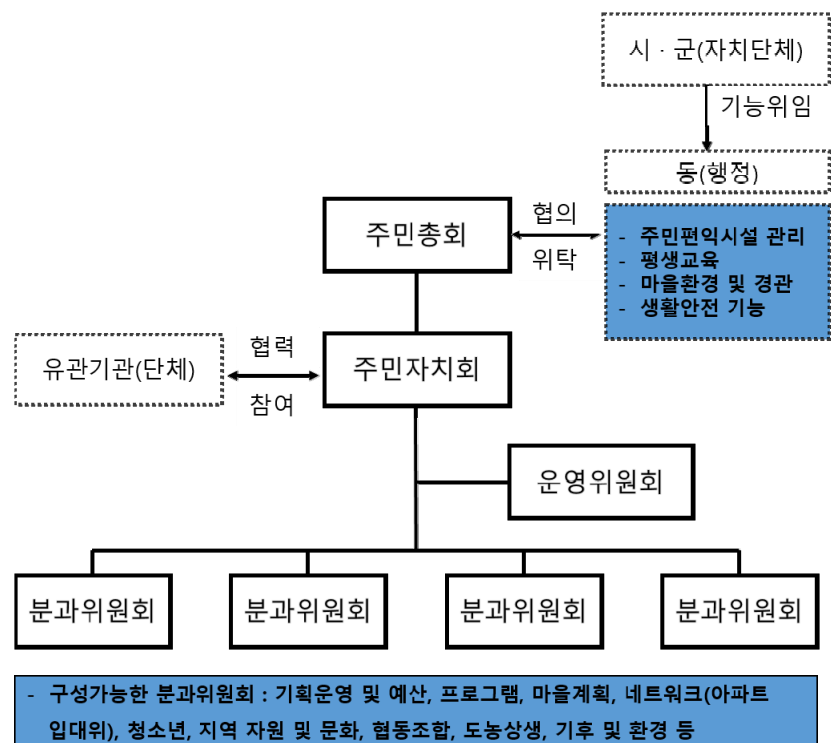
[그림 4-1]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기본 모형

다음으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기본모형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 모델은 충청도 시·군의 인구특성, 거주특성, 주민자치회 위원 겸직 특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인식, 수행사무 등을 반영하여 도시형, 혼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였다. 세부 모델들은 자치단체, 행정(읍·면·동)의 기능위임, 협의·위탁을 반영한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추진이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표 4-2〉 충남형 주민자치회 세부모형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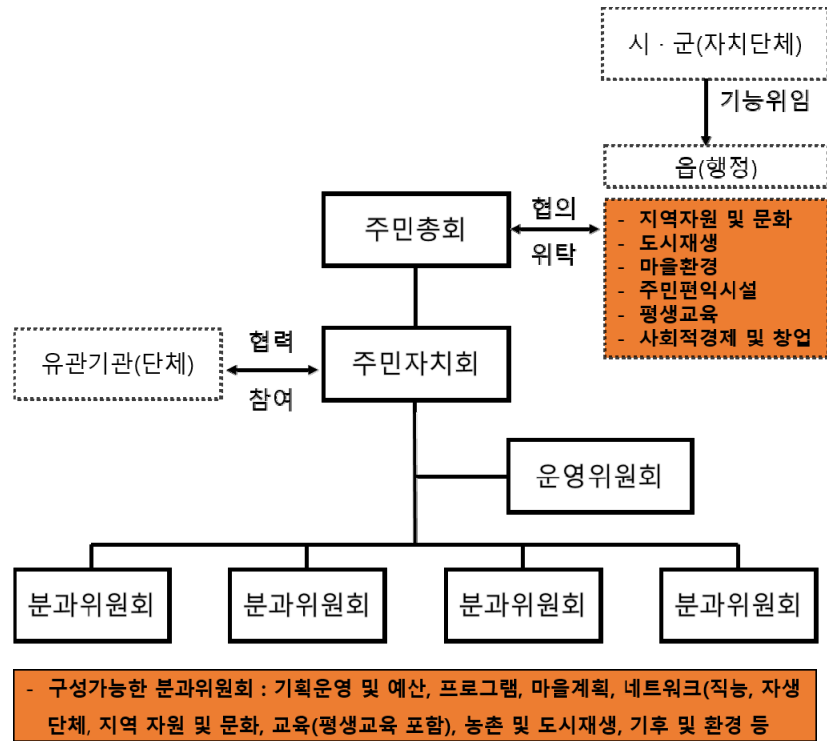
	도시형(동 행정)	혼합형(읍 행정)	농촌형(면 행정)
행정 주요기능	- 일반행정 및 민원 사회복지 및 맞춤형 복지 주민편의시설 평생교육 마을환경 및 경관 공동주택관리 생활안전	- 일반행정 및 민원 사회복지 및 맞춤형 복지 지역자원 및 문화 도시재생 마을환경 주민편의 사회적경제 및 창업	- 일반행정 및 민원 사회복지 및 맞춤형 복지 주민편의시설 농촌 및 도시재생 평생교육 마을환경
협의사무	평생교육 사회문제 발굴 주민편의시설	도시재생 사회문제 발굴 마을관리(편의시설)	평생교육 사회문제 발굴 주민편의시설
위탁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총회 공동체 공간 운영 마을축제 기획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총회 도시재생활성화 공간 공동체 공간 및 공원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총회 도서관 운영 마을축제 기획
분과 위원회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네트워크(아파트입대위) 청소년 지역자원 및 문화 협동조합 도농상생 기후 및 환경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네트워크(직능,자생단체) 지역자원 및 문화 교육(평생교육 포함) 농촌 및 도시재생 기후 및 환경	기획운영 및 예산 프로그램 마을계획 네트워크(이장단) 지역자원 및 문화 마을기업(사회적경제) 복지 청소년 기후 및 환경

도시형 세부모델은 시군에서 도시지역(동 행정)으로 기능위임 후 동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 협의·위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요 협의·위탁 업무로는 주민편의시설 관리, 평생교육, 마을 환경 및 경관, 생활안전(자율방범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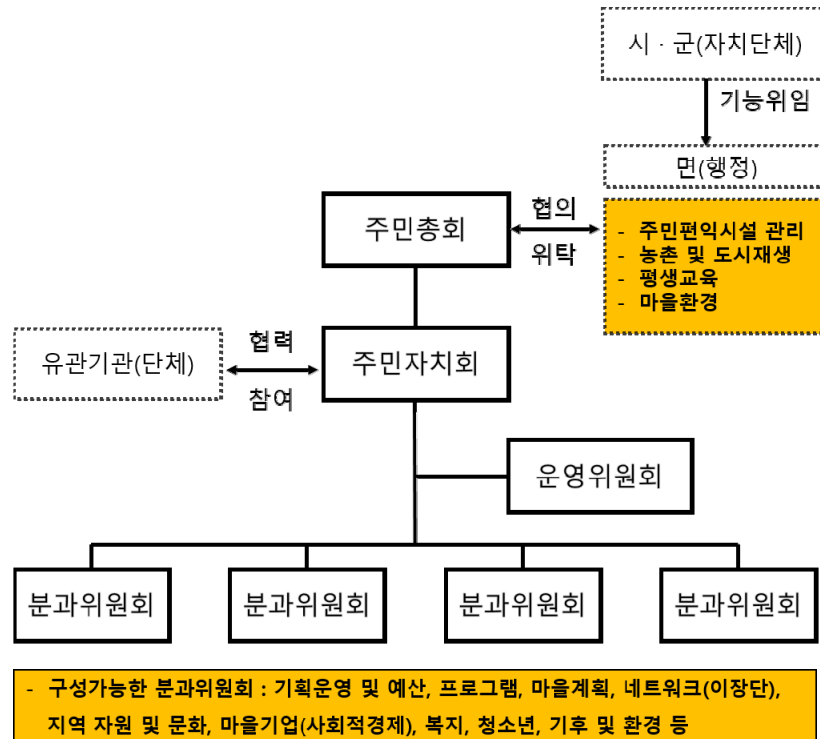
[그림 4-2]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도시형 모형

혼합형 세부모델은 시군에서 도·농복합지역(읍 행정)으로 기능위임 후 읍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 협의·위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요 협의·위탁 업무: 지역자원 및 문화, 도시재생, 마을환경, 주민편의시설 관리, 평생교육, 사회적 경제 및 창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혼합형 모형

농촌형 세부모델은 시군에서 농촌지역(면 행정)으로 기능위임 후 면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 협의·위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요 협의·위탁 업무로는 주민편익시설 관리, 농촌 및 도시재생, 평생교육, 마을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4]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농촌형 모형

‘충남형 주민자치회’ 개선 모델은 실태분석과 함께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환 요구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그 동안의 지원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의 획일적인 확산과 양적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민자치회의 구성에는 이르렀으나, 실제 운영과 집행에는 한계를 드러낸 점을 반영하여 구성을 위한 기본모델, 운영을 위한 세부모델로 제시하였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기구로 참여자만이 아닌 지역주민, 지역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참여시킬 수 있는 장으로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제시된 시군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세대, 직종 등을 반영한 개방적 참여통로를 확대하고,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장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용될 수 방향성 마련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에서는 개선 모델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확대 역할에서 벗어나 행안부형, 충남형이 아닌 지역 특화형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으로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군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방향성 전환이 함께 요구된다.

3)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시군 주민자치회에서 수행중인 사무들은 대부분 주민의 호응도가 높거나 지역내의 현안의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겸직, 타 유관단체와의 관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미처 파악되지 못한 중복성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수행사무는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성 사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 분야나 규모를 조정하고 실제 주민의 요구도, 관심도가 높은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들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사 사업들의 소관 부처, 부서가 상이하여 사업의 효과성, 파급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비교를 위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평가가 위주가 아닌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주민자치회 재정 지원 개선

(1) 주민자치회간 차별적 운영 지원

충남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은 선정된 주민자치회에 일률적인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의 집행률은 낮아지고 위원 수당등의 지출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역량과 관련이 있다.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사업비에 대한 공모 방식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회의 사업예산 중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으며 일회성 공모에 그치고 있어 지속성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 받기도 하며 주민세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지원 방식들은 규모도 작고 주민자치회의 고유 예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공모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예산 지원기간을 다년화 하면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주민자치회 통합지원체계 마련

충남도내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요구사항중 하나는 주민자치회 간사의 운영과 이를 위한 비용지원이다. 주민자치회들은 정부의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간사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15개 주민자치회가 간사를 운영중이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수준이 향상되면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커졌다. 하지만 표준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회 수행사무에 대한 정산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인력의 확보는

더욱 필요하다. 현재의 주민자치회 지원은 재정적 지원과 이를 통한 인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 및 관리체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현재의 간접지원 체계에서 직접지원체제로 전환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정산 업무는 쉽지 않은 업무일 것이며, 현재도 전담인력이 없는 다수의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도움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영역에 대한 외부 조력자 협력, 주민자치회 내부 고용이 쉽지 않다면 통합체계에서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시군별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많고, 주민자치회 전담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력, 사회복지요원 등 가용한 인원과 예산을 파악하여 시군과 함께 예산 지원과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의미와 역할을 감안한다면 관주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우려될 수 있으나, 주민자치회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통합적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주민자치회 역량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실태와 분석을 통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하는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호응을 받고 있지만, 구성과 운영, 활성화에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어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비교적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 조례에는 주민자치회의 역할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향후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사무위탁, 협력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역할분담과 협력관계에 권한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되었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73.6%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추진된 최근 몇 년간 양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어내었으나, 충남형보다 행안부형의 운영이 두드러지며,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이후 시군 자체적 운영보다는 행안부형으로 다시 운영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실태에서는 충청남도의 일반현황에서 나타난 추세들이 반영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0.32%에 불과해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총회 운영, 공모사업 수행,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자치회 별로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업발굴 단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역량이나 특성에 대한 발전적 측면에서 한계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가장 필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재정적 부분의 실태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평균 예산액은 50,352천원이나, 위원수당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운영중인 곳은 15개소였으며, 평균 15,206천원이 간사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개선 방안 도출 인식 분석 결과에서는 주민들은 현재 주민자치회의 제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에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행정의 주민 중심도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민자치회의 당면한 문제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효능감 부족’,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등이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모델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능에 대한 응답은 ‘주민자치사무’의 수행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협의사무’, ‘위탁사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과위원회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분과위원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확보’,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확보’,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 ‘주민자치회원(지역주민) 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 개선,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재정적 운영지원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 개선에서는 변경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과 개정과정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은 기존 동네자치 중심의 모델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관기관, 주민, 주민자치회 위원간의 논의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도시형, 농촌형, 혼합형 등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유사 주민지원 사업의 실태파악을 통한 사업의 조정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정적 운영지원 개선을 위해 차별적 운영과 통합적 관리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2. 정책제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시군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주민자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참여와 자치 경험, 네트워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은 관리자 역할이 아닌 촉매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상향식 관점에서 행정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제도들이 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주민자치회가 지역내의 다른 다양한 주민조직과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의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닌 협력과 협의를 통한 사무의 배분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 모형을 제안하였다.

정책의 변화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민자치회의 확산이 5년간 이루어진 것처럼 확산이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현근(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 김수람·박재만·오미덕·윤희철(2019).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 김필두(201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흥주(2022). 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남재걸. (2015). 트리플 헬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을 활용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작용 분석: 경기도 A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4), 125-159.
- 박영득, 정희옥, 정수현. (2019). 지방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개선방안: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분석. 지역과 세계, 43(2).
- 박정윤(2021). 주민자치회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서인석, 윤병섭. (2018).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유형화와 특성 분석: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행정자치부 성공모형의 탐색적 적용. 한국행정연구, 27(1).
- 신미애(2018).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9(6).
- 심익섭(201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

- 정연구, 26(4), 57-84.
- 안현찬·구아영(2018).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상과 추진전략. 서울연구원.
- 윤영근·정희옥·박영득·장승진·김은경·이재묵(2018). 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이병렬·이종수. (201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157-180.
- 이용환·이현우·염일열·김진덕·가선영(2019).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최근열(2015).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개최지.
- 최상현(201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5(1).
- 하태영·손정혁·오지은(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5(2).
- 하혜영(2020).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황의식·김수석·김규호·최지선·김태영. (2019).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록



부록 1. 시·군별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천안시의 인구수와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의 인구는 2018년 646,075명에서 2022년 657,559명으로 5년간 1.78% 증가하였다. 천안시의 세대수는 2018년 273,851세대에서 2022년 302,893세대로 5년간 10.61% 증가하였다.

〈부록. 표-1〉 천안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646,075	273,851	2.36	329,079	316,996	1.04
2019	652,258	281,333	2.32	332,447	319,811	1.04
2020	658,808	291,425	2.26	336,221	322,587	1.04
2021	658,486	297,987	2.21	336,612	321,874	1.05
2022	657,559	302,893	2.17	336,716	320,843	1.0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공주시의 인구수는 감소하며,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주시의 인구는 2018년 107,581명에서 2022년 102,571명으로 5년간 4.66% 감소하였다. 공주시의 세대수는 2018년 50,134세대에서 2022년 52,394세대로 5년간 4.51% 증가하였다.

〈부록. 표-2〉 공주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107,581	50,134	2.15	53,979	53,602	1.01
2019	106,474	50,519	2.11	53,343	53,131	1.00
2020	104,545	50,966	2.05	52,297	52,248	1.00
2021	103,145	51,580	2.00	51,459	51,686	1.00
2022	102,571	52,394	1.96	51,231	51,340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보령시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령시의 인구는 2018년 101,990명에서 2022년 97,157명으로 5년간 4.74% 감소하였다. 보령시의 세대수는 2018년 47,705세대에서 2022년 49,694세대로 5년간 4.17% 증가하였다.

〈부록. 표-3〉 보령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101,990	47,705	2.14	51,580	50,410	1.02
2019	101,114	48,324	2.09	51,146	49,968	1.02
2020	100,229	49,361	2.03	50,807	49,422	1.03
2021	98,408	49,419	1.99	49,933	48,475	1.03
2022	97,157	49,694	1.96	49,237	47,920	1.0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아산시의 인구수와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산시의 인구는 2018년 312,822명에서 2022년 334,539명으로 5년간 6.94% 증가하였다. 아산시의 세대수는 2018년 132,159세대에서 2022년 152,249세대로 5년간 15.2% 증가하였다.

〈부록. 표-4〉 아산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312,822	132,159	2.37	161,546	151,276	1.07
2019	314,395	135,159	2.33	162,694	151,701	1.07
2020	316,129	139,580	2.26	164,115	152,014	1.08
2021	324,580	145,869	2.23	168,881	155,699	1.08
2022	334,539	152,249	2.20	174,333	160,206	1.0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서산시의 인구수와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산시의 인구는 2018년 174,162명에서 2022년 176,413명으로 5년간 1.29% 증가하였다. 서산시의 세대수는 2018년 75,091세대에서 2022년 82,433세대로 5년간 9.78% 증가하였다.

〈부록. 표-5〉 서산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174,162	75,091	2.32	89,793	84,369	1.06
2019	174,690	76,748	2.28	90,348	84,342	1.07
2020	175,591	79,103	2.22	91,399	84,192	1.09
2021	176,645	81,407	2.17	92,122	84,523	1.09
2022	176,413	82,433	2.14	92,011	84,402	1.0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논산시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논산시의 인구는 2018년 120,230명에서 2022년 112,617명으로 5년간 6.33% 감소하였다. 논산시의 세대수는 2018년 56,729세대에서 2022년 58,137세대로 5년간 2.48% 증가하였다.

〈부록. 표-6〉 논산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120,230	56,729	2.12	60,113	60,117	1.00
2019	118,842	57,196	2.08	59,406	59,436	1.00
2020	116,675	57,826	2.02	58,316	58,359	1.00
2021	114,483	58,048	1.97	57,147	57,336	1.00
2022	112,617	58,137	1.94	56,237	56,380	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계룡시의 인구와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룡시의 인구는 2018년 43,731명에서 2022년 44,475명으로 5년간 1.7% 증가하였다. 계룡시의 세대수는 2018년 15,860세대에서 2022년 18,051세대로 5년간 13.81% 증가하였다.

〈부록. 표-7〉 계룡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43,731	15,860	2.76	21,674	22,057	0.98
2019	42,971	15,967	2.69	21,338	21,633	0.99
2020	42,822	16,531	2.59	21,343	21,479	0.99
2021	43,331	17,152	2.53	21,563	21,768	0.99
2022	44,475	18,051	2.46	22,166	22,309	0.9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당진시의 인구와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진시의 인구는 2018년 167,770명에서 2022년 168,253명으로 5년간 0.29% 증가하였다. 당진시의 세대수는 2018년 75,540세대에서 2022년 81,199세대로 5년간 7.49% 증가하였다.

〈부록. 표-8〉 당진시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167,770	75,540	2.22	88,423	79,347	1.11
2019	167,042	76,162	2.19	88,299	78,743	1.12
2020	166,249	77,661	2.14	88,206	78,043	1.13
2021	167,092	79,526	2.10	88,952	78,140	1.14
2022	168,253	81,199	2.07	89,606	78,647	1.1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금산군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산군의 인구는 2018년 53,222명에서 2022년 50,092명으로 5년간 5.88% 감소하였다. 금산군의 세대수는 2018년 25,588세대에서 2022년 26,180세대로 5년간 2.31% 증가하였다.

〈부록. 표-9〉 금산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53,222	25,588	2.08	26,836	26,386	1.02
2019	52,257	25,521	2.05	26,309	25,948	1.01
2020	51,413	25,897	1.99	25,928	25,485	1.02
2021	50,477	25,893	1.95	25,466	25,011	1.02
2022	50,092	26,180	1.91	25,315	24,777	1.0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부여군의 인구수와 세대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여군의 인구는 2018년 68,078명에서 2022년 62,343명으로 5년간 8.42% 감소하였다. 부여군의 세대수는 2018년 33,193세대에서 2022년 32,945세대로 5년간 0.75% 감소하였다.

〈부록. 표-10〉 부여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68,078	33,193	2.05	33,721	34,357	0.98
2019	66,740	33,341	2.00	33,049	33,691	0.98
2020	65,354	33,562	1.95	32,374	32,980	0.98
2021	63,774	33,257	1.92	31,634	32,140	0.98
2022	62,343	32,945	1.89	30,970	31,373	0.9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서천군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천군의 인구는 2018년 53,922명에서 2022년 49,964명으로 5년간 7.34% 감소하였다. 서천군의 세대수는 2018년 26,433세대에서 2022년 26,666세대로 5년간 0.88% 증가하였다.

〈부록. 표-11〉 서천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53,922	26,433	2.04	26,620	27,302	0.98
2019	52,805	26,410	2.00	26,110	26,695	0.98
2020	51,866	26,794	1.94	25,614	26,252	0.98
2021	50,745	26,646	1.90	25,081	25,664	0.98
2022	49,964	26,666	1.87	24,709	25,255	0.98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청양군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양군의 인구는 2018년 32,296명에서 2022년 30,266명으로 5년간 6.29% 감소하였다. 청양군의 세대수는 2018년 16,274세대에서 2022년 16,567세대로 5년간 1.8% 증가하였다.

〈부록. 표-12〉 청양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32,296	16,274	1.98	16,271	16,025	1.02
2019	31,717	16,296	1.95	15,997	15,720	1.02
2020	30,948	16,378	1.89	15,691	15,257	1.03
2021	30,440	16,426	1.85	15,472	14,968	1.03
2022	30,266	16,567	1.83	15,421	14,845	1.0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홍성군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의 인구는 2018년 101,082명에서 2022년 98,068명으로 5년간 2.98% 감소하였다. 홍성군의 세대수는 2018년 45,358세대에서 2022년 46,871세대로 5년간 3.34% 증가하였다.

〈부록. 표-13〉 홍성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101,082	45,358	2.23	50,244	50,838	0.99
2019	100,423	45,920	2.19	49,931	50,492	0.99
2020	100,102	46,588	2.15	49,796	50,306	0.99
2021	99,324	46,746	2.12	49,437	49,887	0.99
2022	98,068	46,871	2.09	48,835	49,233	0.9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예산군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군의 인구는 2018년 80,083명에서 2022년 77,385명으로 5년간 3.37% 감소하였다. 예산군의 세대수는 2018년 38,060세대에서 2022년 39,605세대로 5년간 4.06% 증가하였다.

〈부록. 표-14〉 예산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80,083	38,060	2.10	40,171	39,912	1.01
2019	79,238	38,290	2.07	39,806	39,432	1.01
2020	78,084	38,946	2.00	39,156	38,928	1.01
2021	76,801	39,051	1.97	38,574	38,227	1.01
2022	77,385	39,605	1.95	38,848	38,537	1.0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태안군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안군의 인구는 2018년 63,238명에서 2022년 61,335명으로 5년간 3.01% 감소하였다. 태안군의 세대수는 2018년 31,636세대에서 2022년 33,209세대로 5년간 4.97% 증가하였다.

〈부록. 표-15〉 태안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

연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2018	63,238	31,636	2.00	31,959	31,279	1.02
2019	62,743	32,069	1.96	31,715	31,028	1.02
2020	62,214	32,535	1.91	31,371	30,843	1.02
2021	61,526	32,908	1.87	31,033	30,493	1.02
2022	61,335	33,209	1.85	30,997	30,338	1.0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

부록 2. 충청남도 시·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분석

1. 총칙 분석

제1장 총칙은 주민자치회 기본 구성과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지역 내 위상을 알 수 있다. 조례는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운영원칙(제3조), 설치 등(제4조), 기능(제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에서 주민자치회를 정의하면서 주민의 대표성을 명시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10개 시·군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4개 시·군에서는 주민으로 정의하고 서천군에서는 따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았다. 제4조의 분회의 규정은 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근린자치를 위한 생활반경을 고려할 때 주민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예산군에서만 이를 명시하고 있다.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됨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대표: 천안,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주민: 아산, 서산, 계룡, 당진 - 정의 없음: 서천
제3조 (운영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됨
제4조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회 설치 조항: 예산
제5조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수행,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됨

2.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정수(제6조), 위원의 자격(제7조), 위원의 선정(제9조), 위원선정위원회(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제11조), 감사(제13조), 분과위원회(제14조), 주민총회(제14조의2),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제14조의3), 운영(제15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크게 위원 구성 및 선정, 운영구조, 운영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1)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위원 구성과 선정에 관한 내용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는 개정된 표준조례에서 상한선을 삭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현재 도내 조례에서는 홍성군이 하한선 없이 30명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20명 이상 30명 이하 3개, 20명 이상 50명 이하 5개 20명 이상 60명 이하 1개, 30명 이상 60명 이하 5개 시·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제7조 위원의 자격은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2023 표준조례 개정안에서 위원의 자격으로 연령은 18세 이상,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도내 조례에서는 주민등록, 사업장 등록(기관, 학교), 사업장 종사자(기관, 학교), 영주체류 외국인, 피선거권이 없는자, 지방의회 의원, 사전교육 이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제8조 권한은 2023표준 조례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으며, 시·군 조례 중 11개 시·군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추후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제9조 위원의 선정에서 2023 표준조례에서 위원의 기본 자격으로 교육 이수시간을 명기된 것을 삭제하였으며, 위원 추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항목도 삭제되었다.

시·군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내 의무교육 이수 및 참여를 명기한 시·군은 4개였으며, 사전의무교육을 명기한 시·군은 11개였다. 위원 추천운영 위원회를 운영중인 시·군은 8개였으며, 태안군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는 2023 표준조례안에서 위원 추천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 읍·면·동장의 위촉에 의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조례에서 위원선정위원회가 반영된 시·군은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등 6개 시·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주민자치회 위원은 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30명 이상: 홍성 - 20명 이상 30명 이하: 공주, 논산, 당진 - 20명 이상 50명 이하: 보령, 아산, 서산, 계룡, 금산 - 20명 이상 60명 이하: 청양 - 30명 이상 50명 이하: 천안, 부여, 서천, 예산, 태안
제7조 (위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18세 이상 - 19세: 보령, 금산 - 연령 규정없음: 당진 · (표준조례)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 주민등록, 사업장 등록(기관, 학교), 사업장 종사자(기관, 학교), 영주체류 외 국인, 피선거권이 없는자, 지방의회 의원, 사전교육 이수자 등으로 제한
제8조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삭제 - 권한 조항 있음: 천안, 보령, 계룡, 금산, - 권한 조항 없음: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제9조 (위원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위원 신청자 사전 교육 삭제 - 의무교육 이수 및 참여: 천안, 공주, 논산, 청양, - 사전 의무교육 이수: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표준조례) 위원 추천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삭제

조항	주요 분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운영위원회 운영: 공주, 보령, 아산, 계룡, 금산, 부여, 홍성, 예산 - 별도의 운영 세칙: 태안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위원선정위원회 규정 신설 -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이 위촉 - 위원선정위원회 운영: 천안, 서산, 논산, 당진, 서천, 청양,

2) 주민자치회 운영구조

다음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회장, 감사 등 운영구조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모든 시·군에서 1명의 주민자치회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부회장은 1~2명을 두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시·군(3개)도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장은 대부분 시·군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있으며, 투표 2개, 규정이 없는 곳 3개도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기는 2년인 곳이 9개로 가장 많았으며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시·군은 6개 였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장의 연임은 경험 축적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은 있을수 있지만, 내부의 권한을 독점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장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연임 횟수를 제한하거나 연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었으나, 규정이 명기 되지 않은 시·군은 5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제12조 감사 또는 사무국 항목은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기존 표준조례에서 이를 명시한 바, 도내 15개 시·군 모두에서 감사, 사무국장, 총무 등 보조인력과 사무국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3 표준조례안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제13조 감사 항목에서는 감사 수, 외부전문가 포함 여부,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및 제출 여부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 1~2인의 감사를 두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었다.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모든 조례에서 1명(서천 규정없음) ·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없음: 천안, 부여, 서천 - 1명: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 2명: 공주,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선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선: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홍성, 예산, 태안 - 투표: 당진, 청양 - 규정없음: 공주, 부여, 서천 ·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천안, 아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홍성, 예산, 태안 - 규정없음: 공주, 보령, 서산, 금산, 서천, 청양 · 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홍성, 예산, 태안 - 2회: 천안 - 규정없음: 공주, 보령, 금산, 서천, 청양
제12조 (간사 또는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관련 내용 삭제 - 모든 조례에서 간사, 사무국장, 총무 등의 보조인력에 대한 조항 포함
제13조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청양, 예산, 태안 - 2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 외부전문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있음: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규정 없음: 공주 ·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공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있음: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규정 없음: 공주

3) 주민자치회 운영방식

다음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자치계획, 운영 등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14조 분과위원회에서는 모든 조례에서 분과위원회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분과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지역(천안시), 선출(당진시, 부여군, 청양군)을 제외하고는 분과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었다. 분과구성과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4개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규정이 없는 곳은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이었고, 나머지 시·군은 운영세칙, 시행규칙 등을 통해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명기하였다.

제14조의2 주민총회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2023 표준조례안에서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년 1회이상 개최에서 개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내 조례에서는 대부분 1회 이상을 명기하고 있었다.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은 모든 시·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표준조례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항목 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안, 마을복지, 교육자치 및 도시재생 등에 관한 계획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당진시는 주민공론화가 필요한 주민공모사업 계획안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명기하였다.

제15조 운영에서는 대부분의 시·군이 월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14조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서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포함 · 분과위원장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없음: 천안 - 호선: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선출: 당진, 부여, 청양 · 분과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이상: 천안 - 규정없음: 공주, 보령, 서천, 태안 - 운영세칙: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 시행규칙: 당진
제14조의2 (주민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주민총회 년 1회 이상 개최 → 개최할 수 있음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천안, 계룡 - 1회 이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의결 정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규약: 천안, - 운영세칙: 계룡, 청양 - 참석위원 과반수: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주민총회 결정사항 중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 주민공론화가 필요한 주민공모사업 계획안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됨
제15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분기 1회: 서산 - 운영세칙: 논산

3.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3장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위원의 의무(제16조), 정치적 중립(제17조), 위원의 임기(제18조), 위원의 대우(제19조), 위원의 해촉(제20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회의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을 모든 시·군이 명시하고 있었으며, 주민자치회의의 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시·군이 9개, 연임 규정이 없는 시·군은 7개로 분석되었다. 위원의 해촉 역시 모든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다.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16조 (위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됨 - 조항 없음: 서천
제17조 (정치적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됨
제18조 (위원의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서 2년 - 3년: 청양 · 위원의 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없음: 보령, 서산, 논산, 당진, 청양, 홍성, 예산
제19조 (위원의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됨 - 무보수 명예직
제20조 (위원의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됨

4.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2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22조), 정보공개(제22조의2)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해당 조항은 대부분의 시·군 조례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2023 표준조례안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명기된 시·군은 9개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군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주민자치 교육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었다.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는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체(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명기하였다. 제22조의 2 정보공개는 2023 표준조례안에서 신설된 항목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정보공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법인, 단체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 항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포함됨 - 조항없음: 천안, 아산, 계룡, 당진, 서천, 태안 · (표준조례) 주민자치 교육 지원 규정 신설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협의체(협의회) 구성 가능 명시 - 천안 예외
제22조의2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 신설

5. 보칙

제5장 보칙은 감독(제23조), 보험(제24조), 운영세칙(제25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독,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따른 보험 가입, 조례에 포함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세칙의 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례에서 해당 내용을 보칙에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제23조 감독에서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령 절차 준수 항목이 신설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행정의 주민자치회 감독 관련 조항은 있으나, 법령 절차 준수 항목은 없었다.

조항	주요 분석 내용
제23조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주민자치회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령 절차 준수 항목 신설 - 모든 조례에 행정의 주민자치회 감독 관련 조항은 있으나, 법령 절차 준수 항목은 없음
제24조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조례에 보험 관련 조항 내용 포함
제25조 (운영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조례)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의 공개 항목 신설 - 운영세칙: 공주, 보령,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시행규칙: 아산, 서산, - 조항없음: 천안

부록 3. 설문조사지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설문조사

No.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요인인 주민자치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성 마련을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및 운영 방안』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개선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10월

■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장창석 전문연구원 (연락처: 041-840-1233 / 이메일: mp0323@cni.re.kr)

임다정 연구원 (연락처: 041-840-1170 / 이메일: dajung@cni.re.kr)

1. 귀하께서는 현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현 주민자치회 제도 하에서 주민 요구가 행정에 잘 반영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께서는 현 주민자치회 제도 하에서 주민행정의 중심이 주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를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께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자치회는 유관기관(지역협의회, 청년회 등)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0

7. 귀하께서는 현재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위한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주민자치회 대표성 미흡 | 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미흡 |
| ③ 자생력 확보기반 미흡 | ④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인식 및 효능감 부족(생업 등으로 인해 활동 저조) |
| ⑤ 여타 주민공동체 조직(이·통장, 아파트입대, 상인회 등)과 갈등 | ⑥ 행·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업무부담 |
| ⑦ 읍면동 행정의 무관심 혹은 갈등 | ⑧ 시범실시로 인한 한계(법률적 근거 부족) |
| ⑨ 기 타 () | |

■ 다음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의 개선 및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가 유관기관(지역협의회, 청년회 등)과 어떠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대표단체 | ②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과 대등한 관계 |
| ③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의 지원단체 | ④ 잘 모르겠음 |
| ⑤ 기타() | |

9.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업무(주민자치사무)
-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처리(위탁사무)
- ③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협의사무)
- ④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일반적 협의사무보다는 소극적인 기능)
- ⑤ 읍면동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
- ⑥ 기타()

10. 귀하께서는 우리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 꼭 필요한 분과위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아파트연합회(공동체 주거 등) 분과 | ② 농촌 및 도시재생분과 |
| ③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분과(경제분과 포함) | ④ 청(소)년분과 |
| ⑤ 공동체복지분과 | ⑥ 도농상생/어울림 분과 |

- ⑦ 마을계획분과(마을안전, 환경 등) ⑧ 평생교육분과
⑨ 지역자원 및 문화분과(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⑩ 프로그램 운영분과
⑪ 교육지원 및 봉사분과 ⑫ 마을이장단분과
⑬ 기타 ()

10-2. 귀하께서 생각하신 필요 분과위원회 응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자치회의의 참여율 높이기
- ②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 ③ 주민자치회의의 독립적인 자체 재원 확보
-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교육 활성화)
- ⑤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자율권 확보

■ 다음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확보
- ② 지역인사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조성
- ③ 기부금 및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확보
- ④ 주민자치회원(지역주민)으로부터 자치 회비 징수
- ⑤ 기타()

13. 귀하께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헌신
- ②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 ③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지역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

집필자

연구책임자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
참여연구진 임다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3-19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2023년 12월 31일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041-840-1114(대표)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ISBN 978-89-6124-663-7

© 2023.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